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2학년도

국책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결정 영향요인 변화 분석

-미군기지이전사업 효과와

기반환보도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Decision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National Projec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USFK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and the base return press release]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김 형 호

국책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결정 영향요인 변화 분석
-미군기지이전사업 효과와
기반환보도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Decision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National Projec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USFK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and the base return press release]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김 형 호

국책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결정 영향요인 변화 분석
-미군기지이전사업 효과와
기반환보도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Decision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National Projec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USFK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and the base return press release]

지도 김 장 엽 교수

이 논문을 공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김 형 호

김형호의 공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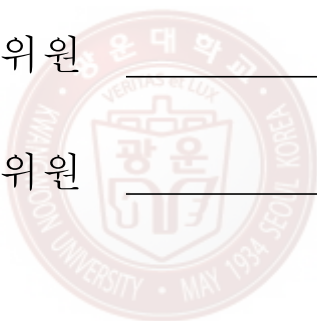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일

감사의 글

만학의 어려움은 익히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해야 할 공부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박사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어느 한쪽도 치우칠 수 없는 외줄타기 같은 삶을 요구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 붙잡아준 것은 무엇보다도 교수님과 수학을 함께 하는 동료 선후배분들이었다.

우선 논문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안내해주신 김장엽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논문을 지도해주신 손채봉 교수님, 정석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천한 논문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주신 이정만 박사님과 강소영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아들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손녀, 손자를 봐주시고 언제나 격려해주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인이라는 직책에 얽매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항상 곁에서 돌봐주셔서 안심시켜주는 형과 형수님, 그리고 동생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걷고 있는 우리 딸딸 김예림, 든든한 우리 장남 김태규에게 다시 한 번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든든한 정신적 동반자이자 지지자인 아내 석연숙 여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논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 12. 25.

김형호 올림

국문요약

국책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결정 영향요인 변화 분석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02년 양국이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내용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k Partnership Plan)과 2004년 용산지역 기지를 이전하는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정책이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었고,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책사업이나 용산 공원조성 사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연구논문 또한 협상이나 협의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사업 진행 측면에서 분석하고 진행 방향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이 많았다. 평택미군기지로 이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 중 기지반환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를 분석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사이의 관심도 차이를 분석해보고 주민의 정보 노출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변경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지 연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기지반환에 대한 연도별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하는 종단연구와 이를 통해 현시점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의 인식차를 분석한 횡단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공여와 반환은 병력의 수보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근간이 되는 YRP 및 LPP 협정에 의해 대규모 기지반환과 새로운 기지의 공여가 이루어졌다.

보도자료와 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자기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결정자들은 한미동맹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은 경제혜택과 국민권리보장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시 국민권리측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활용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수혜자인 주민에게 설문을 통하여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미건설 기술 습득이나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 확인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수혜자의 의견 노출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견이 변동(약 10% 이상 의견 변동)하는 항목이 61%라는 것을 볼 때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정책결정자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용을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 끊임없이 의견을 탐색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의사표현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

구자가 제안한 정책수혜자(주민)과의 소통이 상호 소통이 가능한 체계의 필요성을 통하여 국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본 논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에게 주요한 국책사업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온 국민 관심사인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조성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구·수원·광주 공항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과 대구지역 군부대 및 미군부대 통합이전과 같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사업초기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 Key Words : 미군기지이전, 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정책결정자, 정책수혜자, 주한미군



ABSTRACT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Decision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National Projects

Kim, Hyoung Ho

Dept.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e relocation of U.S. military bases is a large-scale national project after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agreed to relocate U.S. bas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Yongsan Garrison and the 2nd U.S. Division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and stable conditions for U.S. troops in Korea. The project was carried out through the Joint Land Management Plan (LPP), which was the merger and closure of U.S. Forces Korea bases in 2002, and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which was the plan to relocate bases in Yongsan in 2004.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ese national projects is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tantly consider whether their policies

have been well explained to residents or the people who are policy beneficiaries and their intentions have been well reflected.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such efforts in other national projects or Yongsan Park construction projects.

There were also many research papers on the USFK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to be studied here, which analyzed in terms of negotiation or consultation, analyzed in terms of project progress, and presented directions. At the end of the relocation to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we will analyze the key words through a press release related to the return of the base during th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interest between policymakers and policy beneficiaries and study whether policymakers change their thoughts according to residents' information exposure to respect residents' intentions and promote policies.

The flow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to analyze annual press releases on base return and a cross-sectional study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policymakers and policy beneficiaries at this time.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onation and return of U.S. military bases in Korea have been changed by policy decisions rather than the number of troops. Crucially, large-scale base return and new base contributions were made under the YRP and LPP

agreements, which are the basis of th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As a result of analyzing press releases and articles, it was found that it was important for residents to reflect their intention. Policymakers promoted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benefits and national rights guarantees.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aspect of people's rights when making policy decisions,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using the decision support system are needed.

Through a survey of residents, who are policy beneficiari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need to strengthen publicity by confirming the acquisition of unconstruction technology or environmental cleanup projects that they thought were of low valu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olicymakers chang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residents, given that 61% of policymakers changed their opinions according to the exposure of policymakers chang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residents.

In this regard, it was fou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tantly explore and share opinions in decision-making through the acceptance of opinions from residents. This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can be said to require parts of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bove all from the standpoint of expressing opinions between policymakers and

residents. We look forward to the role of this paper as a study in which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in which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need for a system in which communication with policy beneficiaries (residents) proposed by the researcher is possible.

We still have major national projects scattered. A full review is required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by accepting research results in the process of large-scale projects such as the Yongsan Park construction project, the relocation of Daegu, Suwon, and Gwangju airports, and the integrated relocation of military and U.S. troops in Daegu.

- Key Words : USFK Base Relocation, YRP, LPP, Textmining, Topic modeling, policy maker decision, policy beneficiary, USFK

차 례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v
차 례	viii
그림 차례	xi
표 차례	xiii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5
3. 논문의 구성	7
II. 관련문헌 고찰	9
1.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관련 연구 검토	9
2. 기존 주한미군 기지이전 연구 검토	10
3.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관련 연구	15
4. 관련문헌 연구 시사점	16
5.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가치분석 연구 분석 틀	18
III.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배경	21
1. 주한미군 주둔 및 미군기지이전사업 검토	21
1.1 주한미군 주둔	21
1.2 주한미군기지의 공여와 반환	27
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검토	32

2.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검토	32
2.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갈등관리 검토	44
3. 주한미군이전사업 보도자료와 가치분석 연구	46
3.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보도자료	46
3.2. 경제사회적 가치 분석 요소	46
VI.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49
1.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 활용	49
2. 주한미군기지이전 보도자료 텍스트 마이닝 분석	50
2.1. 기사자료 분석 결과(2003 - 2020년 기지반환까지)	51
2.2. 보도자료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59
2.3. 보도자료 분석이 주는 시사점	64
3.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반환기사자료 토픽 모델링 분석	65
3.1. 기사자료 분석 결과	67
3.2. 기사자료 분석이 주는 시사점	72
3.3. '22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 보도자료 및 기사자료 분석	73
3.4. 미군기지 반환 보도자료 및 기사자료 LDA 토픽 분석	77
4. 소결론	82
V.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가치 차이 분석	84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사회 가치 분석	84
1.1.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	84
1.2. 기지 반환에 따른 가치	85
1.3. 용산공원조성에 따른 가치	86
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사회적 인식조사 분석	88

2.1. 정부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주요논문 항목 설계	88
2.2. 경제사회적 가치요소 설문항목 도출	90
2.3. 정책수혜자와 정책결정자 의식변화 가설	94
2.4. 정책결정자 설문결과(1차)	96
2.5. 주민설문 결과	109
2.6. 정책결정자(1차)-정책수혜자 설문결과 분석	130
2.7. 정책결정자 설문결과(2차)	136
2.8. 정책결정자(2차)-정책수혜자 설문결과 분석	152
3. 정책수혜자와 정책결정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169
4. 소결론	185
VI. 국책사업의 효과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89
1. 주민의견 고려 작성	189
2. 홍보 부족분야 대국민설득 강화	189
3. 국책사업 설문 추진	191
4.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 구축	192
VII. 결 론	200
1. 결론 및 제언	20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202
참고문헌	203

그림 차례

그림1.연구 주제 도출	6
그림2.텍스트 마이닝 연구 수행방법	18
그림3.경제 사회적 효과 분석 틀	19
그림4.연구 수행방법	20
그림5.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	34
그림6.주한미군 재배치 및 공여부지 조정	36
그림7.연도별 갈등관리와 투자금액 상관비	45
그림8.넷마이너 4.0 분석화면	60
그림9.정부 보도자료의 핵심단어 그래프	62
그림10.정부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	63
그림11.정부 보도자료의 워드 네트워크	63
그림12.빅카인즈 서비스 개념	66
그림13.LDA 산정식	67
그림14.연도별 신문기사 발표 건수	67
그림15.LDA 토픽 모델링	78
그림16.기지반환관련 정부 보도자료 경과	82
그림17.정책결정자 경제적 효과 1차 설문결과	169
그림18.정책결정자 사회적 효과 1차 설문결과	169
그림19.정책결정자 핵심이슈 1차 설문 결과	170
그림20.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분석	171
그림21.정책수혜자 사회적 효과 분석	172
그림22.정책수혜자 핵심 이슈 분석	173
그림23.정책수혜자 남녀간 설문결과 분석	175

그림24.정책결정자(1차)- 정책수혜자(주민) 경제적 효과 분석	178
그림25.정책결정자(1차)- 정책수혜자(주민) 사회적 효과 분석	178
그림26.정책결정자(1차)- 정책수혜자(주민) 핵심이슈 분석	178
그림27.정책결정자(2차) 경제적 효과 분석	179
그림28.정책결정자(2차) 사회적 효과 분석	179
그림29.정책결정자(2차) 핵심 이슈 분석	181
그림30.정책결정자(2차) 정책수혜자(주민) 경제적 효과 분석	182
그림31.정책결정자(2차) 정책수혜자(주민) 사회적 효과 분석	183
그림32.정책결정자(2차) 정책수혜자(주민) 핵심이슈 분석	183



표 차 례

표1.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관련 논문	10
표2.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논문	11
표3.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관련 논문	15
표4.주한미군 병력현황과 공여지 면적 현황	30
표5.주한미군 기지 반환 보도자료 반환시기 및 대상 기지	46
표6.2007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52
표7.2010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53
표8.2019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55
표9.2020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57
표10.연도별 정부 보도자료의 핵심 단어	59
표11.정부 보도자료의 핵심 단어 빈도수	61
표12.2007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68
표13.2010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69
표14.2019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70
표15.2020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71
표16.2022년 정부 보도자료 핵심단어 분석	74
표17.2022년 보도자료 연관어 및 핵심단어 빈도수 분석	75
표18.2022년 보도자료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76
표19.코사인 유사도 평균, 분산, 예측 정확도, 일관성 측정 값 정의	79
표20.코사인 유사도 평균, 분산, 예측 정확도, 일관성 측정 결과	79
표21.토픽 수 결정을 위한 T 점수	80
표22.연도별 토픽 분석결과	81
표23.설문항목 설계	88

표24.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경제사회적 효과 설문지 항목	91
표25.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핵심이슈 설문지 항목	93
표26.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의식 변화 가설	94
표27. 미군기지 반환 절차	97
표28. 정책결정자 설문 집단 일반적 특성 분석	98
표29. 정책결정자 경제적 효과 항목분석결과	100
표30. 정책결정자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101
표31. 정책결정자 사회적-정책적 효과 분석결과	102
표32. 정책결정자 오염정화 이슈 설문 분석	103
표33. 정책결정자 기지반환 이슈 설문 분석	104
표34. 정책결정자 용산공원 조성 이슈 설문 분석	105
표35. 정책결정자 남녀 집단통계 분석	106
표36. 정책수혜자 설문 집단 일반특징 분석	110
표37. 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표준편차 분석	111
표38. 정책수혜자 사회적-정책적 효과 분석	112
표39. 정책수혜자 오염정화 이슈 설문 분석	113
표40. 정책수혜자 기지반환 이슈 설문 분석	114
표41. 정책수혜자 기지반환 이슈 설문 분석	115
표42. 정책수혜자 용산공원 조성 핵심이슈 설문 분석(서울대경기)	116
표43. 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남녀 설문 분석	117
표44. 정책수혜자 사회적 효과 남녀 설문 분석	118
표45. 정책수혜자 핵심 이슈 남녀 설문 표준편차 분석	120
표46. 정책수혜자 경제사회효과 연령별 설문 분석	120
표47. 정책수혜자 경제효과 연령별 설문 분석	122
표48. 정책수혜자 사회효과 연령별 설문 분석	125
표49. 정책수혜자 핵심이슈 연령별 설문 분석	127

표50.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 경제사회적효과 설문 분석	132
표51.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 핵심이슈 설문 분석	135
표52.정책결정자 2차 설문지	136
표53.정책결정자 2차 설문 집단의 일반적 특성 분석	140
표54.정책결정자 경제사회적효과 2차 설문 분석	142
표55.정책결정자 경제적효과 2차 설문 분석	143
표56.정책결정자 사회적효과 2차 설문 분석	144
표57.정책결정자 오염정화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146
표58.정책결정자 미군기지반환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147
표59.정책결정자 용산공원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149
표60.정책결정자 2차 설문 평균 분석	149
표61.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집단간 2차 설문 분석	155
표62.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집단간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157
표63.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①집단 2차 설문 분석	160
표64.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②집단 2차 설문 분석	161
표65.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③집단 2차 설문 분석	162
표66.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④집단 2차 설문 분석	162
표67.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⑥집단 2차 설문 분석	163
표68.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⑦집단 2차 설문 분석	163
표69.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⑧집단 2차 설문 분석	164
표70.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집단별 설문 분석	166
표71.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집단별 설문 분석	184
표72.설문결과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186
표73.캠프 하야리아 항공사진	190
표74.폴리스 활용	194
표75.의사 표현 발전방안 제언	19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수혜자의 의견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어떻게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의문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맴돌던 의문이었다. 여기에서 정책결정자는 국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책 대안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방안을 택하는 행정 기관의 동적인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수혜자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기지 이전과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정책이 결정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과거 연구에서도 정책결정자로 불리는 정책입안자(Policymaker)와 정책수혜자(Beneficiary policy)입장에서 검토한 논문들이 일부 있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자들이 작성한 정부 보도자료와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신문기사들의 핵심 토픽들을 분석하여 어떤 주제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연구하겠다. 정책수혜자와 정책결정자는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의 의견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수혜자(주민)의 의견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의문점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그동안 이루어져 온 정부 보도자료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고

찰해보고 이를 통해 두 그룹의 의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설계하고 그 차이점을 다시금 정책결정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의식의 변화가 있을지 연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상당수 마무리되고 있다. 한미 연합 전력과 유사시 증원군의 지휘통제본부 역할을 하는 한미 연합사가 이전이 완료된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등으로의 이전도 '25년이면 마무리가 예상된다. 미군기지의 평택 등으로 이전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미군 이전평택지원법」도 '26년에는 목적을 달성하고 폐기될 것이다.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군기지 주둔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와 주민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신문기사에서 서로 어떤 핵심단어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 알아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미군기지이전은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에게 어떤 차이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핵심단어들이 나타내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던져보고 차이점과 의견을 연구해본다. 이와 더불어 미군기지 공여 및 반환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반환 시기 정책결정자들은 주민들에게 보도자료 등의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자 했는지 이를 통해서 정책결정자가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해보고,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시해보았다.

한국에는 노무현 정부의 취임을 전후하여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전개되었고, 국력신장에 따라 '상호 대등한 한미동맹'을 원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보다 강력한 한국의 지위에 맞는 성숙한 관계 정립을 원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보다 동등한 관계를 원했고, 미국은 자국 군인들이 보다 나은 복지와 근무여건을 원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미군기지

를 이전하는 사업인 2004년 YRP(Yongsan Relocation Plan 이하 YRP), LPP(Land Partnership Plan, 이하 LPP)개정 협정을 바탕으로 용산기지 이전과 경기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재배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주한미군 감축, 군사 임무전환, 연합 군사능력 강화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들이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22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군기지 이사지원은 연합사 이전부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연합사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용산기지 반환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기존 주한미군 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도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RAND연구소에 따르면 핵 분쟁이 발생하면 그 공격으로 첫해에만 한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이러한 손실은 최소 10년 동안 연장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장기 재건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합니다[1].’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미가 공통적으로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주둔 배경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정부정책 변화로부터 기지 공여까지 정리해보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미군기지 반환시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효과와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민들과 정책결정자간의 관심도 차이와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은 정부 정책을 결정할 시 주민들

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국책사업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조성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구·수원·광주 공항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 대구 지역 군부대 및 미군부대 통합이전과 같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통해서 향후 유사 분야에 적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수용과정과 정책의사 결정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군의 한반도 들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미군기지가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 병력과 주둔지별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병력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국과의 교역 시작으로부터 전반적인 미군기지의 성립단계에서 중간, 그리고 완료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돌아보고, 더불어 양국의 기지반환에 대한 사항도 알아보겠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대국민 보고인 보도자료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기사 분석사이트를 통한 신문기사 분석과 보도자료의 빈도분석을 통한 관계도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비교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국민들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제시하겠다. 또한 각 정부 보도자료에서 어떠한 점들이 주요 토픽이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주요 경제사회적 가치와 핵심이슈를 두 그룹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주민)로 구분되는 그룹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정책결정자는 정책수혜자(주민)인 국민들의 인식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지이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의 가치요소를 분석하고, 또한 정책수혜자(주민)인 미군기지가 있었던 평택, 동두천 등 주민과 서울 주민들의 가치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자인 미군기지이전 담당자들의 가치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서로의 차이점에서 출발하여 정

책결정자가 정책수혜자(주민)의 경제사회적 가치요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책결정자들이 좀 더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연구 흐름은 아래<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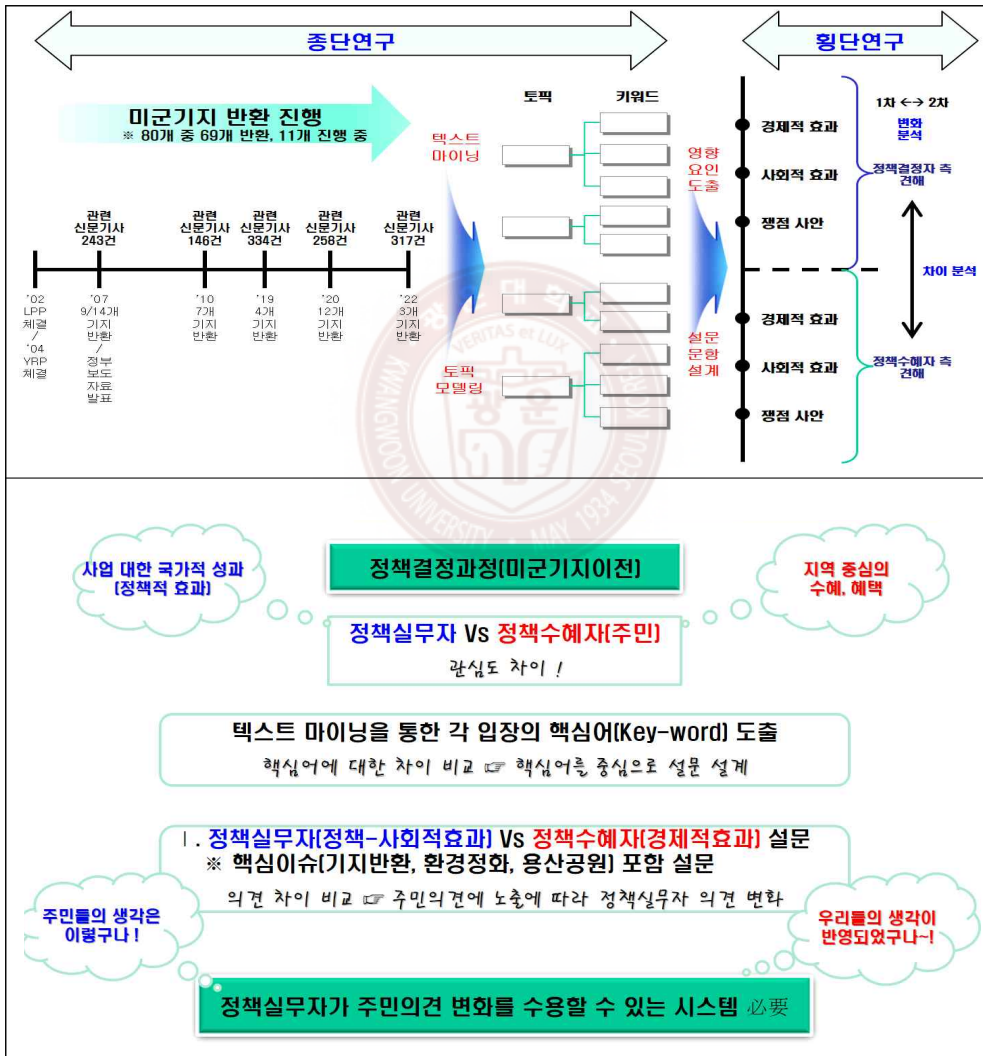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주제 도출

3. 논문의 구성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결정자가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반환하기 시작한 미군반환기지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와 이에 따른 신문기사를 통하여 핵심단어를 분석하였다.

발표 시기별 주요 토픽을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실질적 정책수혜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기지이전 반환 정책결정자와의 설문을 통하여 핵심가치와 핵심이슈의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정책수혜자의 정보노출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여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결정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이러한 제안된 연구 방향이 정착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성하였다.

이러한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논문 연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논문의 구성을 서술하였고,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관련 문헌 고찰로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관련 연구, 주한미군 기지이전 연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 연구, 관련문헌의 연구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배경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 및 미군기지 이전사업 검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검토, 미군기지 이전사업 보도자료와 가치를 분석 연구하였다. 4장에서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로 미군기지 반환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이전 보도자료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사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LDA토픽 분석을 통해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5장

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가치요소와 핵심이슈에 대해 평택, 동두천, 서울(용산 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사회가치요소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자(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비교 분석하여 2차에 설문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 변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정책수혜자(국민)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통하여 제시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가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책수혜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의 텍스트 마이닝과 LDA 토픽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문헌 고찰

1.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관련 연구 검토

이러한 연구에 앞서 근원적으로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라는 용어와 정책수혜자(政策受惠者) 용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수많은 논문은 정치외교학이나 행정학, 정책학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논문들 중 정책결정에 따른 수혜자들 입장에서 다룬 논문들이 일부 있었으나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 통합문화이용권 정책에 대해 정책결정자인 사업집행부서와 국회보좌진,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시한 논문[2]이거나 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와 정책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논문[3] 등이 있다. 정책결정자의 보도자료 발표시기 신문기사의 영향과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와 수혜자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가치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한 논문들은 제한적이었다. 이렇듯 연구에 제한적인 이유는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자에 대해 설문이나 인터뷰가 제한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책수혜자 측면에서는 한국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인식 차이를 통해 살펴본 논문[4]도 있었다. 그 밖에 연구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의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향에 참여확대방안에 대해 기술한 정책연구도 있었다[5]. 이러한 논문을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미군기지 반환 및 활용관련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모두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상당히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언론보도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수혜자가 정보 노출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관련 논문

주제	제 목	주요 연구내용
정책 결정자와 정책 수혜자간 인식차 연구	한국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이동관, 2018)	정책 공급자와 정책수혜자 간의 도시 농업 관련 정책의 인식 차이에 관해 연구
	통합문화이용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책결정자와 수혜자의 관점 비교를 중심으로(이상미, 2015)	통합문화이용권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사업집행부서와 주민들 사이의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녹색/기후기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 수립:정책수혜자와 정책수립자 통합관점(김선훈 등, 2020)	녹색/기후기술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두 그룹의 의견을 듣고 통합관점에서 기술

2. 기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연구 검토

기존 연구들은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 때문인지 대부분이 정치·외교 측면에서 기술되어 있고, 주한미군 기지 관련 연구들 또한, 미군기지 건설, 환경문제, 미군기지이전 협상, 도시공학 측면이나 주한미군 건설계약 등과 연계되어 연구되었다. 미군 기지를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거나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사업효과와 연계한 사회경제적 가치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연구는 소수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헌 중 주한미군에 관해 다룬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 배경부터 공여라는 형태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게 된 역사적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200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 배경과 사업에 대해 많은 논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주한미군기지 건설과 관련되거나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연구하거나 주한미군기지 핵심이

수인 환경문제와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한미군기지 건설 또는 이전, 환경과 관련된 논문을 아래와 같이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표2.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논문

주제	제 목	주요 연구내용
주한 미군 기지 건설	주한미군 공사 수행을 위한 FED(Far East District) 프로세스 분석에 관한 연구(황재홍 외, 2010)	FED 공사를 중심으로 공정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 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김경수, 2010)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미군 공여지 활용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및 제시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지연요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이경한, 2013)	기부 대 양여사업 전 단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비관지정학적 해석(윤철기, 2015)	주한미군기지 이전 배경과 이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정학적 비판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남석 외, 2016)	반환된 주한미군기지-하야리아-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FED공사의 리스크 요인이 사업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호빈, 2018)	미군이전사업의 공통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구조방정식 기반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관리 영향 분석
	주한미군 신축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중점 관리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홍덕기, 2018)	한국과 미국의 건설공사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해외공사 수행자료 제공
	군사시설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도제, 2018)	군사시설이전을 갈등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한미군기지사업 등에 대한 인식 조사 제시
	주한미군 주거계획을 위한 입지 및 단지계획 선호도 분석(이희원, 2019)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 숙소에 대한 주거계획 수립방향 제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김용찬, 2019)	주한미군기지지이전사업단 등 이전사업 참여 기관의, 생산기록 분류현황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기준표 탐색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현물지원 시설사업계약에 대한 소고 (박성완, 201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간 현물지원 시설사업의 계약 등에 대한 검토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미군기지이전이 도시 인구와 산업에 미친 영향(박상진 & 김형규, 2020)	미군기지이전이 인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제시
	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강소영외, 2021)	캠프 하야리아, 캐슬 등 반환기지 주변 지가 등의 변화에 대한 연구
미군 기지 이전 협상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이수형 외, 2004)	주한미군 재배치(미군기지이전사업)를 통한 관리해야할 안보 딜레마 제시
	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최아진, 2010)	미군재배치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시
	駐韓美軍基地 移轉 協商에 관한 研究(이균철, 2011)	기지이전관련 배경 및 해외사례와 더불어 기지이전 협상전략을 제시
	한국 군(軍) 갈등 이슈의 생애주기 분석(박민형, 2019)	주한 미군기지 등 생애주기+로 탐색 분석을 진행, 발생과 소멸 단계 분석
	지역사회와 미군기지 : 평택을 중심으로(강미, 2020)	평택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시각 제시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한·미 간 쟁점, 해소 과정, 시사점 (우정범 외, 2020)	미군기지이전사업관련 한·미간의 주요 쟁점과 해소과정 시사점 제시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전략 (박민형, 2021)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략을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 전략제시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평택 주한미군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김수우 외, 2021)	웹과 SNS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한 평택지역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미군 기지 환경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최승환, 1997)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에 대한 법리 제시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피해에 관한 고찰(박기주, 2009)	미군반환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 SOFA환경조항 개정에 대한 보완제시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환경관리 정책(박용하 외, 2017)	이전된 군부대 부지에 대한 오염실태와 환경관리 대책 제시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의 영향(이남석, 2020)	하야리아 반환기지 주변 아파트의 헤도닉 가격모형에 의한 변화 제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연구(강채영, 2021)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제시
법학	2007년 주한미군기지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채영근, 2007)	미 반환기지에 대한 반환 합의에 대한 문제점(국회 비준 등)과 향후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주한미군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병효, 2007)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중심으로 이전과정과 법령상의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 제시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심영규, 2008)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가능한 규칙에 대한 접근
용산공원 / 용산기지	공원 위상에 따른 이용자 지불용의액 차이에 대한 연구(김성욱, 이미홍, 2012)	용산공원 조성주체에 따른 환경편익에 대한 지불용의 가능액수에 대한 조사연구
	권역별 용산공원 조성의 환경편익 추정(손민수, 김홍석, 2010)	용산지역 및 용산지역외, 서울 및 서울외 지역 등 권역에 따른 환경편익 추정 연구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박영순, 2019)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 참여 방안 제시

이 중 주한미군기지 건설관련 연구들은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7년 현 평택 지역내 주한미군 기지내 공사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이후 공사가 본격화 시기인 2010년 이후에는 공사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논문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특성인 미측의 FED(Far East Districts, 미 극동 공병단)와의 사업에 대해서 기술하였거나[6] [7],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의 독특한 기록물 관리를 다루거나 [8] 미군기지이전사업의 현물지원사업[9]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갈등을 통한 인식분석을 연구한 논문[10]도 있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1 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

한 국유재산법을 근거해서 독특한 사업형태를 가지는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이 가지는 특성과 소요기간 등을 분석한 논문[11]도 있었다. 또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협상 전략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과정을 안보 딜레마를 통해서 분석하거나[12] 양면게임이론을 통하여 상호이득이 되는 협상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13], 한미협상과정에 대해 자세한 과정을 연구한 논문[14]도 있었다. 최근에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과정에 들어서면서 한·미간 쟁점, 해소과정을 항목별로 분석한 내용[15]도 있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환경관련 이슈들도 많은 논문들[16] [17] [18] [19] [20]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연합관리계획 및 미군기지이전이 도시인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21]. 그리고 그 밖의 논문으로 미군관련 인권문제와 기지촌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룬 것도 있다. 이런 논문들의 특징은 2000년대 이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많은 논문들이 연구가 되었고, 그 이후 평택이라는 지역과 기지가 반환된 지역으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관련 연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인터뷰 장병들의 핵심단어를 도출한 논문 [22]과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통하여 노인장기 요양 기관 부당청구 형태를 연구한 논문[23], 그리고 원자력 언론보도를 분석하여 원자력 이해 교육 프로그램 과목을 선정한 논문이[24] <표 3>과 같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연구와 맞는 논문들은 많지는 않다. 최근 연구 되는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법으로 본 논문이 이런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한다. 이 연구는 정부 보도자료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 보도자료에 대해서 각 시기 공공 갈등유형을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연구한 논문[25] 시기별 토픽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본다. 여기서 분석된 핵심단어를 도출하여 군사시설이 이전의 경제사회적 가치요소와 핵심이슈를 설문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표 3.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관련 논문

주제	제 목	주요 연구내용
텍스트 마이닝 기법	전투스트레스가 지상 전투원의 전투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종길, 2020)	전투원의 스트레스 효율과 관련된 장병 인터뷰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였음
	텍스트 마이닝과 빅카인즈를 활용한 노인장기 요양기관 부당청구 동향분석(윤기혁, 2022)	분석기법을 활용한 경향분석
	원자력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원자력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빅카인즈 서비스를 중심으로(김지현, 2021)	원자력 언론보도와 신문기사를 빅카인즈 서비스를 통한 분석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과정의 도시담론 분석(심주영, 2021)	신문기사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활용하여 분석

		활용
토픽 모델링 기법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blei,2012)	Topic modeling 연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분석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Topic modeling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학분야에서 활용방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분석.(양연희. 2021)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공공갈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리

4. 관련문헌 연구 시사점

이러한 수단 중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은 단어들과 관련 신문기사를 빅데이터 기법의 신문기사 분석사이트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어와 주요 논문에서 도출된 이슈를 두 그룹에 물어보고, 다시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노출시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가치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수혜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좀 더 깊게 연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혜자(주민)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자의 의사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수단들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중요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제시한 핵심어 도출과 더불어 이러한 가치에 대해 연구한 주요 논문들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전사업의 효과와 경제

사회적 가치효과에 대해 분석한 논문들이 있어 이를 주로 활용하여 가치요소를 산출하였다[10]. 또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전과정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돌아보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진행된 평택, 동두천 주민과 용산기지가 있는 용산구 시민들의 가치효과의 중요도와 정책결정자와의 가치효과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결정자의 가치효과의 중요도를 변화할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유사 국책사업에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어떤 점이었고, 이런 효과는 어떻게 바라봐야하고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은 어떻게 접근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본다.



5.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가치분석 연구 분석 틀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보도자료에서 핵심단어와 이를 보도한 신문기사에서 핵심단어를 도출하여 설문의 단어로서 활용하고, 이를 보강하여 핵심 이슈를 다루어 볼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자와 주민들간의 관심도가 차이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결정자는 사업에 따른 국가적 성과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주민들은 지역중심의 수혜, 혜택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핵심단어를 발굴하고 두 그룹간의 관심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수행방법을 <그림2>와 같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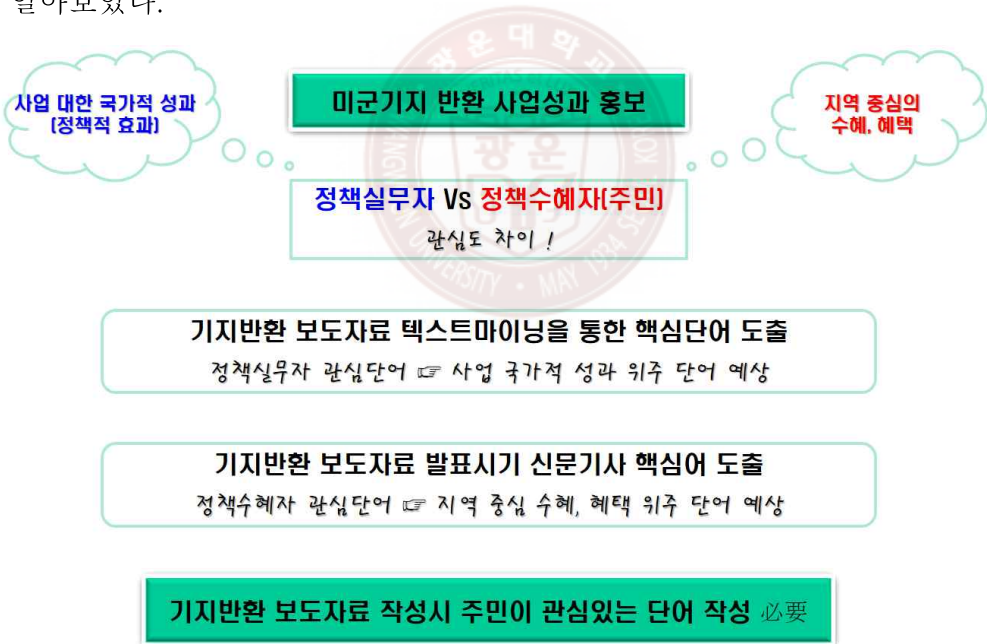


그림 2. 텍스트 마이닝 연구 수행방법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헌들 중 주한미군이전 가치에 대한 연구는 군사시설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전사업의 효

과와 경제 사회적 가치효과에 대해 분석한 논문[10]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님비현상과 갈등 그리고 기지 이전이 지역경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님비현상과 갈등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자세히 살펴지지 못한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주민들의 경제가치 효과와 정책결정자의 경제가치 효과의 차이점을 <그림3>과 같이 살펴보고 주민들의 경제가치 효과에 대한 정보 노출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이 변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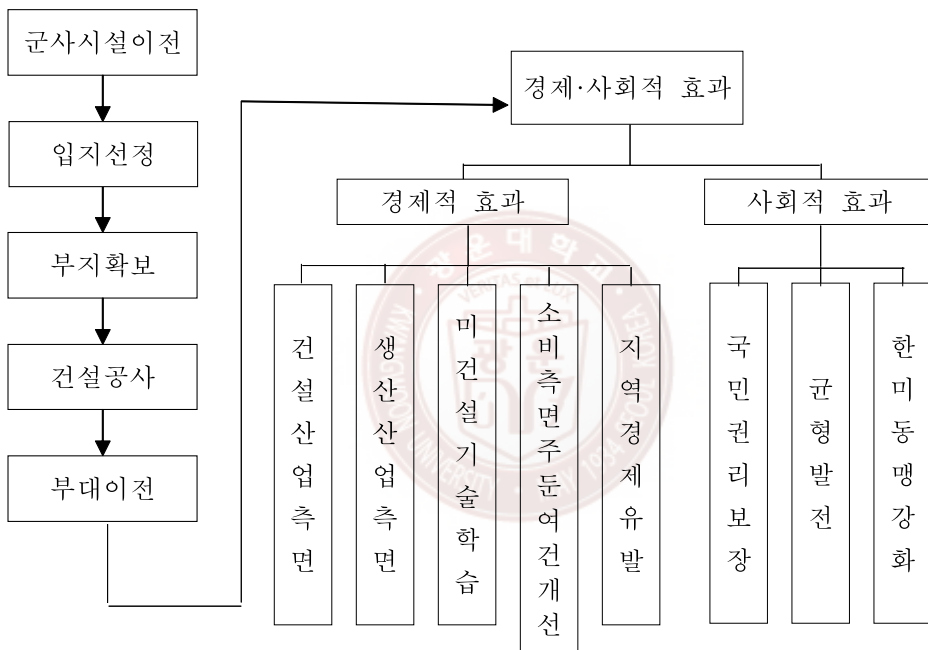


그림 3. 경제 사회적 효과 분석 틀

이러한 연구의 분석의 틀로써 아래와 같이 <그림 4>와 같이 제시한다. 기존 경제적 사회적 연구의 틀에서 일부 항목을 재분류하여 부대이전이 완료된 이후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해 틀로써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틀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핵심단어들의 분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문을

설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주민)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볼 것이다. 이런 질문은 텍스트 마이닝과 주요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인식과 변화를 알아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점과 비교해 보고 분석해 본다. 최근 현안은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따라 부각이 되거나 그 이전부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들이다. 주로 미군기지 이전·반환과 관련하여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환경에 맞추어 미반환 상태로 사업을 종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정화와 관련된 질문과 용산공원 내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용산공원 조성 and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의사결정의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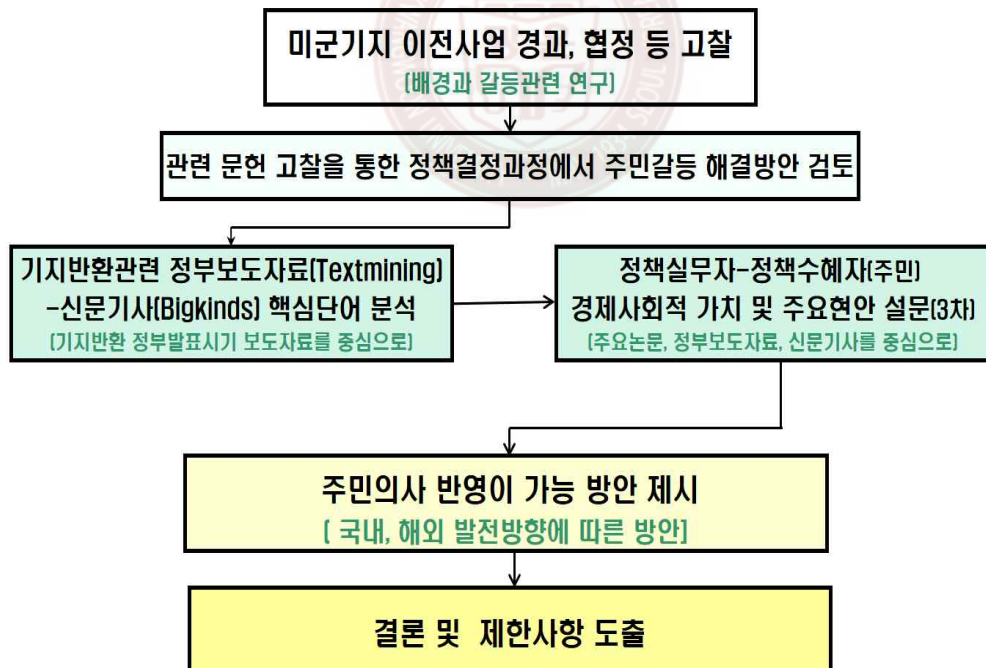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수행방법

Ⅲ.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배경

1. 주한미군 주둔 및 미군기지이전사업 검토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근원적인 면을 찾아보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한반도에 주둔이라는 형태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군사 관계를 주요시기별로 살펴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주한미군기지 주둔의 공여 및 반환 주요사항으로 정리를 추가로 해본다. 또한 이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근간이 되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과 YRP(용산기지이전계획, Yongsan Relocation Plan)이 체결된 2004년 이전과 이후로 정리하여 분석해보고, 특히,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수립된 이후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1.1 주한미군 주둔

한·미 동맹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 및 「한·미 합의를사록」 바로 ‘한·미 동맹의 상위일체구조’로 볼 수 있다. 초기 접촉은 조선 말 1853(철종 4년) 일본 해역 조업 중이던 미 포경선이 폭풍에 밀려 동래 앞 바다에 도착해서이다. 조선 관리가 배에 올라 대화를 시도했으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10일 후 포경선은 아무 충돌 없이 남쪽으로 떠났다. 초기에는 큰 충돌이나 분쟁 없이 끝났다. 그러나 조선이 쇠국정책을 취하고 있는 조선에 통상을 강요하면서 양국관계는 갈등관계로 접어들었다. 1866년(고종3년)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강요하면서 약탈행위를 하다가 조선의 반격으로 배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1871년 미국이 강화도 인근으로 군함을 몰고와 통상을 강요하다가 조선의 군대와 충돌하여 서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신미양요도 벌어졌다. 그리고 1882년(고종 19년) 조선은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조약인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의 남쪽에 다시 발을 들여놓은 것은 해방된 지 20여 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이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 육군 제24군단은 5일간의 항해 끝에 이날 인천항에 상륙했다. 한국전이 발발하고 북한의 기습남침이 있고 나서야 미국은 개입(점령)에서 불개입(철수)으로 갔던 미국의 대한정책은 다시 개입(참전)으로 급선회했다. 한국군은 전쟁 당시 미국에 의해 대폭 전투력이 증강하였고, 증강비용은 미국이 부담했다. 한국군은 전쟁발발 당시 10만 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다가 3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60만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26] 당시 한국의 경제력으로 보아 한국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군대를 증가시키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대증강을 꾀할 수도 없었다. [27] 전쟁의 휴전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 미국의 확고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이후 휴전을 체결한 이후에는 36만명선에 이르던 미군은 2개사단(2,7사단) 70,000여명을 제외하고 대폭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군의 철수정책은 1971년까지 주한미군 철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감축에 대해 1966년 한국군을 월남전에 파병할 때에 맺어진 브라운 각서에서 감축시에는 양국이 사전협의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비난

하면서 철수시 대안으로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군사원조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후부터 미군을 한국에 붙들어 두는 것을 우선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6년 미선거시 카터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군으로부터 미지상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한다[28].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감축과 철수에 대해 한측과의 협의나 협정에 의한 결과라면 이렇듯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세계적 분쟁에 개입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및 철군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수차례 감축 및 철수에 대해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미국내 상황과 세계전략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이는 주한미군의 병력 변화는 철저하게 미국내 국익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한미정부 군사관계 주요일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한 미군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성립된 관계는 시대를 흐르면서 여러 차례 다양한 변화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병력의 변화에 따라 기지가 변화하여 왔는가를 알아보고 있다. 앞서 군사관계 주요일지에서 보듯이 미국은 카터 대통령시기에서 보듯이 철수문제를 지속적으로 꺼냈으나, 한·미간 한반도의 주한미군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여러 주요 정책들로 발표하게 되고 확약하였다. 한미 역대정부 주한미군 정책결정 사항들을 살펴보면 1950년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미간의 동맹을 강조한 시기였다. 이시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이 절실한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억제력과 군사력이 필요했고, 전후복구와 경제 및 군사지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맹을 원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하에서 공산화를 저지하고, 한국의 통제권을 가지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

일 주장을 막아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미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전선에 미군을 배치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우세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1960~1970년대 말에는 한미간의 동맹에 대한 비대칭 탓에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였다.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 파병도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자 동맹국 안보정책에 연계시켰다. 그리고 1977년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닉슨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의 두 번의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강조하게 되고 본격적인 전력증강사업으로 1976년에 전체 군사비가 북한을 앞서게 된다.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보다 확대되게 된다. 1994년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게 되었으나, 경제력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해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I)'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정책을 추진하게 되나 이전과는 다른 자율성을 갖게 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대미 의존적 정책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데 치중하는 대미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주한미군 2단계 감축 계획이 유보되자,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유연성이 저하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부터는 2003년 부시 행정부에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의 기지통합과 증원체제의 정비, 주한미군이 재정비 등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또

다시 연기되었다. 2000년대 부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정책과 북한 핵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 등으로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대내외 표방하며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노무현 정부의 군사력 건설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위해 감시정찰·정밀타격·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군사력건설의 핵심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비에서도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고 이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다소 소원하고 불편했던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 동결 합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안보 및 경제 현안, 국제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대결구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반면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기로 하였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29].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등 자율성과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주한미군 주둔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미동맹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의 동맹유지 수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한미동맹은 쉽게 해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0]. 역대 한미정부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휴전 후 32.5만에서 지속적인 철수 절차를 거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될 때는 8.5만까지 줄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70년대에는 주한미군 감축이 6.1만까지 줄어들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구상이 발표될 시기인 1990년대에는 3.6

만까지 줄어들었다. 미국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2010년에는 2.8만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정책과 병력 변화에 대한 인과 요인은 정치외교 측면에서 살펴봐야할 요소이고, 여기에서는 병력 수의 변화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요인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차후 미군의 병력 변화를 예측해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 병력의 수는 전쟁이후 지속적으로 줄었고, 이는 한·미간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병력의 변화와 정책과의 인과관계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만 정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2 주한미군기지의 공여와 반환

주한미군 공여는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때의 공여나 부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는 미국은 1905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지위를 인정하고 조선 내에 있던 공사관을 철수시켰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바뀌는 과정에서 정비작업을 거쳐 오늘날 미군기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1945~1949년 시기 미군은 소련이 빠르게 38선까지 진출하자 찰스 해리슨 소장이 미측 선발대를 이끌고 9월 4일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서울에서 항복 서명식을 계획하여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천항을 정비하였다. 한편, 미7사단은 윌리엄 F. 딘 소장의 지휘 하에 캠프 서빙고(현재 501정보여단 본부)로 이동했으며, 미7사단의 예하부대들은 대구를 포함한 다른 도시로 배치되었는데, 대구에는 일본 제국군 3대대와 80보병연대가 사용하던 캠프에 미7사단이 주둔했다. 부산에는 ‘모닝컴 레이스 트랙’이 미군기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 캠프 하야리야이다. 9월 22일, 2진인 미40보병사단이 도착했다. 미40보병사단은 부산에 본부를 두고 한반도의 남쪽 끝 지역에 배치되었다. 미6사단은 10월 10일에 입항하게 되면서 3개 사단과 1개 지원 대대 등 총 77,600명의 미군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대규모 미 주둔군인 85,000명의 병력을 위한 임시 숙소를 필요로 했다. 미40보병사단은 1945년 10월부터 1946년 3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1946년 4월 7일, 미40사단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캠프 스톤맨(Camp stoneman)에서 해체되었고, 1946년 5월, 한국에는 119개의 미군부대가 잔류하게 된다. 곧이어 미7사단을 한국내 주둔군으로 남겨두고, 미6사단은 한국을 떠나게 된다. 당연하게도

병력은 1948년 말 무렵 16,000여명 정도였던 인원은 1949년 초까지 7,5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후 미군의 철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 1949년 6월 30일 모든 부대들은 본국으로 철수하지만 한국의 육군과 해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군사자문단은 1949년 7월 1일 과거 일본 육군 사무실인 캠프 서빙고에서 창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 군사고문단(KMAG)이다. [31] 이러한 미 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h the Republic of korea:KMAG)은 1948년 8월 15일 임시군사고문단으로 출발해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oint U.S. Military Assistance Group-Korea : JUSMAG-K)에 통합될 때까지 약 23년간 한국에 존재했던 미국의 군사자문기구였다. 이는 최소 240명에서 최대 2019명까지 확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지휘관계도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32]. 1950년에서 1953년 시기는 6.25전쟁이 있던 시기로 대부분이 캠프들은 텐트를 치며 숙영을 하고 학교 건물이 전투사령부로 사용되었다. 맥아더의 요구에 의해 미24사단은 부산에 도착하여 서울로 향했고 전장 초기 끊임없는 이동으로 주로 텐트를 사용하였다. 이후 미8군 전방사령부는 1950년 7월 9일 대구에서 창설되었고, 이는 캠프 헨리(Camp Henry)가 된다. 미2사단은 7월 30일에 도착하여 미24사단이 사용하던 기지, 학교 건물과 운동장에 텐트를 세워 사용했다. 부산 방어전이후 9월15일 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향했고 북쪽으로 진출함에 따라 많은 캠프들이 사라지고 임시시설들을 사용하였다. 1951년 6월 30일 기준 미군 지상군 병력은 253,250명이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안정화단계로 접어들면서 후방 지역에는 반영구적 캠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미군 캠프들은 6.25전쟁 당시 설치된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20]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는

건설공병들에 의해 주택용으로 임시막사(Quonset huts)를 건설하게 되었다. 화이트 장군이 추진한 계획의 첫 단계는 1,865채의 임시막사(Quonset huts)를 짓는 것이었다. 대다수 막사는 임진강 북쪽 지역에 위치한 캠프에 지어지게 되었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건설사업은 육군의 소규모 공병부대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1957년 7월 1일 서울 동대문 근처에 미 육군극동공병단(FED)가 창설되어 아시아 내의 건설 계획을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군사원조(이하 AKKN) 프로그램을 통하여 1957년 말까지 559개의 학교, 250개의 병원, 300개의 관공서와 수많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다. 1960년대에는 도서관, 화장실, 막사, 식당 등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생활여건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비무장지대 인근 매복하고 있던 미2사단 소속 6명의 미군이 살해되고 이듬해에는 16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51명의 인원이 부상당했고 1968년에는 17명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적 행동은 미국의 방위 노력을 증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아시아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는 미국의 지원 증가를 통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할 수 있게 하면서 미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1년 4월 1일 미7사단은 미2사단 측에 캠프 케이시(Camp Casey)를 넘겨주고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에는 29,000명의 육군과 10,000여 명의 해군만이 주둔하고 이때 미2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155마일의 비무장 지대 지역 경계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캠프 건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1980년대 중반부터 임시막사나 기타 열악한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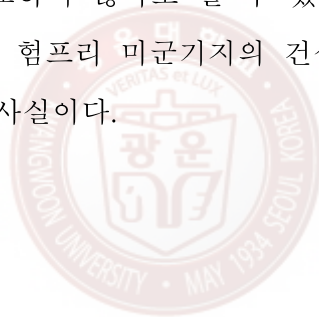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이런 형태의 막사들이 대부분이 완공되게 되었고, 새로운 클럽, 피엑스, 볼링장, 오락시설 및 의료시설이 문을 열었다. 또한 1990년 한미 정부는 서울에 위치한 미 육군본부인 용산 육군기지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2년 3만 9천명이던 미군 병력은 1996년까지 3만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에서 1991년 사이, 125개의 미군 캠프는 한국 측으로 반환되었고, 그 후에는 75개의 캠프와 비행장이 미측 관할로 남게 되었다. 1993년에서 1995년에는 6개의 캠프가 추가로 반환되었다[31]. 주둔지 면적은 병력현황과 비례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병력이 줄어들면서 공여지 면적도 줄어든 모습을 알 수 있다. 특히, 美사단이 복귀하고 감축 통보를 한 1970년 이후 급격하게 미군기지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美병력에 대한 사이트(Military Ballance)를 통하여 확인해보니, 미측의 병력규모에 따라 기지가 변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력의 규모보다는 앞서 언급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기지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을 <표 4>에서와 같이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현재와 같이 추진되었다.

표 4. 주한미군 병력현황과 공여지 면적 현황

구 분	1967년	1970년	1980년
병력현황	6.3만명	4.3만명	3.9만명(1979년)
공여지 면적(억㎡)	14.2	14.0	3.13
출처	주한미군기지역사	주한미군기지역사	주한미군기지역사
구 분	1990년	2000년	2022년
병력현황	4.3만명	3.6만명	2.85만명
공여지 면적(억㎡)	2.77	2.45	0.76 (추정)
출처	1990년 국방백서	2000년 국방백서	군사편찬 연구소

※ 출처 : 국방백서(1988-2002년), 국방부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국방부, 2001) 참조 재구성

주한미군기지의 공여 면적과 병력 수와의 관계는 긴밀한 연관 관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병력이 축소됨에 따라 기지의 면적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병력 수준이 계속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절대적인 기지 공여면적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1980년까지는 병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여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별도 병력관련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체결된 협정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지 공여의 면적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평택기지에 새롭게 공여된 면적보다 미군이 철수한 기지의 반환이 더 크다는 것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지공여 면적의 축소에 있어서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의 건설이 완료된다는 의미는 중요한 변곡점인 것만은 사실이다.



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검토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美 군사력의 지향성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군과 함께 중요한 재구성을 맞고 있다. 이는 2001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 방위태세 점검’(Global Defense Posture : GPR) 개념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이로 인해 Integrated Global Presence and Basing Strategie (IGPBS), 즉 ‘통합 글로벌 주둔 및 기지배치 전략’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많은 미군 기지들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그 기지들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이는 전방 지역으로부터 미국의 힘을 투영하기 위해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방배치 병력의 감축이 일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파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34].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플랫폼 중심의 전투에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로의 변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오사마 빈 라덴이 1979년 조직)에 의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재배치’ (Military Transformation)와 함께 ‘전 세계적 방위태세점검’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개념이 개발되었고, 전략가들이 한국의 오래된 기지구조와 재래식 무기에 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를 위해 신속배치군 (Rapid Deployment Forces: RDF)이 만들어졌고, 그 일환으로 신속기동군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 Stryker Brigade Combat Teams (SBCTs)이 신설되었다.

이 RDF 개념이 한국에 있는 미2사단의 한 여단에 처음 적용되었고 이 부대는 1992년에 철수했다. 이후 2003년 8월, 미 육군 최초의 SBCT인 미2사단 3여단의 1개 소대 병력이 부대 창설 후 첫 해외훈련을 한국에서 실시했다¹⁾ 결론적으로, GPR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RDF는 지리적 위치(비행장과 항구가 갖추어진 장소)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신속기동군화' 된 군대를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 군사력 재배치의 주 후보지는 오산 미공군기지가 있고 평택항이 있는 평택시가 최적의 장소이며, 육군 (미8군과 미2사단)이 주력 부대인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35] 참고로 현재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그림 5>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은 아래와 같다.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연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를 약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이들이 보유한 장비 가치가 17-3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3-26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시에 자동 개입되는 대북억제력의 핵심인 미 증원 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평시에도 주한미군은 운영비 지출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물품 구매와 1만 2,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안보비용 절감, 소비지출과 한국인 고용으로 인한 국민경제 기여, 대북 억제력 제공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효과 등이 있다[36].

1) 동아일보 2003년 7월 28일 자



※ 출처 : 국방백서(2018년), 주한미군 주요조직과 보유전력 참조

그림 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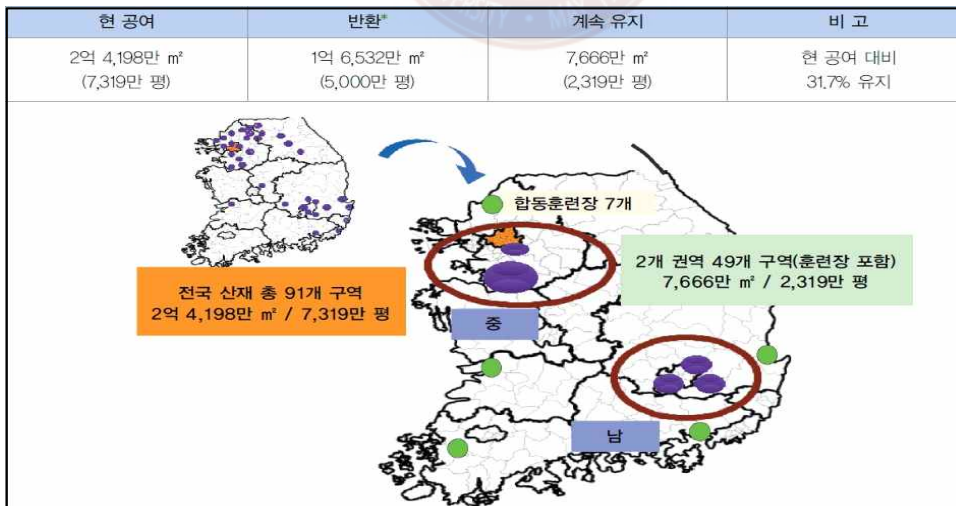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2년 미 국방예산을 말했다. '미 국방성은 2022년 국방예산이 2021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1.6% 인상률을 적용한 총 7,529억 달러 규모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도 이전과 같이 미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번영을 보장하며, 자유 민주 이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37] 데이비드 바인의 '기지국가'에 따르면 미군의 해외 군사기지과 미군 주둔비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바인은 책의 부제('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해를 끼치는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과하게 산정된 부분은 있으나, 해외 주둔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인용해 보면 펜타곤의 '해외 비용 개요'에서는 226.7억달러에 기타 산정한 요인들을 포함시켜서 717.7억달러(전쟁 예산 추가비용-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 기타지역에 지출비용 제외)로 제시하

고 있다. 참고로 2012 회계연도 예산은 국방부(DoD)에 총 6,76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The FY 2012 budget requests a total of \$676 billion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38])

이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구상(GPR)은 2003년 11월 25일에 부시 대통령이 국제 전략 문제 센터(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CSIS)에서 실시한 연설에 의해 최초로 공식화 되었다. 이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범세계적 방위태세(Global Defense Posture)를 변환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해외 미군의 규모를 줄이고, 기술력에 의해 보다 좋은 무기체계를 구비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주둔 위치, 성격,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맹관계 및 군사협조 체제의 포괄적인 재정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²⁾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의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YRP)과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미2사단을 평택과 기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으로 구분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평택 공여부지 약 444만평 부지에 건물 513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6조원의 초대형 건설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총 91개 지역, 40개 기지(YRP 9개, LPP 31개)를 평택과 대구로 이전하여 2개 권역 49개 지역으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면적으로 보면 <그림 6>과 같이 기존 기지의 점유면적은 2억 4,197만㎡이며, 이전 지역의 면적은 7,675㎡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한층에 반환되는 주한미군주요기지는 캠프 에드워드(파주), 캠프 게리오웬(파주), 캠프 에세이온(의정부), 캠프 홀리워터(의정부), 캠프 페이지(춘천), 매향리 사

2) 당시 연설내용의 요약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2003)

격장(화성) 등이다.[3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년 6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개최한 이후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방부 국방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공여부지 조정과 관련된 세부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세부 기지 현황은 정부의 보도자료 및 백서 등의 발간된 책자를 중심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은 2019년 말 기준, 약 72.5%가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되었다. 반환 기지는 기존 수립된 개발계획에 맞춰 완료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기지반환이 지연되거나 경기침체로 따른 개발사업이 일부만 추진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재검토가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40]



※ 출처: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2013), p. 310.

그림 6. 주한미군 재배치 및 공여부지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시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YRP) 사업과 전국에 산재된 미군 시설을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다. 기지 이전을 요청한 측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용산기지이전 사업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은 미국과 한국이 각각 이전을 요청한 측에서 해당 기지의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3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및 미2사단기지 등 주한미군의 주요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평택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는 지휘시설과 훈련 시설은 물론,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병영시설, 정비시설이 들어섰다. 미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017년 7월과 2018년 6월에 각각 평택기지로 옮겨간 이후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미군기지 이전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건설,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을 위한 편익 지원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승인함에 따라 이전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현재(2022년 기준)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현재 6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용산기지(메인포스트 및 사우스 포스트 등)를 포함하여 11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

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은 '88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90. 6월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을 한미가 합의 후 추진하였으나, '93. 5월 막대한 이전비용을 이유로 전면 유보하였다. 이후 10년간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았다. 용산 기지 이전문제는 2003년 2월 다시 제기되었다. 2003년 2월 19일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서울에 배치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한국 대통령(당시 노무현)에게 재조정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후 4월 9일 열린 미래한미동맹(FOTA, Futur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s, 이하 FOTA) 1차 회의 이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에서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이 합의되었다. 이후 2004년 7월 22-23일 열린 제10차 FOTA 회의에서 가까스로 공여 면적이 349만 평으로 낙찰됨으로써, 결렬위기를 넘겨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2004년 10월 26일 「대한미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체결되었고, 이후 이 협정을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lan)'으로 협정서에서 통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용산기지는 평택·오산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되었다. 연합사, UN사, 주한미군사령부는 2007년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계획되었다. 기지이전 내용으로는 서울 지역내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용산주변 7개 미군기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501정보대, 유엔사, 8군 휴양소, 수송부, 니블로 배럭스)와 미극동공병단(중구), 성남골프장 등 9개 기지를 이전하는 계획이다[41].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전국적인 지역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주한미군의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과 관련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민원이

점증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 늘어나자, 지역개발이 제한요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미군기지 통폐합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그리고 미군 측에서도 산재한 기지를 조정하고 통폐합함으로써 미군기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열악한 숙소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불용 토지를 반환하도록 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는 변함없는 안보태세 유지, 기지와 관련한 장기 민원의 해소, 이전장소의 가용성, 기지이전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2001년 2월 이후 미국 측과 본격적으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의 협의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3월 29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과 시설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은 2002년 10월 30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양국이 법적 요건의 완료를 상호 서면 통보함으로써 10월 31일자로 발표되었다.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 평과 3개 미군훈련장 약 3,900만평 등 주한미군 전체 기지의 55.3%에 해당하는 4,114만 평을 2011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한국 측에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42] 이후 2004년 10월 26일 기지 반환 시기 조정과 토지공여 규모 및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LPP협정을 개정하였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모곡·서정·장당·지제동, 고덕면 일원 1,746ha를 2006년 9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1세기 환황해권경제시대를 대비한 국제중심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구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평택 국제화 지구는 평택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

진하고 있다. 이는 '04년 공포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 원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장당·지체 동 및 고덕면 일원에 13,408천㎡(406만평) 면적이며, 5만9천 세대수를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08. 5월부터 '25년 12월까지 3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하는 중이다. 사업비는 8.1조원으로 용지 비가 3.6조원, 조성비가 4.5조원이다. 시행은 LH가 85%를 시행하고 나머지를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시행한다.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1단계는 서정역세권 및 행정타운 등 중심으로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1단계 사업은 '19. 7월에 준공하였다. 2단계 공사는 함박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22년 현재 거의 완공단계이다. 3단계 공사는 탄약고 등 군 시설 이전 등 고려하여 조성공사 착수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도 평택지구 조성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과 관련된 공사지연으로 주민불만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대한 민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1952년 2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에 정식으로 공여한 이후 1957년 주한미군 사령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멀리 13세기 고려 를 침략한 몽고군의 주둔지였고, 1904년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제의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오랫동안 군사기지로 활용되어온 지역이다. 2005년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08년 3월 설립된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 추진 기획단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역사의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43] 용산공원은 서울시 중앙부 용산구에 있

고, 남산과 한강에 인접해 있는 강북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사회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용산공원은 외국 군사기지의 이전지역의 역사적 상징성과 국가에 의해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울의 중심 산림 허브역할로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복합적인 국민들의 휴양 및 여가를 위한 공원으로도 목적을 가져야하는 양면성이 있다. 여기에 복합시설조성지구(산재부지)는 미군기지이며 시설이었던 8군 수송부, 유엔사, 캠프 김 부지를 뜻하며 2007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기부대양여 협약에 의해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서울특별시 중양부의 용산구 내에 위치하고 용산구 내에서도 한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강에도 인접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남산 2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반포로를 통해 강남으로 연결되며, 서측으로는 서울역에서 노량진으로 연결되는 한강로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용산기지 중앙의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의 중앙으로는 이태원로, 지하로는 지하철 6호선이 기지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다. 현재는 미군 용산기지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병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던 곳으로 근대 한국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공원 예정지는 용산구 용산동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및 서빙고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국토부 용산공원 사이트 참조) 특히, '21년 12월에 확정·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계획」에서 용산공원 정비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 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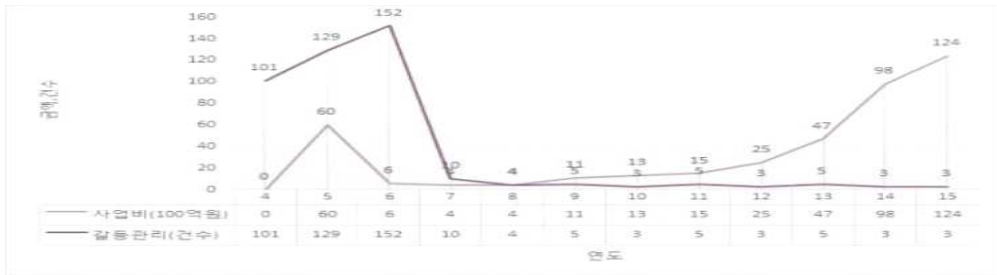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조성계획에서는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기존 계획에서는 '16년 전체 기지 반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7년 공원 조성 완료 및 개원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반환 이전까지 부분 반환과 반환 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간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는 우선적으로 착공한다. 조성공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개방하고, 개원 후에는 공원과 주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계별 공원 조성으로 기지반환 이전(~N)에는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착수하고 부분반환 부지를 개방하고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 추진한다. 공원조성 준비(N~N+3)에는 설계 보완 및 문화재 발굴·오염정화 등 수행하고 구방사청 부지 등 오염정화가 필요 없는 부지 우선 착공한다. 공원조성(N+3~N+7)에는 공원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여 개방, 국민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한다. 공원개원 및 확산(N+7~)에는 공원 핵심네트워크(녹지, 동선체계)의 주변부 확산, 국내외 홍보,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공원 조성비용으로 약 2조 1,400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조성계획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한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재원조달수단은 국가와 서울시(법률상 비용부담주체)의 적절한 비용 분담,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민간자본유치, 기부 및 기증 장려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

고 공원 관리 및 운영비용은 관리·유지 비용 연간 약 250억 원, 콘텐츠 운영·개발 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약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점용료, 광고수입, 후원금, 행사유치 등을 통한 재원 확충방안 강구하고 있다[44].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식조사’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 시민들의 생각은 ‘환경지향’, ‘개발지양’이라는 뚜렷한 선호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생태공원으로서 선호하고 반대로 상업적 개발에 반대하고, 공원 주변의 고층고밀에 대해 반대 등의 의견이 뚜렷하다고 나왔다.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감수하지만, 그 외에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설문에 미군기지 주둔 주민과 정책결정자의 의식을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본다. 이러한 미군기지이전은 산재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그리고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사업, 용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용산 국가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미군기지 이전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과 동시에 주민의식 설문조사와 미군기지 이전을 통하여 정부의 보도자료 분석 등을 통한 분석의 틀로 알아본다.

2.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갈등관리 검토

앞서 이야기한 한 바와 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사업은 몇 가지 이슈들을 발생시켰다. 이주 주민에 대해서는 재산권 피해 및 생존권 보상 문제였고 이는 경제적 보상 문제로 귀결되었다. 다음으로 평택주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반대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차관 회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책수혜자(주민)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용체계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 주민들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택 시민들은 주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전달하는 것이지, 상호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46].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갈등은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먼저 갈등의 생성 및 잠복으로 노태우 정부 시기 용산미군기지 이전 검토에 따라 2년 후 미국과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나 안보상 이유로 주민 합의는 없이 진행되었다. 갈등 표면화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평택시에서 새로운 미군기지로 편입되는 팽성읍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결성되며 반대하였으나,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얻고 사업추진에 전력하며 대화에 나서지 못했다. 갈등 확대기로서 범위가 결성되며 평택지역에 활동이 시작되고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가 전개되면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가 필요하나 정부 측과 반대 단체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갈등완화기 및 갈등해결기로 마지막까지 70여 가구가 반대 투쟁을 계속하였으나, 주민 대표의 보석 출소를 계기로 이주문제에 대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2007년 4월 1일에 최종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었다.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사업비용, 사업기간,

한국에 대한 방어,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반면, 정책수혜자(주민)들은 보상문제와 반전, 반미 운동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끊임없는 대화(의사결정에 끌어들이는 과정)와 주민을 위한 사업비(경제적 효과)가 투입되면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게 되자 <그림 7>과 같이 감소하게 되었다.



※ 군사시설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8.8), 이도제 p.62

그림 7. 연도별 갈등관리와 투자금액 상관비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주민) 사이의 의사결정에 대한 소통문제는 여러 제도적 부분과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하는 문제임을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인지해야 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통제하기 보다는 열린 대화방식이나 의사결정 체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런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3. 주한미군이전사업 보도자료와 가치분석 연구

3.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보도자료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는 지자체나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기지반환이 이루어 시기에 주로 보도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2002년 YRP 및 LPP에 의해서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 2003년 아리랑 택시부지(현 용산구청 부지) 반환을 시작으로 80개 기지가 순차적으로 반환되고 있고, <표 5>과 같이 이러한 기지들 중 지자체 반환을 실시한 연도에 정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표 5. 주한미군 기지 반환 보도자료 발표 시기 및 대상 기지

미군기지 반환 보도자료 발표	반환 대상 기지(개)	비 고
2007년(4.13, 6.1일 발표)	9	
	14	
2010년(1.14 발표)	7	
2019년(12.11 발표)	4	
2020년(12.11 발표)	12	용산 일부
2022년(2.25 발표)	3	용산 일부

3.2. 경제사회적 가치 분석 요소

주한미군관련 논문들 중에서 경제사회적 가치를 연구한 논문으로 ‘군사시설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8, 이도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한 경

기·서울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면서 갖게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경제사회적 가치 중에서 경제적인 효과로 무엇보다도 평택기지 이전사업의 효과를 들 수 있다. 평택기지 건설은 513동으로 이루어져 8.86조(2010년기준)의 사업으로 다른 대규모 사업(인천공항 1단계 5.6조, 위례지구 조성사업 5.88조 등)에 비해서도 훨씬 규모가 큰 사업이고, 현재에는 더욱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다. 그리고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사업(약 1.1조원)으로 인해 사업유발 효과가 큰 사업이다. 또한 반환기지 환경정화사업도 대규모 기지의 환경정화를 통해 경제 유발효과와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기술도 확장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용산국가공원 조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용산기지 등의 평택이전사업을 통해서 미측 기준에 따른 한미 공동사업관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습득하게 되는 노하우일 것이다. 사업 추진간 미국방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미국 건설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미군 해외기지에 가지 않고서도 해외 기술을 단기간 대규모 인원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까다로운 미측의 기술 표준들을 맞춰가면서 습득하게 되는 절차들을 정립하여 인터넷과 백서(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백서 등)로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수입대상 건설자재들을 상당수 국산자재로 전환(수입대상 품목 중 285개 국산화, 국산화율 77%, 1,850억원 예산절감)하게 됨으로 예산 절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국내에 근무할 때 가족까지 동반 근무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설 유지 소요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유발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체류인

원에 대한 체류비용 증가나 공사참여 인원의 유동비율 증가를 통하여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47].

정책차원의 효과로는 먼저 국민권리 보장측면에서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대규모의 공여지에 대한 공여해제로 국민 품에 돌아오는 부지와 주둔지 탄약고와 같은 안전거리가 해제되면서 안전지역권도 동시에 해제되어 주민들의 건축과 개발행위의 제한들이 풀리게 된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이번에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사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들이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평택기지를 건설하면서 다양한 기반시설(도로, 전기, 통신, 철도, 상하수도)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반환기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숙원사업(동두천 캠퍼스 유지나 동두천 사업단지 조성, 의정부 병원건립, 대구 지역 도로건설, 부산 및 원주지역 공원조성 등)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군기지가 전사업의 효과는 든든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국가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48].

이러한 경제-사회적 가치를 통해 구체적인 요소들을 선정해서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논문 중에서 이러한 가치를 연구한 논문들이 일부 있어서 이러한 논문들에서 언급한 가치들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차원 효과와 구현되는 정책차원의 효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효과로 생각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닌 효과로 볼 것인지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VI.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1.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 활용

텍스트 마이닝과 신문분석 프로그램인 빅카인즈를 활용한 논문들은 몇 가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전투스트레스에 대해 장병들과의 인터뷰를 텍스트 분석한 논문도 있었다. 여기서는 추가로 ‘텍스트 마이닝과 빅카인즈를 활용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동향분석’논문과 ‘원자력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원자력 언론보도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 빅카인즈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활용한 사례는 있다. 여기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되어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당기간 신문분석 사이트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차별화된다. 두 그룹의 핵심어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핵심어 대한 차이가 바로 핵심어를 중심으로 설문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적용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은 최근에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 즉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두어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데이터 분석방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의 분석방법으로 워드 클라우드, 워드 네트워크 분석기법이 있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 수록 단어를 크게 표현하고 단어의 빈도수가 낮을수록 단어를 작게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도자료와 신문 기사에서 핵심 단어들을 신속히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가 단순히 많이 언급된 단어의 크기로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면 워드 네트워크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거리를 바탕으로 관계의 정도를 표현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는 방법이다[22].

토픽 모델링에 사용한 LDA 분석은 분석에 사용된 잠재적 디리클레할당 모형은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률모형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토픽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각 단어의 발생확률이 클수록 학습 말뭉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49].

YRP/LPP 협정이 체결된 이후 '03년부터 아리랑 택시를 시작으로 기지반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기지 반환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나, 최근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다보니 최근에는 대부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이러한 배포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어떠한 키워드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정책수혜자(주민)들은 어떠한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도기사 분석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하여 이를 분석해본다.

2. 주한미군기지이전 보도자료 텍스트마이닝 분석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간 기지반환을 위한 보도자료는 각 정부 부처 보도자료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어의 중요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고, '03-'20년까지 이루어진 보도자료 분석과 '22년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분석해 본다.

2.1. 기사자료 분석 결과(2003 - 2020년 기지반환까지)

보도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분석방법으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실시하였다. 특히,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넷마이너 4.0을 활용하여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문서에 제시된 중심 주제어들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각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주한미군기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50년 기지공여가 이루어졌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지반환은 한·미간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협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YRP 및 LPP를 통해 반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이후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다. 물론 이때부터도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졌으며, 정부에서도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기지는 LPP협정이 이루어진 다음 해인 '03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으며, 반환이 계획되어 있는 전국 80개 미군기지와 한·미간 협의가 이루어진 기지들이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각 반환시기 발표된 보도자료는 핵심어를 각 문장에서 도출하여 보았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핵심어를 도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핵심어는 연구자가 각 문장에서 핵심어를 주관적으로 선택하였다. 가장 먼저 '03년 아리랑택시 부지(현용산구청부지) 반환에 대해 별도 정부의 보도자료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기사자료를 살펴보면 기지반환이 정부에서 실시했다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05년 시기에 바요넷 모빌, 페이지 훈련장, 불스아이, 와킨스 훈련장, 사천비행장 보급 창고, 캔사스, 오클라호마 사격장, 짐볼스 훈련장을 반환 받았다. 이때 역시도 별도 반환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는 별도로 없었던 같다. '06년에는 텍사스 사격장, 제주 캠프 맥넵을 반환 받았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제주 캠프 맥넵 반환 등에 대해서 '07년 기지 반환시 언급이 되었다. '07년에는 다그마노스 훈련장, 캠프 그리브스, 님블, 라과디아, 리버티 벨, 스탠튼, 자이언트, 하우스, 콜번, 유엔 콤파운드, 서울역 미군 TMO, 찰리블럭 사이트(통신중계소), 캠프 게리오엔, 시어스, 에드워드, 에세이온, 카일, 그레이, 에넥스, 페이지, 매향리 사격장 등을 반환 받았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때에는 4월과 6월에 각각 9개와 14개의 기지를 반환받는다 정도의 짧은 보도자료를 냈었다. 앞서 반환시보다는 많은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반환배경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였다. <표 6참조>

표 6. 2007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기지반환 보도문(2007년)	핵심 단어
제 목 : 1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4.13일) 1. 정부는 캠프 그리브스(파주) 등 14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SOFA에 따른 반환절차를 종료하였다. 2. 앞으로 정부(국방부)는 이들 14개 기지들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반환절차가 종료된 14개 기지 ○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보니파스(파주), 캠프 리버티벨(파주), 캠프 찰리블록(파주), 캠프 자이언트(파주), 캠프 그리브스(파주), 캠프 하우스(파주), 캠프 스탠튼(파주), 자유의 다리(파주),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콜번(하남), 서울역 미군사무소(서울), 유엔 콤파운드(서울), 캠프 맥넵(제주) /끝/	14개 반환절차 SOFA 국토 조속 정부 반환절차 의정부 파주 동두천 서울

<p>제 목 : 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5.31일)</p> <p>1. 정부는 5.31자로 캠프 에드워드(파주) 등 9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SOFA에 따른 반환절차를 종료하였다.</p> <p>2. 앞으로 정부(국방부)는 이들 9개 기지들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p> <p>※ 반환절차가 종료된 9개 기지</p> <p>○ 캠프 에드워드(파주), 캠프 시어즈(의정부), 캠프 에세이온(의정부), 캠프 폴링위터(의정부), 캠프 페이지(춘천), 캠프 그레이(서울), 캠프 게리오웬(파주), 캠프 카일(의정부) 및 매향리 사격장(화성) /끝/</p>	<p>제주 반환절차 국토 정부 SOFA 조속 활용 종료 의정부 춘천 화성</p>
---	--

'08년에는 부산역 미군 TMO, 대구역 미군 TMO 반환받았다. 이때는 별다른 보도자료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신문기사도 나지 않았다. '09년에는 캠프 홀링위터, 캠프 캐롤 TMO, 와그너 사격장 반환받았다. 이 자료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단에서 작성한 책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홀링위터가 '07년 반환이후 '09년에 기지반환을 받았다. 이때 정부의 보도자료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신문기사는 보도되었다. '10년 김포 우편터미널, 캠프 하야리아를 반환받았다. 이때 캠프 하야리아는 반환협상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와 외교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때는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하였다.<표 7참조>

표 7. 2010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어 도출

기지반환 보도문(2010)	핵심 단어
<p>제목: 반환 미군기지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시범 적용 완료</p> <p>1. 한·미 양국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난 2009.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고 7개 기지에 시범 적용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0. 1.13까지 동 시범 적용 사업</p>	<p>환경</p> <p>공동</p>

<p>을 완료하였습니다.</p> <p>2. 동 시범 적용 결과, 캠프 캐롤 미군驛사무소 등 6개 기지는 JEAP에 의한 평가 결과 위해성이 도출되지 않았음에 따라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p> <p>○ 부산 소재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측의 자체 조치 등이 있었으며, 극히 일부 지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여 왔는 바, 미측의 자체 조치 등에 따라 해당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으며(동 부지의 0.26%)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어 시급한 지역 개발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미간 합의하였습니다.(‘10.1.13 반환 완료)</p> <p>※ 6개 기지의 경우(캠프 캐롤 미군驛사무소, 4개 사격장, 김포 우편터미널), 미측의 자체 조치 및 일부 보완 조치 등으로 오염 또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p> <p>4. 한·미 양측은 상기 JEAP 시범 적용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완 필요 여부 및 향후 기지 반환·공여에 계속 적용해 나가는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p> <p>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p>	<p>합의</p> <p>반환</p> <p>부산</p> <p>하야리아</p> <p>협의를</p> <p>미측</p> <p>반환</p> <p>지역개발</p> <p>조속</p> <p>선례</p> <p>미측</p> <p>오염</p> <p>보완</p> <p>기지</p> <p>환경부</p>
---	---

’11년 칠곡 금오산 살렘사이트, 오산비행장 내 5개 부지 반환받았다. 현재까지도 별도의 보도자료나 기사내용이 없다. ’14년 원주 에어 스테이션, 대구 비행장, 광주 비행장을 반환받았다. 반환이후 군에서 활용해서인지 별도의 반환과정을 알 수 없었다. ’15년 캠프 캐슬, 부산 DRMO를 반환받았다. 이때 관련기사들은 많이 검색되지만 국방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는 검색되지 않았다. ’19년에는 캠프 이글, 룡, 마켓, 호비 쉐아사격장 반환받았다. 캠프 룡과 이글은 2010년에 한국에 반환된 기지이다. 그리고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놓고 한·미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반환이 지연되다가 2019년에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이다. 캠프 마켓 또한 2019년에 반환받게 되었다.<표 8참조>

표 8. 2019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기지반환 보도문(2019년)	핵심 단어
<p>제목 :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기지 반환 본격 개시</p> <p>□ 정부는 12월 11일(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캠프이글/'09.3월 폐쇄, 캠프 룡/'10.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11.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11.10월 폐쇄)</p> <p>○ 한·미 양측은 ①「△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p> <p>□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룡,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p> <p>□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p>	<p>4개 본격 험프리스 SOFA 폐쇄 반환 캠프 동두천 오염 환경 개정,지속 즉시 절차 룡,이글 마켓 기준,정화 반환 전문가 합동 JWG 오염 조기 NSC 조기 국무조정 범정부 방안 SOFA 오염책임 시급 합동위 조건</p>

<p>환에 합의했습니다.</p> <p>□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이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p> <p>□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p>○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습니다.</p> <p>□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p>	<p>정화책임 지연 협의 정화책임</p> <p>소기 성과 한미 반환절차 평택 용산공원 개시 환경조사</p> <p>용산기지 국민 상징 고려,조선 일본군</p> <p>계기 한미동맹 용산시대</p> <p>폐쇄 협의</p>
---	--

'20년에는 극동공병단, 캠프 킴, 용산기지 일부,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부지, 8군 종교휴양소, 캠프 위커 헬기장, 성남 골프장, 캠프 잭슨, 모빌 일부, 해병포항과견대, 필승사격장 일부를 반환받았다.<표 9참조>

표 9. 2020년 기지반환 보도문 핵심단어 도출

기지반환 보도문(2020년)	핵심 단어
<p>제목 :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걸음으로... 기지반환 가속화 정부 합동 보도자료</p> <p>□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p> <p>○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 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p> <p>□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입니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p> <p>□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p> <p>□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p>	<p>12개 국민 정부 SOFA 용산기지 반환 오염정화 책임 개정 합의 오염관리 환경사고 개선 반환 대구 조속 코로나 의료원 캠프킴 공공주택 사회 경제적 NSC 용산기지 국무조정 관계부처 조율 소파 코로나 기지반환</p>

<p>○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 오늘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 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p> <p>□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되었습니다.</p> <p>*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p> <p>○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p> <p>□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 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히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p>	<p>합의 지연 경제적 사회적 소파 신뢰 기지반환 동맹 진전 성과 폐쇄 추진 순차 2개 반환 반환 용산공원 순차 정화 안심 잔류부지 환경 적절 추진</p>
--	---

보도자료의 핵심단어로 도출된 단어들도 분류를 해보았다. 각 문장에서 도출된 단어들은 해당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나열한 것이다.<표 10참조>

표 10. 연도별 정부 보도자료의 핵심 단어

구 분	핵심단어 도출
-----	---------

2007년	14개 반환절차 SOFA 국토 조속 정부 반환절차 의정부 파주 동두천 서울 제주 반환절차 국토 정부 SOFA 조속 활용 종료 의정부 춘천 화성
2010년	환경 공동 합의 반환 부산 하야리아 협의 미측 반환 지역개발 조속 선례 미측 오염 보완 기지 환경부
2019년	4개 본격 험프리스 SOFA 폐쇄 반환 캠프 동두천 오염 환경 개정,지속 즉시 절차 룡,이글 마켓 기준,정화 반환 전문가 합동 JWG 오염 조기 NSC 조기 국무조정 범정부 방안 SOFA 오염책임 시급 합동위 조건 정화책임 지연 협의 정화책임 소기 성과 한미 반환절차 평택 용산공원 개시 환경조사 용산기지 국민 상징 고려,조선 일본군 계기 한미동맹 용산시대 폐쇄 협의
2020년	12개 국민 정부 SOFA 용산기지 반환 오염정화 책임 개정 합의 오염관리 환경사고 개선 반환 대구 조속 코로나 의료원 캠프킴 공공주택 사회 경제적 NSC 용산기지 국무조정 관계부처 조율 소파 코로나 기지반환 합의 지연 경제적 사회적 소파 신뢰 기지반환 동맹 진전 성과 폐쇄 추진 순차 2개 반환 반환 용산공원 순차 정화 안심 잔류부지 환경 적절 추진

2.2. 보도자료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기사자료 분석과 보도자료 분석을 통하여 핵심단어들을 추출하여 설문 문항들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인 '21-'22년 사이에 기존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보도자료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은 '20년 이전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21년 이후 보도자료 작성에서 바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분석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이썬을 활용하여 단어 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파이썬의 프로그램 텍스트는 전처리를 위해 별도로 언어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입력하는 파일을 통해 입력하고 결과 화일을 통해 단어의 빈도수를 생산하여 이를 엑셀을 통하여 구조화하여 텍스트마이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직접 넷마이너에서는 텍스트 화일의 단어의 빈도수 확인은 제한되어 엑셀로 구조화하여 일부 접속어나 어미,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의 정제가 필요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어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분석하였다. 각 사용된 어휘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로 2003년 이후 정부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사용 단어는 541단어로 836회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사용 단어 중에 2회 이하로 사용한 단어 및 접속어 등은 제외시켰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3회 이상인 단어 39개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사용된 단어는 반환, 기지, 용산기지, 협의, 미군, 절차, 용산 등이었고, 뒤를 이어 정부 환경, 오염, 정화, 책임 등 쟁점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났다. 아래는 도출한 단어들을 <표 11>와 같이 나타낸 것이다.

표 11. 정부 보도자료의 핵심 단어 빈도수

단어	반환	기지	용산 기지	미	협의	미군	절차	용산	캠프	정부	환경
빈도수	51	45	21	20	19	18	17	17	15	15	11
단어	합의	지역	이전	부지	오염	합동	정화	관련	한	폐쇄	책임
빈도수	11	11	11	11	10	9	9	9	8	8	8
단어	사용	계획	추진	진행	지연	시대	소파	문제	개시	포함	주한
빈도수	8	8	7	7	7	7	7	7	7	6	6
단어	주문	조사	이번	위원회	양측	사회	사령부	논의	구역	관리	지속
빈도수	6	6	6	6	6	6	6	6	6	6	5

단어	조성	용산 구	상황	고려	개발	조건	전쟁	일부	일본	외국	역사
빈도수	5	5	5	5	5	4	4	4	4	4	4
단어	마련	동맹	공원	공동	가능	협정	해당	평택	김	체결	차질
빈도수	4	4	4	4	4	3	3	3	3	3	3
단어	중앙	조선	이하	요청	예정	시작	사격 장	발표	문서	동두 천	대구
빈도수	3	3	3	3	3	3	3	3	3	3	3
단어	기준	극동	군대	군	국방 부	국민	공병 단	경제	경기 도	검토	건설
빈도수	3	3	3	3	3	3	3	3	3	3	3

이를 통하여 단어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다시 도표화하여 분석하였다. 각 사용된 어휘들은 도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반환과 더불어 반환되는 기지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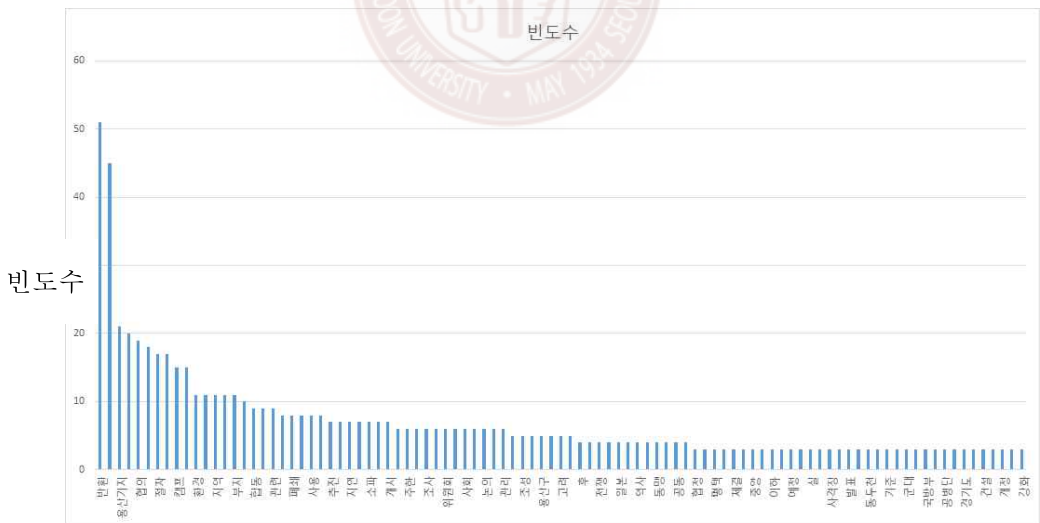


그림 9. 정부 보도자료의 핵심단어 그래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보도자료 분석을 해보았다. 클라우드 분석에서도 보는 것처럼 반환, 기지 단어와 어떤 협의 및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중요한 단어들이 ‘기지반환, 환경정화, 용산공원’과 같이 현재 주요 이슈가 되는 단어들이 주요 단어들로 분석이 되었다.<그림 10참조>



그림 10. 정부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보도자료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았다. 미군, 기지, 반환, 절차, 오염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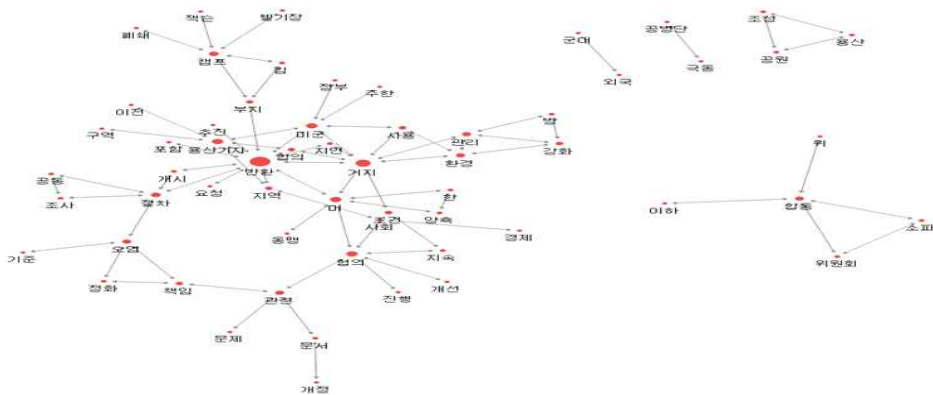


그림 11. 정부 보도자료의 워드 네트워크

2.3. 보도자료 분석이 주는 시사점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한미 합의, 협의나 성과 위주 단어들에 많이 분석되었고, 연구자가 직접 보도자료에서 다시 도출한 단어들과 텍스트마이닝을 한 핵심단어들을 비교해 봐도 상당수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도 정책결정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결정자들은 한미 합의를 도출하여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SOFA 합동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미측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초기 기지반환시 보도자료에서보다 2007년 청문회와 2010년 한미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보완과정을 통하여 2019년과 2020년 기지반환 보도자료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워드 클라우드와 워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어의 핵심어와 연결도를 재구성하여 표현해보았다. ‘기지 반환은 미군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오염된 부지의 환경 협력이 지연이 되어 합동위를 거쳐 정화 책임문제를 고려하여 폐쇄하게 되었다’라는 핵심단어로도 정부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사업에 따른 국가적 성과위주의 단어를 빈도 높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반환기사자료 토픽 모델링 분석

실제로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언론의 영향성이 크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진 현재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통한 정보 습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6]. 따라서 언론에서 높은 주목을 받는 주제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전달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언론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들은 국가적인 이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47]. 핵심 이슈를 다루는 단어들은 정부 정책에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도자료가 배부되는 시기에 언론기사들은 어떠한 기사들을 주로 다루었는지 살펴본다면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보도패턴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도자료가 배부되는 시기의 ‘미군기지 반환’관련 언론사 뉴스를 통해 해당 뉴스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와 워드클라우드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빅카인즈 서비스의 신문사는 중앙지 11개사(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를 중심으로 경제지 8개(매일, 한국경제 등), 지역 종합지 28개사(강원, 부산, 전북 등), 방송사(MBC, KBS, SBS 등), 전문지를 포함한 총 54개 언론사로부터 수집된 뉴스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분석기술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분석 서비스이다. 빅카인즈 서비스 시스템은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뉴스 수집 시스템, 뉴스 분석 시스템, 뉴스저장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8].

빅카인즈 서비스는 기사검색 이후 검색결과를 뉴스, 인용문, 사설로 검색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 및 시각화를 통하여 데이터, 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볼 수 있는 관계도, 시기에 따른 빈도수로 알려주는 키워드 트렌드, 워드 크라우드를 지원하는 연관어 분석, 특정 정보를 조건에 의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 추출 기능 등이 <그림 12>과 같이 있다.



그림 12. 빅카인즈 서비스 개념(빅카인즈 홈페이지 캡처)

LDA 분석은 분석에 사용된 잠재적 디리클레할당 모형은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률모형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토픽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각 단어의 발생확률이 클수록 학습 말뭉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다[49].

하단은 실제 계산 과정으로, d 번째 문서 l 번째 단어의 토픽 $Z_{d,l}$ 가 j 번째에 할당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n_{d,k}$ 는 k 번째 토픽에 할당된 d 번째 문서의 단어빈도이고, v_k, w_{dn} 은 전체 말뭉치에서 k 번째 토픽에 할당된 단어 $w_{d,n}$ 의 빈도, $w_{d,n}$ 은 d 번째 문서에 n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한다(Roberts, Stewart, & Airoldi, 2016). α 는 문서의 토픽분포 생성을 위한 디리클레분포 파라미터, β 는 토픽의 단어 분포 생성을 위

한 디리클레 분포 파라미터, K 는 토픽수, V 는 말뭉치에 등장하는 전체 단어수, A 는 d 번째 문서가 k 번째 토픽과 맺고 있는 연관성 정도, B 는 d 번째 문서의 n 번째 단어($w_{d,n}$)가 k 번째 토픽과 맺고 있는 연관성의 정도를 의미한다[49] [50].

$$p(z_{d,i} = j | z_{-i}, w) = \frac{n_{d,k} + \alpha_j}{\sum_{i=1}^K (n_{d,i} + \alpha_i)} * \frac{v_{k,w_{d,n}} + \beta_{w_{d,n}}}{\sum_{j=1}^V (v_{k,j} + \beta_j)}$$

$$= AB$$

그림 13. LDA 산정식

3.1. 기사자료 분석 결과

미군기지 반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언론 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지반환 발표 전월과 해당월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시기를 검색 기간으로 선정한 이유는 신문기사 분석사이트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 보도자료 발표 전후에 급격하게 기사검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림 14>과 같이 이시기를 측정 시기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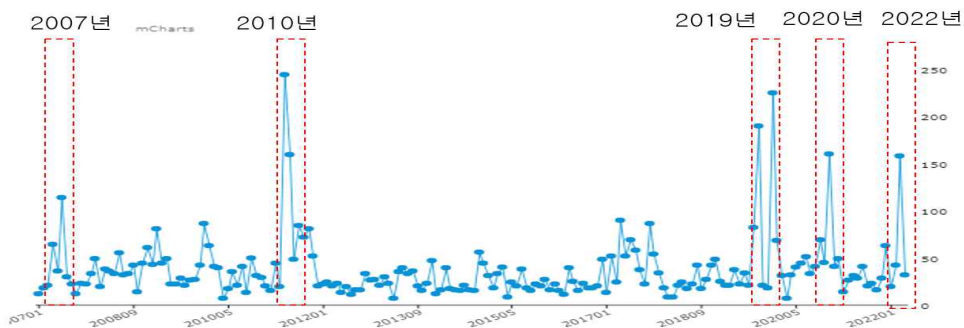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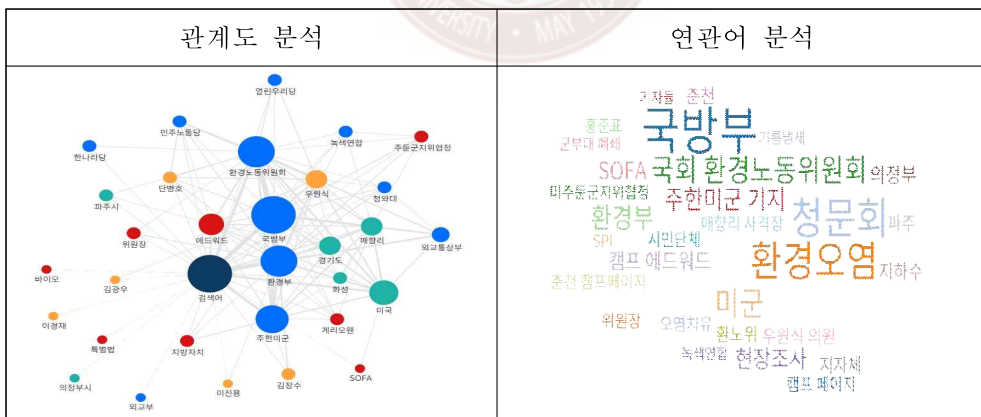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신문기사 발표 건수

빅카인즈를 통해 적용 검색어는 ‘미군기지 반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검색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기간 및 제외단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단계에서 검색결과가 뉴스, 인용문, 사설로 구분되어서 나뉘어지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분석 결과 및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관계도 분석³⁾,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정보 추출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관계도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활용하여 관계를 분석해 본다.

2007년 4월 13일 14개와 5월 31일 9개의 기지반환이 이루어진 시기 정부 발표와 맞춰서 당시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총 뉴스 검색은 152건이 검색되었다. 당시 용산기지관련 개발시기여서 ‘용산’을 제외 단어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당시 기본단어를 제외하고 환경오염, 춘천, 캠프 에드워드, 매향리 등이 환경 및 지역관련 단어들이 <표 12>와 같이 주로 검색되었다.

표 12. 2007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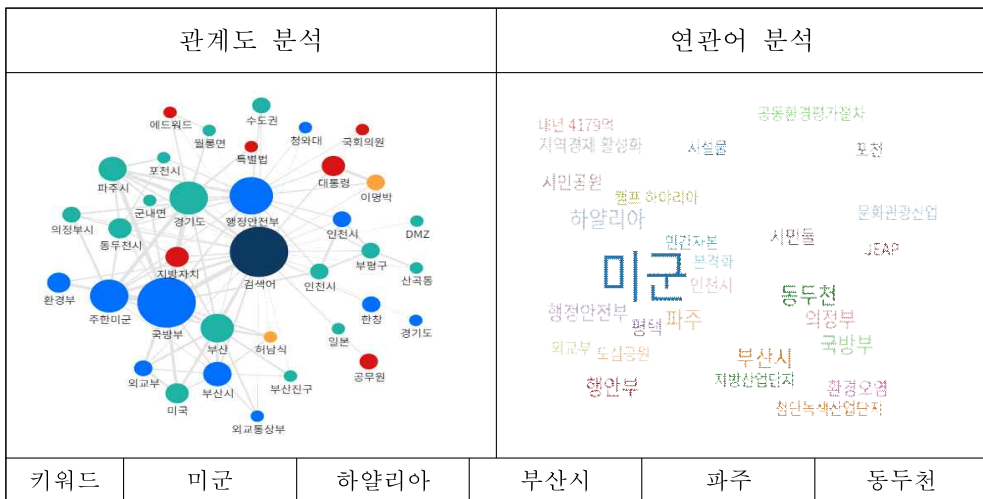


3) 관계도 분석(관계도 분석 개체명 추출방식)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상당어구를 추출한다. 이후 추출된 명사상당어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Structured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 하며 개체명의 관련기사 건수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키워드	미군	환경오염	국방부	환경부	주한미군
빈도수	758	255	164	133	121
키워드	지하수	청문회	의정부	SOFA	오염치유
빈도수	121	118	105	76	66
키워드	춘천	국회 환노위	지자체	현장조사	캠프에드워드
빈도수	64	50	43	39	34
키워드	시민단체	캠프 페이지	평택	매향리사격장	치유비용
빈도수	31	28	26	25	25
키워드	녹색연합	춘천캠프 페이지	위원장	기름냄새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빈도수	18	12	12	8	6

2010년 1월 13일 캠프 하야리아 기지 등 반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보도 자료가 나왔다. 이 시기에 검색된 뉴스 검색은 총 155건이 검색되었다. 기본단어를 제외하고 하야리아, 부산시, 파주, 동두천 등 지역관련 단어들 <표 13>과 같이 주로 검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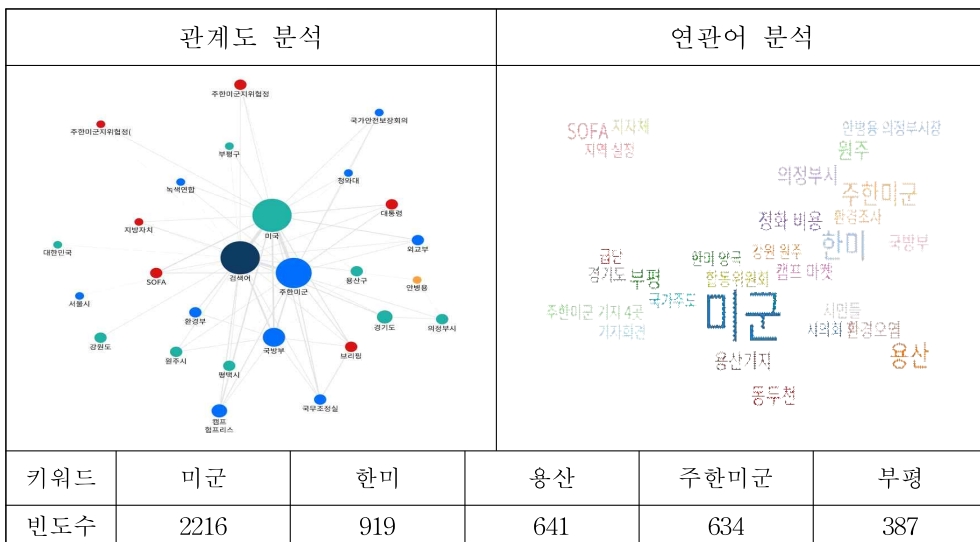
표 13. 2010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빈도수	760	153	151	148	137
키워드	국방부	행안부	의정부	평택	행정안전부
빈도수	135	122	110	81	72
키워드	시민들	시민공원	환경오염	인천시	포천
빈도수	71	69	53	44	44
키워드	지역경제활성화	캠프하야리아	외교부	민간자본	본격화
빈도수	30	28	28	24	24
키워드	시설물	문화관광산업	첨단녹색산업단지	도심공원	지방산업단지
빈도수	23	21	19	19	18

2019년 12월 11일 그동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던 한미협 의가 재개되면서 4개 기지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국무 조정실 TF를 중심으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 검색된 뉴스 검색은 총 294건이 검색되었다. 기본단어를 제외하고 용산, 부평, 원주, 동두천, SOFA, 정화비용 등 반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단어들 이 <표 14>과 같이 주로 검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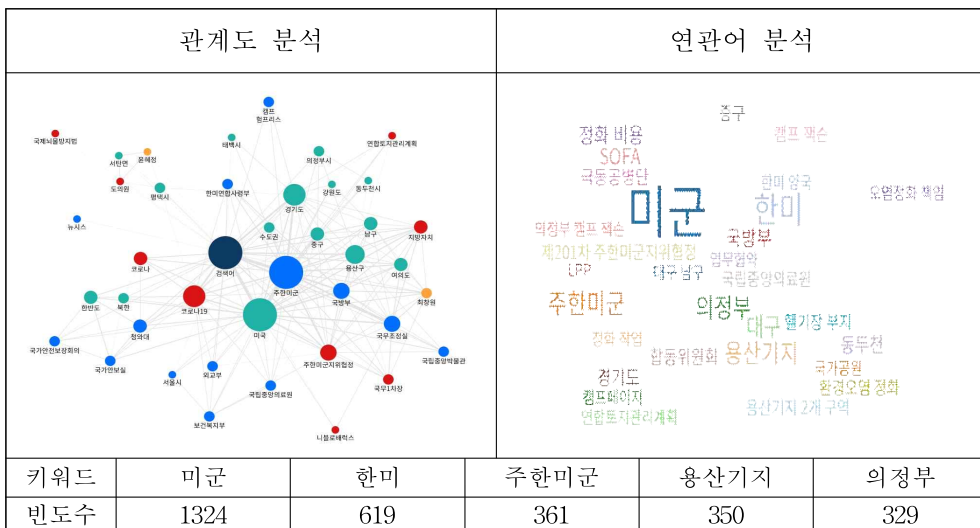
표 14. 2019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키워드	원주	동두천	SOFA	정화 비용	의정부시
빈도수	335	284	280	271	268
키워드	용산기지	환경오염	캠프마켓	국방부	경기도
빈도수	213	164	153	147	122
키워드	시민들	합동위원회	지자체	국가주도	기자회견
빈도수	99	84	79	57	56
키워드	사회회	의정부시장	강원 원주	환경조사	한미 양국
빈도수	50	43	39	31	30

2020년 12월 11일 그동안 반환이 지연되었던 12개 기지에 대해 대규모 반환이 국무조정실 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시기에 검색된 뉴스 검색에서 이 시기를 고려하여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총 203건이 검색되었다. 기본단어를 제외하고 용산기지, 의정부, 대구, 국방부, SOFA, 정화비용 등 지역 및 환경관련 단어들이 <표 15>과 같이 주로 검색되었다.

표 15. 2020년 신문기사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키워드	대구	국방부	SOFA	정화 비용	동두천
빈도수	300	187	181	180	161
키워드	경기도	합동위원회	극동공병단	캠프 잭슨	중구
빈도수	149	100	95	84	71
키워드	국립중앙의료원	환경오염 정화	제1차 SOFA	헬기장 부지	용산기지개 구역
빈도수	68	65	58	57	51
키워드	대구 남구	한미 양국	국가공원	정화 작업	캠프페이지
빈도수	48	34	30	29	29
키워드	연합토지관리계획	IIP	의정부 캠프 잭슨	오염정화 책임	업무협약
빈도수	29	27	25	23	13

3.2. 기사자료 분석이 주는 시사점

정부의 보도자료 발표시기를 기준하여 기사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지역관련 단어들과 일부 환경관련 단어들이 관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 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단어에서 대부분 지역관련 단어들과 환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정부 보도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합의, 성과를 집중한 정부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보도자료나 발표는 이러한 과거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단어 빈도나 경향을 분석하여 작성한다면 국민들의 의도에 훨씬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판단한다. 여기에서 보도자료가 작성된 이후 보도자료가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자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사후검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3. '22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 보도자료 및 기사자료 분석

이러한 보도자료 분석과 빅카인즈(BigKinds) 사이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정부의 보도자료는 정책결정자들이 성과를 위주로 작성하여 나타내고 싶어하고, 신문기사는 지역명칭을 위주로 작성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보도자료와 이를 분석하는 기사 사이에는 이러한 시각 차이가 있었음을 핵심키워드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내용들을 바탕으로 '22년도 보도자료시에는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임무에 임하였다. 당시 실무자들사이에서는 성과를 위주로 제목과 내용을 기술하고 싶어했다. 여러 번의 토의 끝에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분석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여 제목과 핵심내용을 반영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결정자들은 반환과 관련된 의미부여를 위해 면적이나 기지반환의 의미 등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사용한 의도와 신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용산기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을 배치함으로써 이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은 차후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2년에는 과거 '20년도에 이어 용산기지 일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모빌 일부를 반환받았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환경관련 문서개정 성과'와 같은 반환의 의미부여보다는 '의정부 레드클라우드 등도 반환'과 같은 지역명칭을 모두 포함하여 제목과 핵심내용을 작성토록 여러차례 설득하여 발표할 수 있었다. 성과보다는 지역명칭을 넣는 것에 대해 반대도 있었으나,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설득이 된 것이다. <표 16참조>

표 16. 2022년 정부 보도자료 핵심단어 분석

기지반환 보도문(2022년)	핵심 단어
<p>제목 :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도 반환-</p> <p>□ 정부는 오늘(2.25,금)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p> <p>□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오늘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며, 의정부시에서 전자 상거래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중심으로 탈바꿈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1천㎡)도 반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하여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p> <p>○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p> <p>□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위</p>	<p>의정부 반환 SOFA 캠프 레드클라 우드 문서개정</p> <p>단계 환경</p> <p>전자 상거래 경제 활성화 수해예방</p> <p>국민 협의체</p> <p>공유 대응 공동</p> <p>보완</p>

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통해,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지 조율 협업 SOFA 진정 설명
---	--

2022년 정부 보도자료에서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단어를 분석해본 결과이다. 반환, 의정부 지역, 환경, 협업/협의, 한미 순(5회이상)으로 나타났다. 접속사나 접미사, 그리고 1회성 사용된 단어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분석하였다. 삭제된 단어는 ‘가능성, 가동하여, 개선, 경제, 공유, 국무조정실, 나가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등, 또한, 끝’과 같은 단어들이다. 일부 단어들은 의정부 지역, 정부, 반환/협의 등 유사 단어끼리는 묶어서 표현하였다. <표 1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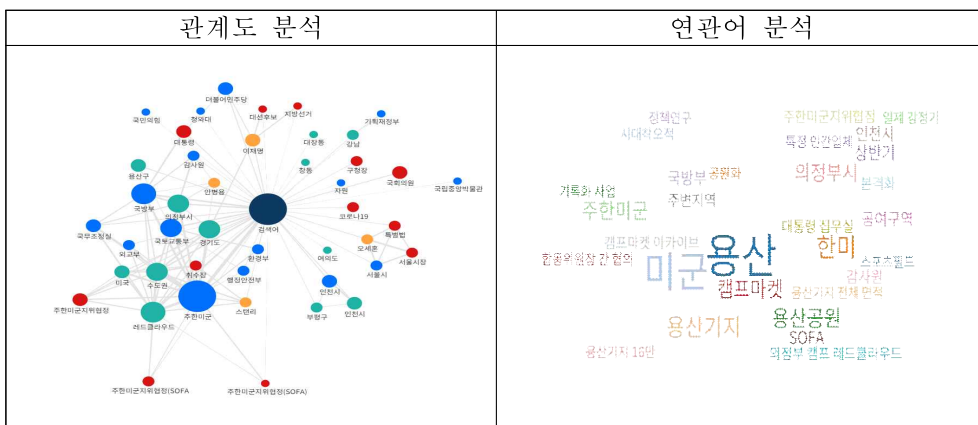
표 17. 2022년 보도자료 연관어 및 핵심단어 빈도수 분석

연관어 분석					
키워드	의정부 지역	반환	환경	협업/협의	한미
빈도수	9	9	6	5	5

키워드	캠프	주한미군지 위협정	정부	레드클라우 드	용산기지
빈도수	4	4	3	3	3
키워드	추진전략	미측	양측	올해	협의를
빈도수	3	2	2	2	2
키워드	개선	결과	기지	마련	물류단지
빈도수	2	2	2	2	2
키워드	미군기지	상반기	관계부처가	국민	규모
빈도수	2	2	2	2	2
키워드	성과	수해	조성	16.5만㎡	83만㎡
빈도수	2	2	2	1	1

빅카인즈(BIGKinds)로 본 '22년 단어 분석결과는 '19년에는 동두천, 원주, 부평, 의정부시 등이 주로 나타났고, '20년에는 용산기지, 평택시, 용산기지 2개구역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22년 보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검색한 결과 총 기사는 77건이 보도되었다. 기본단어를 제외하고 용산기지, 의정부, 대구, 국방부, SOFA, 정화비용 등 지역 및 환경관련 단어들 이 주로 검색되었다. <표 18참조>

표 18. 2022년 보도자료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키워드	용산	미군	한미	용산기지	용산공원
빈도수	398	342	155	128	108
키워드	주한미군	캠프마켓	의정부시	상반기	국방부
빈도수	105	96	85	54	46
키워드	SOFA	인천시	공여구역	감사원	주변지역
빈도수	43	39	39	35	34
키워드	캠프마켓 야야브	대통령 집무실	주한미군지위협정	의정부 캠프 래드클라우드	본격화
빈도수	22	22	21	19	16
키워드	스포츠필드	시대착오적	공원화	용산기지 전체 면적	기독교사업
빈도수	12	10	9	7	7
키워드	일제강점기	합동위원장 간 협이	용산기지 16만	특정 민간업체	정책연구
빈도수	6	6	6	5	4

정부 보도자료는 한미 반환을 위해 소과합동위, 환경문제 등의 미측과 합의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나, 언론에서는 반환지역 단어를 중심으로 즉시 반환하여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결정자와 국민들(기사)과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치요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요소가 중요하고, 용산기지(공원)를 개발하는데 있어 지역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4. 미군기지 반환 보도자료 및 기사자료 LDA 토픽 분석

LDA(Latent Dirichlet Analysis) 토픽 분석은 다수의 단어들로 구성된 비구조적 문장과 이들로 구성된 텍스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한 토픽 할당 모델이다[22]. Blei 등은 LDA 토픽 분석은 알고리즘 기반의 확

를 모델로 어떤 주제의 문서, 문헌들이 단어 및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특정 단어가 다수 포함된 문서들이 특정주제 문헌에서 높은 확률을 보이게 되고 이를 특정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림 15>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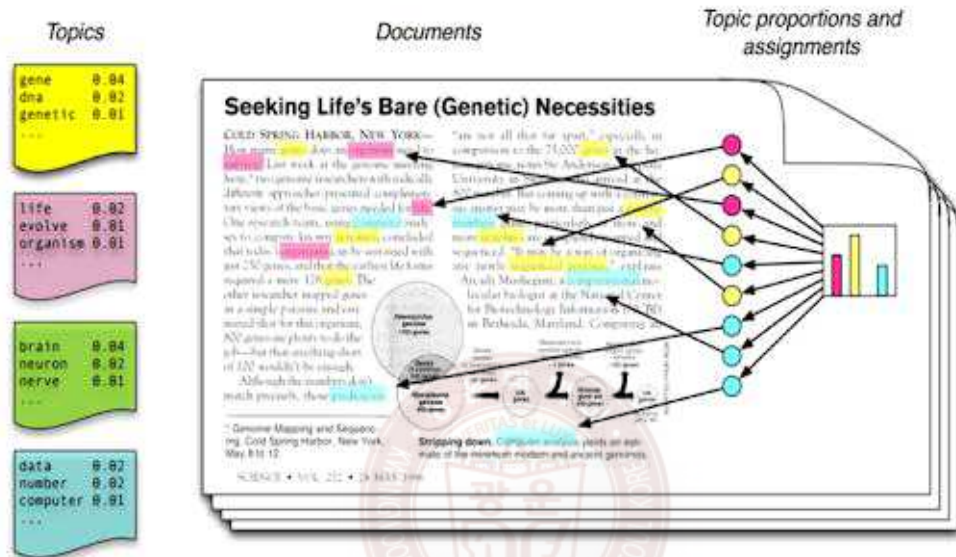


그림 15. LDA 토픽 모델링(Blei, 2012)

최적의 토픽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특정 확률모델이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51]. 토픽 모델의 수에 따라 구조는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토픽 수가 너무 적으면 대부분 단어가 한 토픽에 중복이 되게 되고 너무 많으면 토픽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수집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토픽 수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혼잡도(Perplexity), 일관성(Coherence),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코사인 변이도(cosine Variation), 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4 가지 이러한 토픽 수 결정관련 지표의 계산 값은 아래<표 19>와 같다.

표 19. 코사인 유사도 평균, 분산, 예측 정확도, 일관성 측정 값 정의

Topic N	토픽의 수
Cos Sim	토픽간 코사인 유사도의 평균을 10회 시행한 것의 평균
Cos Var	토픽간 코사인 유사도의 분산을 10회 시행한 것의 평균
Perplexity	예측 정확도(낮을수록 정확하게 예측)
Coherence	토픽의 일관성을 측정(높을수록 일관성이 높음)

그리고 4가지 토픽 수에 대한 지표 계산 값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코사인 유사도 평균, 분산, 예측 정확도, 일관성 측정 결과

Topic N	Cos Sim	Cos Var	Perplexity	Coherence
3	0.20844	0.01339	-6.96898	-1.41802
4	0.2233	0.01373	-6.93624	-1.61198
5	0.18196	0.01461	-6.92588	-2.23268
6	0.17403	0.01448	-6.91965	-2.52464
7	0.17592	0.01595	-6.91191	-2.43623
8	0.16527	0.0173	-6.89492	-2.46176
9	0.16309	0.01599	-6.90051	-2.64497
10	0.15595	0.01479	-6.89538	-2.76014
11	0.14901	0.01665	-6.8993	-2.76494
12	0.14398	0.0154	-6.90601	-2.7887
13	0.13565	0.01468	-6.89082	-2.87994
14	0.12513	0.01501	-6.88993	-3.02218
15	0.13018	0.01352	-6.90771	-2.90685

이러한 기준이 다른 지표와의 일반화를 위하여 T점수로 변환하여 가중치 없이 계산한 값이 <표 21>와 같다.

표 21. 토픽 수 결정을 위한 T 점수

Topic N	Cos Sim	Cos Var	Per-plexity	Co-herence	합계	순위
3	34.14	64.42	76.99	72.99	248.53	1
4	28.84	61.44	61.66	68.85	220.79	2
5	43.59	53.75	56.81	55.62	209.77	4
6	46.42	54.88	53.90	49.40	204.60	5
7	45.74	42.03	50.27	51.28	189.33	10
8	49.54	30.22	42.32	50.74	172.82	13
9	50.32	41.68	44.94	46.83	183.77	11
10	52.87	52.17	42.53	44.38	191.96	9
11	55.35	35.91	44.37	44.28	179.90	12
12	57.14	46.84	47.51	43.77	195.26	7
13	60.11	53.13	40.40	41.82	195.47	6
14	63.87	50.25	39.98	38.79	192.89	8
15	62.07	63.28	48.31	41.25	214.90	3

지표별 T 점수의 합계와 순위로 볼 때 6개 이하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이상일 때는 값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픽수가 3~4개일 때 높은 값을 보이나, 시점별 신문기사 키워드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5~6개가 이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5개로 결과 값을 결정하였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른 신문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로 각각 분석하여 2007년, 2010년, 2019년, 2020년 선정된 토픽은 아래와 같다. 보는 것과 같이 연도별 토픽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우선 2007년에는 발표와 동시 그동안 반환되었던 기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와 같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반환되는 기지로 관심이 고조되었다.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으나, 단순 기지명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국민이나 주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여 갈등이 점점 표면화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2009년 환경관련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부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기지가 반환하게 되었고, 특히,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다수로 검색이 이루어졌다. 2019년도에는 장기간 지연된 기지반환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를 통해 이루어지 되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당시 정부 최대 규모인 12개 기지를 반환받았고, 용산기지를 본격적으로 반환하게 됨으로써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2년 보도자료는 대통령 선거에서 갑작스럽게 용산기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표 22>와 같이 알아보았다.

표 22. 연도별 토픽 분석결과

구분	Topic	1st	2nd	3rd	4th	5th
2007	지역문제	미군기지	경기	정부	파주	대구
	환경오염	반환	오염	용산	주한	한미
	미군기지	경기	국방부	창군	2배	사설
	갈등발생	환경	국방부	경기	민노당	창군
	기지반환	미군	미군	용산공원	한국	파주
2010	정부기관	반환	미군	경기	정부	하야리아
	갈등점증	하야리아	경기	정부	활용	주한
	기지이전	미군	반환	정부	부산	타결
	지역갈등	부산	정부	경기	캠페이지	미군기지
	갈등진전	부산	타결	하야리아	반환기지	미군기지
2019	시민갈등	원주	미군기지	동두천	국방부	박남준
	지자체의사	반환	의정부시	부평	경기도	시민
	오염갈등	경기도	의정부시	오염	논의	방위비
	관련기관	정부	개시	부평	오염	미국
	지역갈등	미군	주한	용산	부평	인천시
2020	환경오염	오염	용산기지	캠프워커	반환	파주시
	지역개발	캠프워커	용산공원	미군기지	숙원	의정부
	기지활용	오염	미군기지	대구	대구안실련	캠프워커
	갈등완화	용산	미군	대구	전국	주한

구분	Topic	1st	2nd	3rd	4th	5th
	반환전환점	반환	대구	한미	138년	정부

기지반환이 이루어진 시기별로 중요사항을 정리하고 발표된 시기별로 기지반환의 의미와 중요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그림 16>와 같다. 기지이전 갈등이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성되기 시작하였고, 갈등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장기간 진전과 잠복해 있다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가 범정부 TF에 의해 보도자료가 구체화되면서 안정화 및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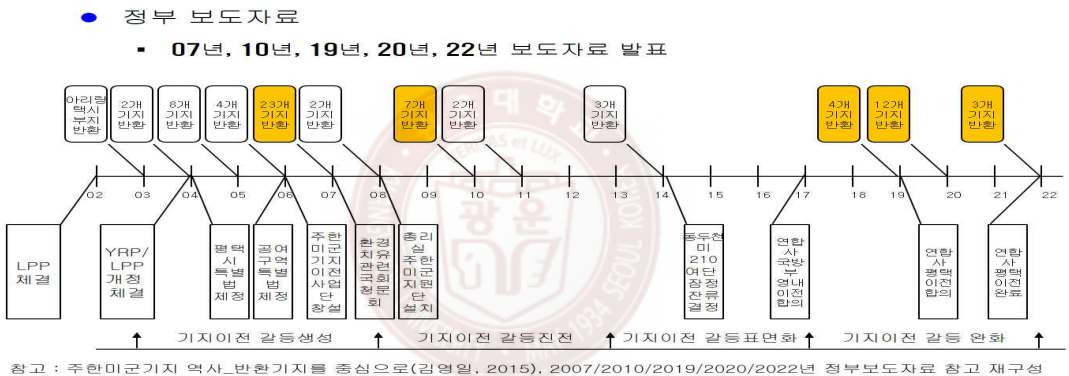


그림 16. 기지반환관련 정부 보도자료 경과

4. 소결론

정부 보도자료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결과 성과위주 단어들 많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반환, 기지, 협의, 소파, 용산, 미측, 합의, 한미, 합동위, 지연, 환경 단어(6회 이상 사용단어) 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연구자가 보도자료의 각 단어를 보고 뽑은 문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기사검색 사이트로 본 단어들은 지역중심 단어들 주로 검색이 되었다. 이런 단어들은 2007년에는 환경오염, 국방부, 환경부, 지하수, 청

문회, 의정부, SOFA, 오염치유 단어가 쓰였고, 2010년에는 하야리아, 부산시, 파주, 동두천, 2019년에는 동두천, 원주, 부평, 의정부,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 즉시 반환이 그리고 2020년에는 용산기지, 평택시, 상임위원들, 용산기지 2개 구역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정부 보도자료는 한미 반환을 위해 SOFA합동위 등의 미측과 합의를 중점으로 두고 발표하나, 언론에서는 반환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반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를 중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다. 2022년 보도자료 분석 결과에서 보면 주요 단어로 도출된 단어가 의정부, 환경, 협업, 한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 빅카인즈 분석은 용산, 의정부, 용산공원 등 비교적 유사하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관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나 시각차를 줄일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보도자료 작성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여 관심사를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자꾸 의문점만 생기게 되어 결국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 및 홍보 자료는 작성시 신문기사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환류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 후에는 주민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적용한다면 주민의 요구도 만족시키면서 원활하게 사업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V.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가치 차이 분석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사회 가치 분석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가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어떤 가치들을 주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기지반환에 따른 기지반환의 가치와 용산공원에 조성에 따른 가치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병행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의 가치 차이를 알아보고, 또한 정책결정자의 의견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1.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2014년) 결과를 이렇게 말하였다. 연구에서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비를 8.86조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것이었다. 사업비 중에서 사업지원비를 제외하고 건설비는 7.5조 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유발효과를 건설비 7.5조 원에 생산유발계수(2.22)를 곱하여서 16.7조원이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건설비 7.5조 원에 부가가치유발계수(0.7)을 곱하여 5.52조원이었고, 고용유발인원은 건설비 7.5조 원을 10억 원당 고용유발계수(14.57)를 곱하여 109,653명으로 산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12년도 한국은행의 건설업 생산유발계수 2.22, 부가가치유발계수 0.7,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4.57명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39]. 이러한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한측과 미측이 각각 사업비를

들어 주한미군기지를 이전 통합하는 사업이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미 대통령 방한 당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2017년 11월에 대한 미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당시 미험프리스 기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107억불에 달하는 기지 건설비용의 92%를 부담해 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한화로 표기하지 않아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환율로 따진다면 약 14조 7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물론 2017년 12월 종가기준 환율은 1071.4원이었음을 고려할 시 금액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층의 건설비가 약 7.5조(2010년)였음을 고려한다면 미층의 건설비용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투입비용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가치를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이 불가하니 논문에서 밝힌 건설비용으로 설명하였음을 밝혀둔다

1.2. 기지 반환에 따른 가치

미군기지는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환되었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면적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가 발효된 직후인 1969년에는 277개 기지 4억 2,644만 평이었다.⁴⁾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공여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후 1970년대 초 대규모로 감소되었고, 이후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총 91개 지역, 40개 기지(YRP 9개, LPP 31개)를 평택과 대구로 이전하여 2개 권역, 49개 지역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면적으로 보면 기존 기지의 점유면적은 2억 4,197만㎡이며, 이전 지역의 면적은

4)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기지 공여지 면적

7,675만 m^2 이다[39]. 여기서는 YRP/LPP에 의해 반환되는 80개 기지를 기준으로 알아본다. 80개 기지의 경제가치는 단순 계산하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면적을 알고 기준 시가를 적용하더라도 개발되는 부지의 모습을 보면 판단이 쉽지 않다. 반환 미군기지의 경제가치를 모두 산정할 수 없으나, 반환된 기지 면적만으로 따져보면 약 1억 7,795만 m^2 이다. 이를 지역 및 반환시기를 구분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보고 싶지만, 이는 감정평가라는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의미는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지 반환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 것인가 각 반환기지 인근의 최근 토지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후 감정평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반환기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모든 산정가치들이 지자체나 활용 주체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가치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가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은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가치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다만 일각에서 서울 용산기지 본체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화하기로 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업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때 본체 부지가격을 평당 1천만으로 가정시 약 8조원에 이르고, 5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4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핵심 재원이 사업추진을 통하여 용산공원 조성될 경우의 경제 가치라는 것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도 있다[39]. 논문에 나온 바

와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용산공원의 환경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보면 ‘권역별 용산공원 조성의 환경편익 추정’연구에서 살펴보면 용산공원의 환경가치 추정치는 서울시 연간 가구당 14,358원으로 추정하였고 서울시의 가구수 4,046,086세대(2007년 기준 서울시 가구수)를 곱하여 도출한 추정치는 연간 약 581억원이다. 용산권역은 높은 환경가치 추정치가 나왔고 비용산권역은 낮은 환경가치 추정치가 나왔다[52]. 12년 전 환경가치 추정치로 지금으로 따진다면 더 높은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2가지만 놓고 본다면 부지반환에 따른 매각비용으로 약 8~40조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인 환경가치 추정치를 놓고 본다면 연간 약 581억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때 당시가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규모 공원조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원으로로서 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조성 이후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사회적 인식조사 분석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에서 주요 토픽으로 검색한 항목과 더불어 주요 논문에서 도출하였다. 특히 경제사회적 가치요소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관련 논문 중에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문은 ‘군사시설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0]’가 기준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였다.

2.1. 정부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주요논문 항목 설계

미군기지 이전관련 정부 보도자료에서의 주요 단어와 신문기사에서 나온 주요 단어들을 도출하여 설문 항목들을 설계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핵심단어들이 도출되었고 주요 논문들과 비교하여 출처를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 분석한 논문과 정부 보도자료, 신문기사에서 분석한 단어들을 <표 23>과 같이 분석하여 보았다.

표 23. 설문항목 설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출처		
			주요논문	정부보도자료	신문기사
정책차원 효과	국민 권리 보장 (소유권 측면)	대규모 공여지 해제	김경수, 이남석, 이도제	반환, 지역,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국방부, 행안부
		안전지역권 해제	이남석, 이도제	반환, 지역, 사회	문화관광산업, 지자체, 민간자본, 시민공원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박영순, 이도제	용산기지, 사회, 역사	용산기지, 국방부, 외교부
	균형 발전 (국토 개발 측면)	기반시설 확충	윤철기, 이도제	평택, 지역, 건설	평택, 경기도, 부평, 동두천
		반환기지 개발	이남석, 이도제, 이경환, 강소영	반환, 지역, 동두천, 군대	동두천, 의정부, 민간자본, 도심공원
		용산 국가공원 조성	김성욱, 이도제	용산기지, 용산구	용산, 국가공원,

			손민수, 박영순	중앙, 사용	치유	
	한미 동맹 강화 (안보 측면)	작전적, 전략적 효과	이수형, 이도제, 이균철	평택, 합동, 동맹, 관리	평택, 한미 양국	
		국가안보 강화	이도제, 이수형, 이균철	평택, 전쟁, 동맹, 협정	평택, 국방부	
경제차원 효과	사업 효과	평택기지 건설사업	윤철기, 이도제	평택, 환경, 지역	평택, 주한미군	
		평택주민 편의시설 사업	이도제	평택, 주한, 부지	시민들, 지역경제	
	생산 산업 측면	반환기지 환경정화 사업	이남석, 강채영	환경, 소파, 협의	정화비용, 오염치유	
		반환기지 개발사업	이남석	반환, 지역, 경기도	시민공원, 지자체	
		용산 국가공원 조성사업	김성욱, 박영순	용산기지, 환경	국가주도, 국가공원	
	건설 기술 학습 효과	미국 건설기술 습득	홍덕기, 황재홍	사용, 조성, 동맹	평택	
		토양환경정화 기술 습득	강채영, 이남석	환경, 부지, 소파	오염치유	
		국산자재 세계시장 진출	황재홍, 백명창	사용, 추진, 건설	시설물	
	주둔 여건 개선 (소비 측면)	미군가족 동반율 향상	윤철기, 이도제	캠프, 사용, 주한	주한미군, 평택	
		시설운영 유지비 감소	이도제	캠프, 지역, 건설	평택, 용산기지	
	지역 경제 유발 효과	건설인력 유동 소비증가	이도제	건설, 평택, 지역	평택, 시설물	
		지역 내 소비효과	이남석, 강미	지역, 부지, 평택	평택	
		지역 내 인구유입	강미, 김수우	지역, 조성, 평택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세수 증가	김수우, 우정범	지역, 평택, 건설	평택	
	주요 이슈	미측 오염정화	미측 오염정화 책임 요구	박기주, 이남석, 강채영	반환, 환경, 소파, 사용, 협정	환경오염, 환경부, 지하수, 청문회
			한측 미군기지 오염치유	박기주, 이남석, 강채영	반환, 환경, 소파, 사용, 협정, 경기도	정화비용, 오염치유
협정개정 우선			박기주, 이남석, 강채영, 심영규	협의, 합동, 지연, 소파, 협정, 개정	SOFA, 한미양국, 외교부, 국회환노위	
계획된 미군기지 반환		계획된 미군기지 반환	우정범, 박민형	반환, 절차, 폐쇄, 동맹, 협정	한미, 국방부	
		필수기지 미반환	우정범, 박민형	사용, 지연, 전쟁, 동맹, 공동, 강화	주한미군, 동두천	
용산공원 조성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	채영근, 손민수	반환, 협의, 논의, 용산기지, 조성	용산기지, 국가주도, 국가공원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손민수	사회, 논의, 건설	본격화, 시설물, 민간자본
--	--	---------------	-----	------------	----------------

2.2 경제사회적 가치요소 설문항목 도출

이 연구에서는 미군기지가 주로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군기지를 추진하는 입장에 따라 정책수혜자(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실무자(미군기지반환 임무 수행)들간의 가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정보의 노출에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주민)들은 본인의 가치 차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정책 실무자들은 이러한 정책수혜자(주민)가 제시한 결과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생각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에서는 정책결정자는 국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책 대안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방안을 택하는 행정 기관의 동적인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수혜자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미군기지가 이전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주해간 지역의 주민설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미군기지 반환업무와 관련된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해보고, 설문을 1차는 주민과 동일한 설문을 그리고 2차에서는 주민들의 설문결과 정보를 노출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이 1차 결과와 2차 설문결과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를 분석해보았다. 다음과 같이 설문을 항목들을 논문, 정부보도자료 및 신문보도기사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설계해 보았다.<표 24참조>

표 24.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경제사회적 효과 설문지 항목

설 문 문 항

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경제적(사업차원) 효과가 있다.	
1-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건설산업측면 사업효과가 있다. *건설비 집행에 따른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
1-1-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평택기지 건설사업 효과가 있다. *2010년 주한미군기지이전 건설비는 7.5조 추산
1-1-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평택주민 편의시설사업 효과가 있다. *2010년 주한미군기지이전 편의시설비는 1.36조 추산
1-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생산산업측면 사업효과가 있다. *기지 환경정화 개발, 반환기지 개발 등에 따른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
1-2-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반환기지 환경정화 사업 효과가 있다. *오염된 반환기지 오염정화를 통한 고용 증가
1-2-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효과 가 있다. *반환된 기지의 개발을 통한 생산 및 고용 증가
1-2-3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용산 국가공원 조성사업 효과가 있다. *용산공원 조성을 통한 생산 및 고용 증가
1-3	주한미군이전사업은 美 건설기술 학습효과가 있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 국방성 기준을 적용하면서 미국 건설기술 습득
1-3-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미국 건설기술 습득 효과가 있다. *미 국방성 기준의 공동사업관리를 통해 기술 습득
1-3-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국산자재 세계시장 진출여건 확대 효과가 있다. *수입자재 중 285개 품목을 국산자재로 전환, 자재 국산화율 77% 달성
1-4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소비측면 주둔여건개선 측면의 효과가 있다. * 가족동반 3년까지 근무제도 등을 발전시키고 있고, 통합으로 유지비용 감소
1-4-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미군가족 동반율 향상 효과가 있다. *주둔여건 개선으로 가족 동반 3년까지 근무제도 발전시키고 있음
1-4-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美시설운영 유지비 감소 효과가 있다. *평택 등으로 통합이전에 따른 시설운영 유지 소요 감소
1-5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 공사 참여로 고용증가, 체류비용, 유동비용 증가로 이어짐
1-5-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건설인력 고용·체류·유동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 *공사를 위한 고용증가와 공사참여를 위한 체류비용, 공사참여인구의 유동비용 등이 증가
1-5-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기지운영 유지 및 지역내 소비 효과가 있다. *평택 등으로 이전에 기지운영 비용 및 지역내 소비 증가 효과
1-5-3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지역내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통한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지역내 고용 및 소비증가
1-5-4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지방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 *지역내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내 세수 증가효과가 발생함
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사회적(정책차원) 효과가 있다.	
2-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국민권리 보장효과가 있다.

	* 미측에게 공여해준 공여지역에 대한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수도 서울 중심지에 대한 민족 자긍심을 회복 계기
2-1-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대규모 공여지 해제 효과가 있다. *177.6km ² 공여지 해제
2-1-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안전지역권(군사보호구역) 해제 효과가 있다. *2.4km ² 군사보호구역 해제
2-1-3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가 있다. *서울 중심지에 대한 국가공원 조성으로 용산 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
2-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균형발전 효과가 있다. * 기지건설로 인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반환기지 개발로 이전지역 자본유치가 가능하고 용산공원 조성
2-2-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효과가 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2-2-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반환기지 개발 효과가 있다. *옛 미군기지에 대학 캠퍼스나 공원등으로 조성
2-2-3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용산 국가공원 조성 효과가 있다. *용산지역에 국가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
2-3	주한미군이전사업은 한미동맹 강화(안보) 효과가 있다. *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와 인접한 지역에 미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
2-3-1	주한미군이전사업은 韓美 작전·전략적 효과가 있다. *한미 연합 대비태세 및 대북 억제력 향상에 기여
2-3-2	주한미군이전사업은 국가안보 강화 효과가 있다. *평택기지 중심으로 기반시설인 철도, 도로를 통하여 전방지역으로 신속한 전력 전개가 가능

특히, 미군시설이전에 따른 경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혜자(주민)와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알아보고, 미군기지 이전관련 미군기지 오염정화, 계획된 반환기지 반환여부, 용산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식차를 확인해봄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조정과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고찰해보고 이를 놓고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하여 알아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의 현안에 대해서도 크게 3가지를 도출하여 이를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에게도 질문하였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리고 한·미간 협의에 의해서 미포병여단이 잔류하게 됨에 따라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를 반환해야하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모두 조성해야하는지는 새롭게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포함하여 아래<표 25>과 같이 설문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표 25.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핵심이슈 설문지 항목

3. 주한미군기지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3-1	반환협상을 통하여 미측에게 끝까지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야한다.
3-2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한측에서 먼저 미군기지 오염치유를 해야한다.
3-3	오염정화보다는 SOFA 또는 협정개정을 먼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4. 주한미군기지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 한다.	
4-1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한다.
4-2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 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한다.
5.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5-1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5-2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2.3. 정책수혜자와 정책결정자 의식변화 가설

여기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사이에서 검증해볼 가설들을 설정해 보았다. 특히,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사이의 정부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항목들을 신문기사 즉 정책수혜자들과의 인식 차이를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정성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는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본다.

이 연구를 위해 몇 가지 가설을 <표 26>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해 보았다.

표 26.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의식 변화 가설

가 설
[가설 1]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책적 효과를 우선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 2] 정책수혜자들은 정책적 효과보다 경제적 효과를 우선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 3] 정책결정자들과 정책수혜자들간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 4]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보다 미측의 오염정화문제에 대해 SOFA 개정이나 신속한 오염치유(한측 우선치유)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 5]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보다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받는 것보다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 6]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보다 국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 7]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 가치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미측의 오염정화문제에 대해 SOFA 개정이나 신속한 오염치유(한측 우선치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변화할 것이다.

[가설 9]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받는 것보다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생각이 변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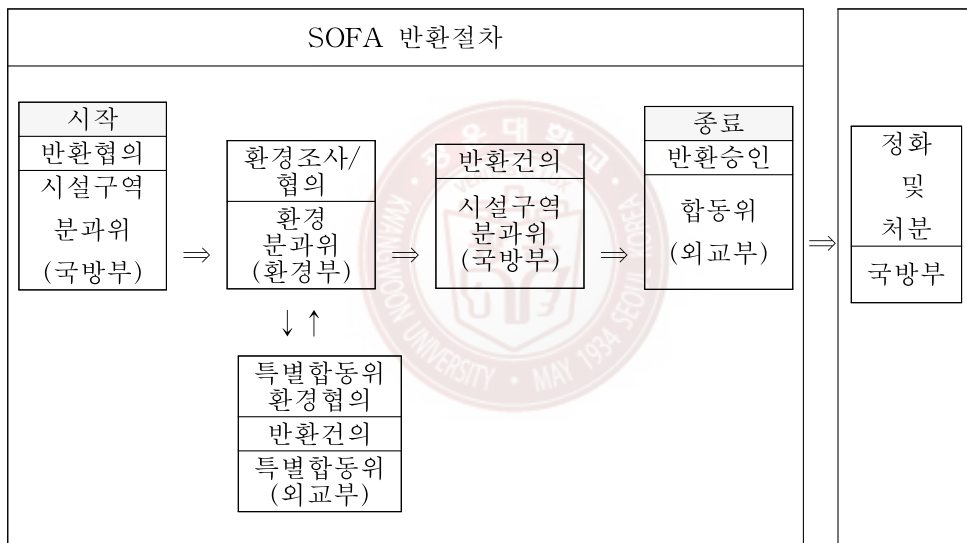
[가설 10]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국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변화할 것이다.

2.4. 정책결정자 설문결과(1차)

미군기지 이전관련 업무실무자들은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총리실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08.9)[53]에 의거하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정책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범정부 TF는 '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주체는 국방부이고 미측과의 협상의 주무는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반환기지의 환경조사의 임무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반환된 기지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환경정화 임무와 매각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임무를 중심으로 두고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리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용산공원조성담당) 24명,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6명,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직원 4명 등 총 34명을 1차 설문자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링크를 활용하여 30명의 설문을 받았고, 과장급 구성인원은 별도로 설문지를 출력하여 설문을 받았다. 이는 과장급은 별도 설문과 더불어 인터뷰를 겸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미군기지 반환절차는 미군기지의 반환은 국방부가 반환 협의를 시작하고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경부가 환경협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합의가 끝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전이 외교부 소관 SOFA 특별합동위로 올라갑니다. 특별합동위에서는 반환기지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기반환이 결정된 4

개 기지, 즉 캠프호비·캠프롱·캠프이글·캠프마켓의 환경정화 문제는 SOFA 환경분과위에서 적어도 3년 많게는 6년 정도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서야 SOFA 특별합동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환경협의 단계가 마무리되면, 국방부가 반환건의를 추진하고 SOFA 합동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기지가 한국정부에 반환됩니다. 이것이 한·미가 합의한 기본적인 미군기지 반환절차이다 [54].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표 27>과 같다.

표 27. 미군기지 반환 절차



설문지 구성으로 경제사회적 가치 구성항목 31개와 최근 이슈가 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별도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가치 구성 항목을 통해 가치의 차이를 그리고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항목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 항목을 가지고 취지와 함께 링크를 보내 3월 한달간 실시하였다. 일부 과장급 설문은 4월초에도 보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해당

하는 8개 항목을 수록하였다. 설문대상은 무기명으로 응답을 하였고, 문서로 받은 설문지도 무기명으로 처리하였다. 설문구성에서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과 현재 이슈가 되는 환경오염정화, 미군기지 전체반환, 용산공원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리커트(Like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문장을 제시하고 제시한 문장에 대해 개인의 생각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설문 집단의 일반 특성으로 설문 대상은 총리실의 지원단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인원과 국방부 사업단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부 지자체(평택, 동두천, 의정부시)의 미군기지 담당자도 참석하였다. 설문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29명(85.3%), 여자가 5명(15.2%)으로 남자가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3%), 30대가 7명(21.2%), 40대가 13명(39.4%), 50대가 13명(39.4%)으로 업무의 특성 때문인지 40-50대가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으로 대졸 및 대학원졸 인원이 전체의 대부분(31명, 91.2%)을 차지하였다. 근무지 인원은 총리실이 12명, 외교부 2명, 환경부 3명, 국토부 3명, 국방부 4명, 국방부 사업단 6명 지자체 4명이었다. 총리실 담당인원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과 사업단 및 지자체에서는 미군기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8 참조>

표 28. 정책결정자 설문 집단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9	85.3
	여	5	15.2
	소계	34	100.0

연령별	20대	1	2.9
	30대	7	20.6
	40대	13	38.2
	50대	13	38.2
	소계	34	100.0
학력	고졸	1	2.9
	전문대졸	2	5.9
	대졸	19	55.9
	대학원졸	12	35.3
	소계	34	100.0
직업	사무직	21	61.8
	전문직	5	14.7
	서비스	-	-
	생산직	-	-
	기타	8	23.5
	소계	34	100.0
지역	서울	17	50.0
	경기	9	26.5
	충청	8	23.5
	소계	34	100.0
근무지	총리실	12	35.3
	외교부	2	5.9
	환경부	3	8.8
	국토부	3	8.8
	국방부	4	11.8
	국방부(기타)	6	17.6
	지자체	4	11.8
	소계	34	100.0
근무연수	1년이하	1	2.9
	1-3년	10	29.4
	3-5년	3	8.8
	5-10년	4	11.8
	10-15년	-	-

	15-20년	-	-
	20년이상	15	44.1
	기타	1	2.9
	소계	34	100.0
미군 기지 경험	6개월미만	7	20.6
	6-12개월	5	14.7
	13-24개월	9	26.5
	25-36개월	10	29.4
	36-48개월	-	-
	48개월이상	1	2.9
	기 타	2	5.9
	소계	34	100.0

이 설문에서 근무지 근무연수와 미군기지 실무경험 등을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각 경제사회가치와 미군기지 오염정화, 전체 기지반환 여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통계 분석으로 먼저 빈도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전체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9개 항목에 대해 물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응답자들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 30명(88.2%)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12명(35.3%) 그렇다 18명(52.9%)라고 답변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20명(58.8%)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7명(20.6%), 그렇다 13명(38.2%)라고 답변했다. 사회적-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없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88.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58.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표 29 참조>

표 29. 정책결정자 경제적 효과 항목분석결과

경제적 효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지않다	1	2.9	2.9	2.9
	보통이다	3	8.8	8.8	11.8
	그렇다	18	52.9	52.9	64.7
	매우그렇다	12	35.3	35.3	100.0
	전체	34	100.0	100.0	
사회-정책적 효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보통이다	14	41.2	41.2	41.2
	그렇다	13	38.2	38.2	79.4
	매우그렇다	7	20.6	20.6	100.0
	전체	34	100.0	100.0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니 경제적 가치의 평균은 3.70이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 반환기지 개발사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美건설기술 습득, 美건설기술 학습, 국산자재 세계진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0 참조>

표 30. 정책결정자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경제적 효과	34	4.21	.729	.125
1-1 건설산업증가	34	4.32	.727	.125
1-1-1 평택기지건설	34	4.12	.946	.162
1-1-2 평택주민편의사업	34	3.82	.869	.149
1-2 생산산업사업	34	3.94	.694	.119
1-2-1 환경정화사업	34	3.41	.988	.169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34	4.24	.554	.095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34	4.18	.758	.130
1-3 미건설기술학습	34	3.06	1.013	.174

1-3-1 미건설기술습득	34	2.97	1.000	.171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34	3.12	1.008	.173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34	3.50	.896	.154
1-4-1 미군가족동반율향상	34	3.50	.929	.159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34	3.47	.896	.154
1-5 지역경제유발	34	3.97	.834	.143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34	3.79	.946	.162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34	3.74	.963	.165
1-5-3 지역내인구유입	34	3.47	.992	.170
1-5-4 지방세수증가	34	3.38	1.101	.189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사회적(정책효과) 가치의 평균은 3.90이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용산국가공원 조성, 반환기지 개발, 군사보호 구역해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긍정적으로 판단한 항목들은 최근 이슈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31 참조>

표 31. 정책결정자 사회적-정책적 효과 분석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2 사회-정책효과	34	3.79	.770	.132
2-1 국민권리보장	34	3.82	.936	.161
2-1-1 공여지해제	34	4.06	.919	.158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34	4.09	.866	.148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34	3.97	.969	.166
2-2 균형발전	34	3.68	1.173	.201
2-2-1 기반시설확충	34	3.74	.994	.171
2-2-2 반환기지개발	34	4.12	.946	.162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34	4.15	.744	.128
2-3 한미동맹강화(안보)	34	3.85	1.048	.180
2-3-1 한미작전전략전효과	34	3.76	.955	.164
2-3-2 국가안보강화	34	3.82	1.058	.181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

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24명(70.6%)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매우 그렇다 14명(41.2%)와 그렇다 10명(29.4%)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6명(17.6%)과 보통이다 4명(11.8%)로 답변한 내용도 있다. 세부 질문으로 미측에게 끝까지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 지역개발과 오염확대 방지를 위해서 한측에서 먼저 오염치유를 하는지 중도적 질문으로 이런 사항보다 SOFA협정 개정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한다가 20명(58.8%)과 미측에게 책임을 끝까지 부과해야한다는 답변은 20명(58.5%)으로 동일한 의견으로 답하였고, 협정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답변이 각각 21명(61.7%)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답변자들은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 부분과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먼저하라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온 것과 더불어 SOFA 등 협정개정을 우선하여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수가 많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이런 점들은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32 참조>

표 32. 정책결정자 오염정화 이슈 설문 분석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5	14.7	14.7	17.6
	보통이다	4	11.8	11.8	29.4
	그렇다	10	29.4	29.4	58.8
	매우그렇다	14	41.2	41.2	100.0
	전체	34	100.0	100.0	
미측에게 책임부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3	8.8	8.8	8.8
	그렇지않다	4	11.8	11.8	20.6
	보통이다	7	20.6	20.6	41.2
	그렇다	8	23.5	23.5	64.7
	매우그렇다	12	35.3	35.3	100.0
	전체	34	100.0	100.0	

한측에서 우선 오염치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6	17.6	17.6	17.6
	그렇지않다	1	2.9	2.9	20.6
	보통이다	7	20.6	20.6	41.2
	그렇다	10	29.4	29.4	70.6
	매우그렇다	10	29.4	29.4	100.0
전체		34	100.0	100.0	
SOFA 등 협정개정 우선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3	8.8	8.8	11.8
	보통이다	9	26.5	26.5	38.2
	그렇다	8	23.5	23.5	61.8
	매우그렇다	13	38.2	38.2	100.0
전체		34	100.0	100.0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23명(67.6%)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매우 그렇다 17명(50%)와 그렇다 6명(17.6%)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1명(3%)에 불과했다.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 하는지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기지를 끝까지 받아야 한다와 필수기지는 미반환 해야한다는 답변이 각각 21명(61.7%)으로 그렇다라는 답변이 모두 같았다. 그러나 평균과 오차범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의견은 계획된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정책결정자 기지반환 이슈 설문 분석

계획된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보통이다	10	29.4	29.4	32.4
	그렇다	6	17.6	17.6	50.0
	매우그렇다	17	50.0	50.0	100.0
전체		34	100.0	100.0	
모두반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보통이다	12	35.3	35.3	38.2
	그렇다	6	17.6	17.6	55.9
	매우그렇다	15	44.1	44.1	100.0
	전체	34	100.0	100.0	
필수기지 미반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3	8.8	8.8	11.8
	보통이다	9	26.5	26.5	38.2
	그렇다	11	32.4	32.4	70.6
	매우그렇다	10	29.4	29.4	100.0
	전체	34	100.0	100.0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22명(64.7%)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그렇다 15명(44.1%)와 그렇다 7명(20.6%)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각 1명(2.9%)에 불과했다.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21명, 61.7%)가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 설치해야한다는 답변(18명, 52.9%)보다 3명(8.8%)차이를 보였다. 이는 계획된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했다.<표 34 참조>

표 34. 정책결정자 용산공원 조성 이슈 설문 분석

용산기지를 계획된 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1	2.9	2.9	5.9
	보통이다	10	29.4	29.4	35.3
	그렇다	7	20.6	20.6	55.9
	매우그렇다	15	44.1	44.1	100.0
	전체	34	100.0	100.0	
계획된용산공원조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	5.9	5.9	5.9
	그렇지않다	1	2.9	2.9	8.8
	보통이다	10	29.4	29.4	38.2
	그렇다	6	17.6	17.6	55.9
	매우그렇다	15	44.1	44.1	100.0
	전체	34	100.0	100.0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4	11.8	11.8	11.8
	그렇지않다	1	2.9	2.9	14.7
	보통이다	11	32.4	32.4	47.1
	그렇다	10	29.4	29.4	76.5
	매우그렇다	8	23.5	23.5	100.0
	전체	34	100.0	100.0	

인식도 차이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별로 평균값을 비교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거주지역에 대한 분석을 <표 35>가 같이 실시하였다. 성별 인식 차이 분석으로 설문항목에 대한 남녀간의 성별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본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없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5. 정책결정자 남녀 집단통계 분석

구 분	남여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경제효과	남	29	4.31	.712	.132
	여	5	3.60	.548	.245
건설산업	남	29	4.41	.682	.127
	여	5	3.80	.837	.374
평택기지	남	29	4.24	.951	.177
	여	5	3.40	.548	.245
평택주민편익사업	남	29	3.86	.915	.170
	여	5	3.60	.548	.245
생산산업사업	남	29	4.00	.707	.131
	여	5	3.60	.548	.245
환경정화사업	남	29	3.52	1.022	.190
	여	5	2.80	.447	.200
반환기지개발	남	29	4.34	.484	.090
	여	5	3.60	.548	.245

용산국가공원조성	남	29	4.31	.712	.132
	여	5	3.40	.548	.245
미건설기술학습	남	29	3.14	1.026	.190
	여	5	2.60	.894	.400
미건설기술습득	남	29	3.03	1.017	.189
	여	5	2.60	.894	.400
국산자재세계진출	남	29	3.21	1.048	.195
	여	5	2.60	.548	.245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남	29	3.62	.862	.160
	여	5	2.80	.837	.374
미군가족동반올향상	남	29	3.62	.903	.168
	여	5	2.80	.837	.374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남	29	3.52	.911	.169
	여	5	3.20	.837	.374
지역경제유발	남	29	4.07	.753	.140
	여	5	3.40	1.140	.510
건설인력소비증가	남	29	3.90	.939	.174
	여	5	3.20	.837	.374
기지운영유지소비	남	29	3.79	.940	.175
	여	5	3.40	1.140	.510
지역내인구유입	남	29	3.55	1.021	.190
	여	5	3.00	.707	.316
지방세수증가	남	29	3.45	1.121	.208
	여	5	3.00	1.000	.447
사회-정책효과	남	29	3.86	.789	.147
	여	5	3.40	.548	.245
국민권리보장	남	29	3.93	.884	.164
	여	5	3.20	1.095	.490
공여지해제	남	29	4.14	.915	.170
	여	5	3.60	.894	.400
군사보호구역해제	남	29	4.17	.848	.157
	여	5	3.60	.894	.400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남	29	4.00	1.000	.186
	여	5	3.80	.837	.374
균형발전	남	29	3.79	1.146	.213
	여	5	3.00	1.225	.548
기반시설확충	남	29	3.83	1.002	.186
	여	5	3.20	.837	.374
반환기지개발	남	29	4.21	.902	.167
	여	5	3.60	1.140	.510
용산국가공원조성	남	29	4.24	.739	.137
	여	5	3.60	.548	.245
한미동맹강화(안보)	남	29	3.90	1.113	.207
	여	5	3.60	.548	.245
한미작전전략전효과	남	29	3.83	1.002	.186
	여	5	3.40	.548	.245
국가안보강화	남	29	3.90	1.113	.207
	여	5	3.40	.548	.245
미측오염정화실시	남	29	4.00	1.195	.222
	여	5	3.40	1.140	.510
미측에게책임부과	남	29	3.69	1.365	.254
	여	5	3.40	1.140	.510

한층에서오염치유	남	29	3.66	1.421	.264
	여	5	2.60	1.140	.510
협정개정우선	남	29	3.90	1.205	.224
	여	5	3.60	.548	.245
계획된미군기지반환	남	29	4.21	1.048	.195
	여	5	3.60	.894	.400
모두반환	남	29	4.07	1.067	.198
	여	5	3.60	.894	.400
필수기지미반환	남	29	3.79	1.082	.201
	여	5	3.60	1.140	.510
용산기지공원조성	남	29	4.21	1.013	.188
	여	5	2.80	.447	.200
계획된용산공원조성	남	29	4.07	1.193	.222
	여	5	3.00	.707	.316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설치	남	29	3.45	1.325	.246
	여	5	3.80	.447	.200

연령별 인식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를 찾기 힘들었다. 20대와 30대의 표본은 8이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3명이었는데, 표본이 적어서 이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타 학력, 직업, 지역과 근무부서를 분석하기에는 표본 수가 적어서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에는 역시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5. 주민설문 결과

미군기지가 있었거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정책수혜자로 보고 평택 험프리스 기지가 있는 평택지역,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시, 용산기지가 있는 서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일항목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여 상호 의견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설문지는 정책결정자와 동일하게 경제사회적 가치 구성항목 31개와 최근 이슈가 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별도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가치 구성항목을 통해 가치의 차이를 그리고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항목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지의 취지와 함께 링크를 보내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5개 항목을 수록하였다. 설문대상은 무기명으로 응답을 하였고, 일부 종이로 받은 설문지도 무기명으로 처리하였다. 설문구성에서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과 현재 이슈가 되는 환경오염정화, 미군기지 전체반환, 용산공원에 대한 질문을 정책수혜자(지역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설문하였다. 설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리커트(Like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집단의 일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설문대상은 기본적으로 평택, 의정부, 동두천시의 대표성을 가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30부를 배부하였고, 마찬가지로 서울 용산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0부를 각각 배부하였으며, 일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링크를 통하여 추가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120부와 링크를 통하여 추가로 설문한 30부 중에서 답변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하고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가 78명(52.7%), 여자가 70명(47.3%)으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명(10.1%), 30대가 37명(25%), 40대가 36명(24.3%), 50대가 51명(34.5%), 60대가 9명(6.1%)로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학력으로 대졸 및 대학원 졸업 인원이 전체의 대부분(102명, 68.9%)을 차지하였다. <표 36 참조>

표 36. 정책수혜자 설문 집단 일반특징 분석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8	52.7
	여	70	47.3
	소계	148	100.0
연령별	20대	15	10.1
	30대	37	25.0
	40대	36	24.3
	50대	51	34.5
	60대	9	6.1
	소계	148	100.0
학력	고졸	27	18.2
	전문대졸	19	12.8
	대졸	75	50.7
	대학원졸	27	18.2
	소계	148	100.0
직업	사무직	67	45.3
	생산직	5	3.4
	서비스	21	14.2
	전문직	32	21.6
	기타	23	15.5
	소계	148	100.0
지역	서울	31	20.9
	경기	117	79.1
	소계	148	100.0

이 설문에서 서울, 경기 인원 차이는 주로 서울시는 서울 용산기지가 있는 용산구 주민을 주요인원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경기도는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동두천,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기 때문에 인원수에 편차가 발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으로 빈도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적 효과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전체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9개 항목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응답자들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 84명(56.7%)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그렇다 28명(18.9%), 그렇다 56명(37.8%)라고 답변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71명(48%)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28명(18.9%), 그렇다 56명(37.8%)이 답변해서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인원이 적었고, 그렇지않다도 13명(8.8%)이 나타났다. 경제적 효과에 비해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약 8.7%가 낮은 상당히 저조한 답변이 나타났다. <표 37 참조>

표 37. 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적 효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4	2.7	2.7	2.7
	그렇지않다	6	4.1	4.1	6.8
	보통이다	54	36.5	36.5	43.2
	그렇다	56	37.8	37.8	81.1
	매우그렇다	28	18.9	18.9	100.0
	전체	148	100.0	100.0	
사회-정책적 효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7	.7	.7
	그렇지않다	12	8.1	8.1	8.8
	보통이다	64	43.2	43.2	52.0

	그렇다	49	33.1	33.1	85.1
	매우그렇다	22	14.9	14.9	100.0
	전체	148	100.0	100.0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니 경제적 가치의 평균은 3.55이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평택기지 건설, 평택 주민 편익사업, 용산 국가공원 조성(경제이득측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38 참조>

표 38. 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표준편차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경제적 효과	148	3.66	.923	.076
1-1 건설산업증가	148	3.75	.872	.072
1-1-1 평택기지건설	148	3.82	.774	.064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148	3.78	.829	.068
1-2 생산산업사업	148	3.58	.904	.074
1-2-1 환경정화사업	148	3.40	.953	.078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148	3.74	.784	.064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148	3.78	.807	.066
1-3 미건설기술학습	148	3.21	.867	.071
1-3-1 미건설기술습득	148	3.12	.989	.081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148	3.45	.875	.072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148	3.53	.777	.064
1-4-1 미군가족동반올향상	148	3.49	.884	.073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148	3.53	.852	.070
1-5 지역경제유발	148	3.59	.895	.074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148	3.59	.848	.070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148	3.56	.882	.073
1-5-3 지역내인구유입	148	3.51	.884	.073
1-5-4 지방세수증가	148	3.40	.946	.078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사회적(정책효과) 가치의 평균은 3.58

이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공원 조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덜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국가안보강화, 국민권리보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39 참조>

표 39. 정책수혜자 사회적-정책적 효과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2 사회-정책효과	148	3.53	.868	.071
2-1 국민권리보장	148	3.42	.990	.081
2-1-1 공여지해제	148	3.62	.943	.078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148	3.60	.886	.073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148	3.55	.957	.079
2-2 균형발전	148	3.62	.868	.071
2-2-1 기반시설확충	148	3.69	.840	.069
2-2-2 반환기지개발	148	3.75	.864	.071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148	3.74	.899	.074
2-3 한미동맹강화(안보)	148	3.54	.921	.076
2-3-1 한미작전전략적효과	148	3.50	1.027	.084
2-3-2 국가안보강화	148	3.40	.995	.082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106명(71.6%)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56명(37.8%)와 그렇다 50명(33.8%)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세부 질문으로 미측에게 끝까지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 지역개발과 오염확대 방지를 위해서 한측에서 먼저 오염치유를 하는지 중도적 질문으로 이런 사항보다 SOFA협정 개정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측에게 책임을 끝까지 부과해야한다는 답변은 113명(76.3%)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52명(35.1%), 그렇다 61명(41.2%)로 나타났다.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에 대해서는 70명(47.3%)로 나타났고, 협정 개정우선은 102명(68.9%)로 나타났다. 답변자

들은 미측에서 미측에 끝까지 오염책임을 부과하면서 SOFA 등 협정개정을 우선하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0 참조>

표 40. 정책수혜자 오염정화 이슈 설문 분석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7	.7	.7
	그렇지않다	3	2.0	2.0	2.7
	보통이다	38	25.7	25.7	28.4
	그렇다	50	33.8	33.8	62.2
	매우그렇다	56	37.8	37.8	100.0
	전체	148	100.0	100.0	-
미측에게 책임부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8	5.4	5.4	5.4
	보통이다	27	18.2	18.2	23.6
	그렇다	61	41.2	41.2	64.9
	매우그렇다	52	35.1	35.1	100.0
	전체	148	100.0	100.0	-
한측에서 우선 오염치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9	6.1	6.1	6.1
	그렇지않다	24	16.2	16.2	22.3
	보통이다	45	30.4	30.4	52.7
	그렇다	45	30.4	30.4	83.1
	매우그렇다	25	16.9	16.9	100.0
	전체	148	100.0	100.0	-
SOFA 등 협정개정 우선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	1.4	1.4	1.4
	그렇지않다	8	5.4	5.4	6.8
	보통이다	36	24.3	24.3	31.1
	그렇다	57	38.5	38.5	69.6
	매우그렇다	45	30.4	30.4	100.0
	전체	148	100.0	100.0	-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90명(60.8%)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48명(32.4%)와 그렇다 42명(28.4%)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하는지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

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기지를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8명(39.2%)와 그렇다 42명(28.4%)로 6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필수기지는 미반환해야한다는 답변에는 매우 그렇다 29명(19.6%) 그렇다 48명(32.4%)라는 답변으로 77명(52.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반환이 계획되어 있는 기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조금 더 있었다.<표 41 참조>

표 41. 정책수혜자 기지반환 이슈 설문 분석

계획된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7	.7	.7
	그렇지않다	6	4.1	4.1	4.7
	보통이다	51	34.5	34.5	39.2
	그렇다	42	28.4	28.4	67.6
	매우그렇다	48	32.4	32.4	100.0
전체		148	100.0	100.0	-
모두반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	1.4	1.4	1.4
	그렇지않다	9	6.1	6.1	7.4
	보통이다	37	25.0	25.0	32.4
	그렇다	42	28.4	28.4	60.8
	매우그렇다	58	39.2	39.2	100.0
전체		148	100.0	100.0	-
필수기지 미반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4	2.7	2.7	2.7
	그렇지않다	17	11.5	11.5	14.2
	보통이다	50	33.8	33.8	48.0
	그렇다	48	32.4	32.4	80.4
	매우그렇다	29	19.6	19.6	100.0
전체		148	100.0	100.0	-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74명(50%)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42명(28.4%)와 그렇다 32명(21.6%)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13명

(8.9%)에 불과했다.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85명, 57.5%)가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76명, 51.4%)보다 9명(6.1%)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공공주택과 공원 내 이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42>와 같이 빈도를 알아보았다. 표에서와 같이 계획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은 부정적 의견이 10%미만이고, 경기도는 10%이상이다. 그리고 변환된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42%이고 경기도는 21%로 공원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이 강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정책수혜자 용산공원 조성 핵심이슈 설문 분석(서울 대 경기)

용산기지를 계획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지역		서울		경기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0	0%	4	3%
	그렇지않다	1	3%	8	7%
	보통이다	14	45%	47	40%
	그렇다	8	26%	24	21%
	매우그렇다	8	26%	34	29%
	전체	31	100%	117	100%
계획된 용산공원조성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0	0%	2	2%
	그렇지않다	2	6%	17	15%
	보통이다	12	39%	30	26%
	그렇다	9	29%	30	26%
	매우그렇다	8	26%	38	32%
	전체	31	100%	117	100%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설치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4	13%	7	6%
	그렇지않다	9	29%	17	15%
	보통이다	6	19%	29	25%
	그렇다	7	23%	40	34%
	매우그렇다	5	16%	24	21%
	전체	31	100%	117	100%

인식도 차이에 대해 분석해보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별로 평균값을 비교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거주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인식 차이 분석으로 설문항목에 대한 남녀간의 성별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본수가 남여가 비슷한 인원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체 질문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평균은 3.68이고 여자는 3.4로 남자가 더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평택주민편의사업, 평택기지건설이 효과적 가치로 판단하였고, 여자는 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뒤를 용산국가공원 조성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남자들은 주민편의 사업이나 기지건설과 같은 사항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여자들은 광의의 경제적 효과와 건설산업증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조성은 모두가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참조>

표 43. 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남녀 설문 분석

구 분	남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1 경제적 효과	남	78	3.76	.969	1.324	.188
	여	70	3.56	.862		
1-1 건설산업증가	남	78	3.94	.843	2.797	.006
	여	70	3.54	.863		
1-1-1 평택기지건설	남	78	4.01	.693	3.323	.001
	여	70	3.60	.806		
1-1-2 평택주민편의사업	남	78	4.03	.702	3.877	.000
	여	70	3.51	.880		
1-2 생산산업사업	남	78	3.71	.884	1.773	.078
	여	70	3.44	.911		
1-2-1 환경정화사업	남	78	3.54	.963	1.905	.059
	여	70	3.24	.924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남	78	3.94	.709	3.236	.002
	여	70	3.53	.812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남	78	4.00	.790	3.709	.000
	여	70	3.53	.756		
1-3 미건설기술학습	남	78	3.19	.898	-.254	.800
	여	70	3.23	.837		
1-3-1 미건설기술습득	남	78	3.10	1.001	-.247	.805
	여	70	3.14	.982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남	78	3.59	.889	2.038	.043
	여	70	3.30	.840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남	78	3.71	.824	2.931	.004
	여	70	3.34	.679		
1-4-1 미군가족동반율향상	남	78	3.59	.859	1.502	.135
	여	70	3.37	.904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남	78	3.78	.816	3.920	.000
	여	70	3.26	.811		
1-5 지역경제유발	남	78	3.73	.893	1.975	.050
	여	70	3.44	.879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남	78	3.72	.771	1.868	.064
	여	70	3.46	.912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남	78	3.65	.835	1.350	.179
	여	70	3.46	.928		
1-5-3 지역내인구유입	남	78	3.54	.878	.459	.647
	여	70	3.47	.896		
1-5-4 지방세수증가	남	78	3.40	.985	-.016	.987
	여	70	3.40	.907		

다음으로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전체 질문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의 평균값은 3.74, 여자의 평균값은 3.39로 남자가 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남자들은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공원조성, 기반시설 확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여자들은 용산국가공원조성, 반환기지 개발, 그리고 의외로 한미 작전전략적 효과를 세번째로 선택했다. 이는 남녀 모두 반환기지개발,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항목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여자들이 타 항목보다 작전전략적 효과를 우선 선택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표 44 참조>

표 44. 정책수혜자 사회적 효과 남녀 설문 분석

구분	남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2 사회-정책효과	남	78	3.72	.851	2.786	.006
	여	70	3.33	.847		
2-1 국민권리보장	남	78	3.67	.963	3.324	.001

	여	70	3.14	.952		
2-1-1 공여지해제	남	78	3.86	.879	3.327	.001
	여	70	3.36	.948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남	78	3.83	.813	3.467	.001
	여	70	3.34	.899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남	78	3.69	.984	1.880	.062
	여	70	3.40	.907		
2-2 균형발전	남	78	3.82	.864	3.030	.003
	여	70	3.40	.824		
2-2-1 기반시설확충	남	78	3.91	.776	3.491	.001
	여	70	3.44	.845		
2-2-2 반환기지개발	남	78	3.96	.763	3.213	.002
	여	70	3.51	.913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남	78	3.92	.802	2.698	.008
	여	70	3.53	.959		
2-3 한미동맹강화(안보)	남	78	3.64	.967	1.414	.159
	여	70	3.43	.861		
2-3-1 한미작전전략적효과	남	78	3.51	1.125	.162	.872
	여	70	3.49	.913		
2-3-2 국가안보강화	남	78	3.44	1.064	.483	.630
	여	70	3.36	.917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분석으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차이가 나타났다. 미측에게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녀모두 4점대 이상 긍정의견을 선택하였고, 남자는 4.1, 여자는 4.01로 대부분 주민들은 미측에게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 공통의견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 미측에게 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항목 역시 4점대 이상의 긍정의견을 선택하였고,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자는 3.44, 여자는 3.27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와 동시에 협정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자는 4.03, 여자는 3.79로 남자는 강한 긍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계획된 미군기지는 반환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는 3.83, 여자는 3.93으로 남녀 모두 유사한 의견 정도를 나타내었고, 계획된 기지를 모두 반환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4.01, 3.94로 강한 긍정의견을 나타내었다. 미측의 필수기지 미반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3.63, 3.46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라

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 모두 3.74, 3.59로 나타났고, 세부 질문에 대해서는 계획된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질문에 남자는 3.83, 여자는 3.61 그리고 주택이나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질문에 남자는 3.23, 여자는 3.5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두 의견이 대비되는 차이가 아닌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45 참조>

표 45. 정책수혜자 핵심 이슈 남녀 설문 표준편차 분석

구 분	남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 률
3 미측오염정화실시	남	78	4.10	.815	.601	.549
	여	70	4.01	.955		
3-1 미측에게책임부과	남	78	4.09	.885	.428	.669
	여	70	4.03	.851		
3-2 한측에서오염치유	남	78	3.44	1.135	.888	.376
	여	70	3.27	1.115		
3-3 협정개정우선	남	78	4.03	.882	1.548	.124
	여	70	3.79	.991		
4 계획된미군기지반환	남	78	3.83	.973	-.617	.538
	여	70	3.93	.906		
4-1 모두반환	남	78	4.01	1.026	.422	.674
	여	70	3.94	.991		
4-2 필수기지미반환	남	78	3.63	1.070	1.026	.307
	여	70	3.46	.958		
5 용산기지공원조성	남	78	3.74	1.074	.926	.356
	여	70	3.59	1.000		
5-1 계획된용산공원조성	남	78	3.83	1.144	1.244	.215
	여	70	3.61	.997		
5-2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남	78	3.23	1.318	-1.686	.094
	여	70	3.56	1.030		

연령별 인식 차이 분석으로 설문항목에 대한 연령별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면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균은 3.61이었고,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균은 3.50이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30대에서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고,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

서도 30대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반대로 60대에서는 가장 낮은 의견을 주었다.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그리고 높은 세대에서는 낮은 의견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미군기지에 주거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 <표 46 참조>

표 46. 정책수혜자 경제사회효과 연령별 설문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경제효과	20대	15	3.73	.704	.937	.444
	30대	37	3.84	.986		
	40대	36	3.58	.806		
	50대	51	3.65	.976		
	60대	9	3.22	1.093		
	전체	148	3.66	.923		
사회-정책효과	20대	15	3.73	.704	2.100	.084
	30대	37	3.81	.811		
	40대	36	3.39	.645		
	50대	51	3.45	1.006		
	60대	9	3.11	1.054		
	전체	148	3.53	.868		

먼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각 세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균 3.54값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값은 지역 경제 활성화, 건설인력 소비증가, 기지운영 유지소비증가, 지역내 인구유입 증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환경정화 사업이나 국산자재 세계진출의 효과에 대해서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30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균 3.78값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값은 반환기지 개발사업, 건설산업 증가와 평택기지 건설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미건설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40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균 3.57값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값은 용산국가공원조성, 평택기지 건설, 평택주민 편익사업 순으로 나타났고, 미건설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50대는 평균값이 3.43으로 나타났고, 평택기지건설,

건설산업 증가, 평택주민 편익사업 순으로 나타났고,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 기술학습 효과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60대는 평균값이 3.16으로 나타났고 평택주민편익사업, 환경정화 사업, 반환기지 개발사업 순으로 나타났고, 기지운영 유지 소비효과는 낮다고 판단했다. 연령대로 보면 전 연령대가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된 산업증가나 평택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고, 미건설기술 습득이나 건설기술 학습 효과는 대체로 낮다고 판단했다. <표 47 참조>

표 47. 정책수혜자 경제효과 연령별 설문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경제적 효과	20대	15	3.73	.704	.937	.444
	30대	37	3.84	.986		
	40대	36	3.58	.806		
	50대	51	3.65	.976		
	60대	9	3.22	1.093		
	전체	148	3.66	.923		
1-1 건설산업증가	20대	15	3.67	.724	1.206	.311
	30대	37	3.97	.866		
	40대	36	3.69	.822		
	50대	51	3.73	.940		
	60대	9	3.33	.866		
	전체	148	3.75	.872		
1-1-1 평택기지건설	20대	15	3.53	.516	1.552	.191
	30대	37	4.03	.726		
	40대	36	3.86	.593		
	50대	51	3.76	.951		
	60대	9	3.56	.726		
	전체	148	3.82	.774		
1-1-2 평택주민 편익사업	20대	15	3.60	.507	.568	.686
	30대	37	3.92	.759		
	40대	36	3.83	.697		
	50대	51	3.71	1.045		
	60대	9	3.78	.667		
	전체	148	3.78	.829		
1-2 생산산업사업	20대	15	3.27	.799	1.219	.305
	30대	37	3.70	.878		
	40대	36	3.72	.741		
	50대	51	3.55	1.045		
	60대	9	3.22	.833		
	전체	148	3.58	.904		
1-2-1 환경정화사업	20대	15	3.20	.561	.559	.693
	30대	37	3.51	1.121		
	40대	36	3.47	.845		
	50대	51	3.29	1.006		
	60대	9	3.56	.882		
	전체	148	3.47	.945		

	전체	148	3.40	.953			
1-2-2 반환기지 개발사업	20대	15	3.40	.632	2.534	.043	
	30대	37	4.05	.815			
	40대	36	3.72	.701			
	50대	51	3.67	.816			
	60대	9	3.56	.726			
	전체	148	3.74	.784			
1-2-3 용산국가 공원조성	20대	15	3.60	.737	1.731	.146	
	30대	37	3.92	.795			
	40대	36	3.94	.674			
	50대	51	3.69	.883			
	60대	9	3.33	.866			
	전체	148	3.78	.807			
1-3 미건설 기술학습	20대	15	3.47	.640	3.349	.012	
	30대	37	3.57	.987			
	40대	36	3.14	.762			
	50대	51	2.96	.824			
	60대	9	3.00	.866			
	전체	148	3.21	.867			
1-3-1 미건설 기술습득	20대	15	3.60	.737	3.378	.011	
	30대	37	3.46	1.070			
	40대	36	3.03	.941			
	50대	51	2.84	.946			
	60대	9	2.89	.928			
	전체	148	3.12	.989			
1-3-2 국산자재 세계진출	20대	15	3.20	.775	2.415	.052	
	30대	37	3.78	.821			
	40대	36	3.50	.845			
	50대	51	3.31	.927			
	60대	9	3.11	.782			
	전체	148	3.45	.875			
1-4 소비측면 주둔여건개선	20대	15	3.53	.640	1.550	.191	
	30대	37	3.76	.863			
	40대	36	3.50	.655			
	50대	51	3.47	.809			
	60대	9	3.11	.782			
	전체	148	3.53	.777			
1-4-1 미군가족 동반율향상	20대	15	3.53	.743	2.022	.095	
	30대	37	3.78	.854			
	40대	36	3.36	.833			
	50대	51	3.43	.922			
	60대	9	3.00	1.000			
	전체	148	3.49	.884			
1-4-2 미시설 운영 유지비감소	20대	15	3.27	.594	1.959	.104	
	30대	37	3.73	.693			
	40대	36	3.64	.723			
	50대	51	3.49	1.027			
	60대	9	3.00	1.000			
	전체	148	3.53	.852			
1-5 지역경제 유발	20대	15	3.80	.862	3.250	.014	
	30대	37	3.92	.829			
	40대	36	3.61	.838			
	50대	51	3.39	.918			
	60대	9	3.00	.866			
	전체	148	3.59	.895			

1-5-1 건설인력 소비증가	20대	15	3.80	.862	2.760	.030	
	30대	37	3.86	.713			
	40대	36	3.58	.732			
	50대	51	3.45	.923			
	60대	9	3.00	1.000			
	전체	148	3.59	.848			
1-5-2 기지운영 유지소비	20대	15	3.80	.676	4.622	.002	
	30대	37	3.84	.834			
	40대	36	3.67	.756			
	50대	51	3.37	.916			
	60대	9	2.67	1.000			
	전체	148	3.56	.882			
1-5-3 지역내 인구유입	20대	15	3.80	.941	2.918	.023	
	30대	37	3.73	.769			
	40대	36	3.58	.770			
	50대	51	3.31	.927			
	60대	9	2.89	1.054			
	전체	148	3.51	.884			
1-5-4 지방세수증가	20대	15	3.60	.828	1.560	.188	
	30대	37	3.59	.956			
	40대	36	3.44	.939			
	50대	51	3.25	.956			
	60대	9	2.89	.928			
	전체	148	3.40	.946			

먼저 사회적(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사회적(정책적) 효과에 대한 각 세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평균 3.63값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값은 한미 작전 전략적 효과,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공원 조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민권리보장에 대해서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30대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평균 3.87값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값은 반환기지 개발사업, 용산국가공원조성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한미 작전 전략적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40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균 3.50값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값은 반환기지 개발, 기반시설확충, 용산국가공원 조성 순으로 나타났고, 국가안보강화, 한미 작전 전략적 효과에 대해서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50대는 평균값이 3.48으로 나타났고, 반환기지개발, 용산국가공원 조성순으로 나타났고, 국민권리 보장, 국가안보강화 효과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60대는 평균값이 3.11으로 나타났고 한미동맹강화, 용산국가공원조성 순으로 나

타났고, 국가안보강화, 균형발전 효과는 낮다고 판단했다. 연령대로 보면 전 연령대가 반환기지 개발과 용산국가공원조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고, 젊은층은 한미 작전 전략적 효과가 이후세대는 국가안보강화가 대체로 낮다고 판단했다.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표 48 참조>

표 48. 정책수혜자 사회효과 연령별 설문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2 사회 -정책효과	20대	15	3.73	.704	2.100	.084	
	30대	37	3.81	.811			
	40대	36	3.39	.645			
	50대	51	3.45	1.006			
	60대	9	3.11	1.054			
	전체	148	3.53	.868			
2-1 국민권리보장	20대	15	3.20	.862	3.200	.015	
	30대	37	3.89	.906			
	40대	36	3.31	.920			
	50대	51	3.29	1.006			
	60대	9	3.00	1.225			
	전체	148	3.42	.990			
2-1-1 공여지해제	20대	15	3.53	.743	1.512	.202	
	30대	37	3.92	.829			
	40대	36	3.58	.806			
	50대	51	3.53	1.084			
	60대	9	3.22	1.202			
	전체	148	3.62	.943			
2-1-2 군사보호 구역해제	20대	15	3.47	.915	1.891	.115	
	30대	37	3.92	.722			
	40대	36	3.56	.773			
	50대	51	3.51	.967			
	60대	9	3.22	1.202			
	전체	148	3.60	.886			
2-1-3 용산지역 민족자존심 회복	20대	15	3.67	.900	1.626	.171	
	30대	37	3.81	.938			
	40대	36	3.50	.971			
	50대	51	3.47	.924			
	60대	9	3.00	1.118			
	전체	148	3.55	.957			
2-2 균형발전	20대	15	3.60	.737	2.926	.023	
	30대	37	3.92	.795			
	40대	36	3.61	.766			
	50대	51	3.55	.923			
	60대	9	2.89	1.054			
	전체	148	3.62	.868			
2-2-1 기반시설확충	20대	15	3.60	.910	2.011	.096	
	30대	37	3.92	.759			

	40대	36	3.81	.668		
	50대	51	3.55	.879		
	60대	9	3.22	1.202		
	전체	148	3.69	.840		
2-2-2 반환기지개발	20대	15	3.80	1.014	1.946	.106
	30대	37	3.97	.687		
	40대	36	3.83	.811		
	50대	51	3.61	.918		
	60대	9	3.22	.972		
	전체	148	3.75	.864		
2-2-3 용산국가공원조 성	20대	15	3.80	.862	1.638	.168
	30대	37	3.97	.763		
	40대	36	3.81	.822		
	50대	51	3.57	.985		
	60대	9	3.33	1.118		
	전체	148	3.74	.899		
2-3 한미동맹 강화(안보)	20대	15	3.73	1.100	2.222	.070
	30대	37	3.84	.764		
	40대	36	3.25	.967		
	50대	51	3.51	.903		
	60대	9	3.33	.866		
	전체	148	3.54	.921		
2-3-1 한미작전 전략적효과	20대	15	3.93	.884	2.183	.074
	30대	37	3.73	.838		
	40대	36	3.28	1.210		
	50대	51	3.45	.986		
	60대	9	3.00	1.118		
	전체	148	3.50	1.027		
2-3-2 국가안보강화	20대	15	3.60	.910	3.635	.007
	30대	37	3.84	.898		
	40대	36	3.11	1.036		
	50대	51	3.31	.969		
	60대	9	2.89	.928		
	전체	148	3.40	.995		

다음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으로 각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차이가 나타났다.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4.06에 대해 20, 40, 60대는 평균 이상의견을 30대, 60대는 평균이하 의견을 나타내었고, 세부 질문에 대해서 미측에게 책임을 부과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은 4.06이었고, 30대, 50대는 평균 이상의견을 20, 40, 60대는 평균이하 의견을 나타냈다. 그럼 한측에서 오염을 치유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은 3.36으로 미측에게 책임부과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었고, 30대, 60대에서 평균 이상 의견을 20대, 50대는 평

균이하 의견을 나타냈다, 그럼 이런 치유문제보다 협정을 우선 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3.91이었고 30대, 50대는 평균 이상의 값을, 20대, 40대, 60대는 평균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다음질문으로 계획된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3.78로 나왔고 50대에서는 강한 긍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평균과 유사하거나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세부질문으로 미군기지를 반드시 모두 반환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값은 3.98로 나왔고 50대가 평균이상의 값을 나머지는 평균과 유사하거나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필수 미군기지는 미반환한다라는 질문에 평균값은 3.55이었고, 30대가 평균이상 값을 나머지 세대는 평균과 유사하거나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반환된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평균값은 3.67로 나타났고 50대가 평균 이상 값을 나머지 세대는 평균과 유사하거나 평균이하 값을 나타냈다. 세부질문으로 계획된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평균값은 3.73으로 나타났고, 30대, 50대가 평균이상 값을 나타냈고 나머지 세대는 평균이하 값을 나타냈다. 그럼 주택이나 정부기관 설치와 같이 계획을 변경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3.39로 나타났고 50대, 60대가 평균이상 값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평균과 유사하거나 이하 값을 나타냈다. 이는 50~60대에서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9 참조>

표 49. 정책수혜자 핵심이슈 연령별 설문 분석

구 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3 미측오염 정화실시	20대	15	4.00	.926	1.473	.214
	30대	37	4.14	.787		
	40대	36	3.92	.806		
	50대	51	4.22	.901		

	60대	9	3.56	1.236		
	전 체	148	4.06	.882		
3-1 미측에 계 책임부과	20대	15	3.87	.915	1.157	.333
	30대	37	4.14	.822		
	40대	36	3.92	.874		
	50대	51	4.22	.808		
	60대	9	3.78	1.202		
	전 체	148	4.06	.867		
3-2 한측에서 오염치유	20대	15	3.07	.704	.891	.471
	30대	37	3.57	1.119		
	40대	36	3.36	1.046		
	50대	51	3.24	1.274		
	60대	9	3.67	1.118		
	전 체	148	3.36	1.125		
3-3 협정 개정우선	20대	15	3.73	.594	.189	.944
	30대	37	3.97	.928		
	40대	36	3.89	.919		
	50대	51	3.94	1.028		
	60대	9	3.89	1.167		
	전 체	148	3.91	.940		
4 계획된 미균기 지 반환	20대	15	3.80	.941	1.806	.131
	30대	37	3.89	.936		
	40대	36	3.58	.906		
	50대	51	4.12	.887		
	60대	9	3.78	1.202		
	전 체	148	3.88	.940		
4-1 모두반환	20대	15	3.73	.961	1.527	.198
	30대	37	4.03	1.142		
	40대	36	3.75	.967		
	50대	51	4.22	.856		
	60대	9	3.78	1.302		
	전 체	148	3.98	1.007		
4-2 필수기 지 미반환	20대	15	3.53	.743	.318	.866
	30대	37	3.68	1.107		
	40대	36	3.42	.937		
	50대	51	3.57	1.044		

	60대	9	3.44	1.333		
	전체	148	3.55	1.019		
5 용산기지 공원조성	20대	15	3.60	1.121	.581	.677
	30대	37	3.59	1.142		
	40대	36	3.53	.971		
	50대	51	3.84	.987		
	60대	9	3.67	1.118		
	전체	148	3.67	1.039		
5-1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	20대	15	3.60	.828	.574	.682
	30대	37	3.84	1.167		
	40대	36	3.56	1.132		
	50대	51	3.84	1.027		
	60대	9	3.56	1.236		
	전체	148	3.73	1.079		
5-2 변환된 주택, 정부 기관설치	20대	15	3.60	.632	2.970	.022
	30대	37	3.51	1.346		
	40대	36	2.81	1.238		
	50대	51	3.61	1.078		
	60대	9	3.56	1.236		
	전체	148	3.39	1.198		

2.6. 정책결정자(1차)-정책수혜자 설문결과 분석

정책결정자(1차)와 정책수혜자에 대한 설문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가설 검정하기 위해서 두 모집단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test 검정은 기네스 맥주회사 과학자 고셋(Gosset)이 1908년에 고안한 분석방법으로 두 표본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t-test분석이라 함은 독립표본 t-test를 말한다. 통계량에서 t-value는 t-test분석의 검정통계량으로 집단 간에 평균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유의확률(p)은 검정통계량을 t분포상에 위치한 확률 값으로 t값을 확률적 값으로 변환한 값이다. t-test는 일표본 t-test와 독립표본 t-test 그리고 대응표본 t-test 등이 있다. 일표본 t-test는 특정한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표본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우리 학교 학생의 영어성적은 전국 영어평균과 다른가 ② 서울의 집값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가 독립표본 t-test는 두 개의 독립적인 표본 간에 하나의 종속변수의 평균이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남녀직원들 간에 회사에 대한 만족 수준은 같은가 ②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한가 대응표본 t-test는 동일한 표본의 A시점의 점수와 B시점의 점수 변화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영상학습법 적용 이후 학생들의 성적은 올랐는가 ②결혼 전과 결혼 후 남성들의 인생관이 달라지는가와 같은 경우이다.

1차 설문결과 분석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에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검증하겠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2차 설문결과는 평균 변화차이를 통해 검증해본다. 정책결정자(1차)와 정책수혜자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 가치와 최근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평균차이를 통하여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4.21의 평균값을 보였고, 정책수혜자는 3.66의 값을 보였다. 평균의 차이는 0.55만큼 값의 차이를 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항목에서도 건설산업 증가, 평택기지 건설효과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견지하였으나, 평택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3점대 평균을 보였다. 경제적 효과를 묻는 19개 항목 중 정책결정자가 효과를 높게 생각한 항목이 대부분 이었고, 정책수혜자보다 낮게 평가한 항목은 미건설 기술 학습, 미건설기술 습득, 국산자재 세계 진출, 소비측면 주둔여건 개선, 지역내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가 등 7개 항목이다. 이는 정책결정자 측면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생산을 통한 효과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정책결정자들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0.36 평균차이가 나타났으며, 반환기지 개발사업과 용산공원조성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났고,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평균값이 나타났다. 미건설기술을 학습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비해 다소 낮은 분포를 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은 3.06이고 정책수혜자들은 3.21로 0.15만큼 정책수혜자들이 더 높게 평가한 항목이다. 주둔을 통한 소비측면 개선항목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는 3.50의 값을 보였고, 정책수혜자는 3.53 값을 보였다. 미군 가족동반을 향상이나 미시설 운용 유지비 감사항목에 대해서도 높은 값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지역경제 유발에 대한 정책결정자는 3.97, 정책수혜자는 3.59로 0.38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세부항목으로 건설인력 소비증가, 기지운영 유지 소비증가, 지역내 인구유입증가, 지방세수 증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하

였다. 두 그룹 모두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없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실무자 3.79와 정책수혜자 3.53으로 0.26차이가 발생했다. 정책결정자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더 높게 나왔으나, 정책수혜자와의 차이는 경제적 효과 0.55 보다는 더 낮은 수치로 나왔다. 이는 정책적 효과에 대한 두 그룹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이고, 간격차가 적은 것은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효과에 대한 12개 항목 중 정책결정자보다 정책수혜자가 더 높게 평가한 항목은 없었다. 이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더 높게 평가하고 정책적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권 보장 측면의 효과를 볼 때 정책결정자가 정책수혜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실시했고, 차이는 0.4값을 나타냈다. 세부사항으로 공여지역 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측면에서 정책수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실시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두 그룹 모두 비슷한 평가를 실시했다. 다만, 세부항목에서 기반시설 확충,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 그룹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실시했다. 정책수혜자도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을 표하지는 않았다. 한미동맹강화 측면에서는 두 그룹 모두 높은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한·미간의 동맹강화나 작전 전략적효과라든지 국가 안보강화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높지 않았다. <표 50 참조>

표 50.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 경제사회적효과 설문 분석

O : 정책결정자 S : 정책수혜자					
항 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경제적 효과	O	34	4.21	.729	.125

	S	148	3.66	.923	.076
1-1 건설산업증가	O	34	4.32	.727	.125
	S	148	3.75	.872	.072
1-1-1 평택기지건설	O	34	4.12	.946	.162
	S	148	3.82	.774	.064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O	34	3.82	.869	.149
	S	148	3.78	.829	.068
1-2 생산산업사업	O	34	3.94	.694	.119
	S	148	3.58	.904	.074
1-2-1 환경정화사업	O	34	3.41	.988	.169
	S	148	3.40	.953	.078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O	34	4.24	.554	.095
	S	148	3.74	.784	.064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O	34	4.18	.758	.130
	S	148	3.78	.807	.066
1-3 미건설기술학습	O	34	3.06	1.013	.174
	S	148	3.21	.867	.071
1-3-1 미건설기술습득	O	34	2.97	1.000	.171
	S	148	3.12	.989	.081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O	34	3.12	1.008	.173
	S	148	3.45	.875	.072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O	34	3.50	.896	.154
	S	148	3.53	.777	.064
1-4-1 미군가족동반율향상	O	34	3.50	.929	.159
	S	148	3.49	.884	.073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O	34	3.47	.896	.154
	S	148	3.53	.852	.070
1-5 지역경제유발	O	34	3.97	.834	.143
	S	148	3.59	.895	.074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O	34	3.79	.946	.162
	S	148	3.59	.848	.070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O	34	3.74	.963	.165
	S	148	3.56	.882	.073
1-5-3 지역내인구유입	O	34	3.47	.992	.170
	S	148	3.51	.884	.073
1-5-4 지방세수증가	O	34	3.38	1.101	.189
	S	148	3.40	.946	.078
2 사회-정책효과	O	34	3.79	.770	.132
	S	148	3.53	.868	.071
2-1 국민권리보장	O	34	3.82	.936	.161
	S	148	3.42	.990	.081
2-1-1 공여지해제	O	34	4.06	.919	.158
	S	148	3.62	.943	.078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O	34	4.09	.866	.148
	S	148	3.60	.886	.073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O	34	3.97	.969	.166
	S	148	3.55	.957	.079
2-2 균형발전	O	34	3.68	1.173	.201
	S	148	3.62	.868	.071
2-2-1 기반시설확충	O	34	3.74	.994	.171
	S	148	3.69	.840	.069
2-2-2 반환기지개발	O	34	4.12	.946	.162
	S	148	3.75	.864	.071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O	34	4.15	.744	.128
	S	148	3.74	.899	.074

2-3 한미동맹강화(안보)	O	34	3.85	1.048	.180
	S	148	3.54	.921	.076
2-3-1 한미작전전략적효과	O	34	3.76	.955	.164
	S	148	3.50	1.027	.084
2-3-2 국가안보강화	O	34	3.82	1.058	.181
	S	148	3.40	.995	.082

주요 핵심이슈에 대해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분석해보면 현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10개 항목에 대해 정책결정자보다 정책수혜자가 더 높게 평가한 항목은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 미측에게 책임을 부과해야한다. 협정개정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해 높은 값을 부여했다. 이는 오염정화에 대해 시민들은 강하게 실시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측에게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정책결정자들은 3.91의 값을 정책수혜자들은 4.06의 강한 긍정의견을 나타내었고, 이를 세부항목으로 보면 미측에게 반드시 책임을 부과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는 3.65의 값을 정책수혜자는 4.06의 값을 나타내었고, 한측에서 오염치유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3.50이하 값을 나타내었고 협정개정 우선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높은 값을 형성했다. 계획된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 받아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4.12의 값을 정책수혜자들은 3.88의 값을 나타내어 본 논고에서 오히려 정책수혜자들이 높게 나타날 것 같은 수치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모두 반환해야하는 지와 필수기지 제외한 미반환 상태로 종결해야한다는 의견 모두 상당히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수혜자들과 비교하여 2차 설문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항목이다. 마지막 항목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 계획된 용산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변화된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형성하였다.

두 그룹 모두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고 답을 형성하였다. 다만정책 결정자에 비해 그 수치가 더 낮게 나온 점은 변경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표 51 참조>

표 51.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 핵심이슈 설문 분석

O : 정책결정자 S : 정책수혜자					
구 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3 미측오염정화실시	O	34	3.91	1.190	.204
	S	148	4.06	.882	.073
3-1 미측에게책임부과	O	34	3.65	1.323	.227
	S	148	4.06	.867	.071
3-2 한측에서오염치유	O	34	3.50	1.420	.243
	S	148	3.36	1.125	.092
3-3 협정개정우선	O	34	3.85	1.132	.194
	S	148	3.91	.940	.077
4 계획된미군기지반환	O	34	4.12	1.038	.178
	S	148	3.88	.940	.077
4-1 모두반환	O	34	4.00	1.044	.179
	S	148	3.98	1.007	.083
4-2 필수기지미반환	O	34	3.76	1.075	.184
	S	148	3.55	1.019	.084
5 용산기지공원조성	O	34	4.00	1.073	.184
	S	148	3.67	1.039	.085
5-1 계획된용산공원조성	O	34	3.91	1.190	.204
	S	148	3.73	1.079	.089
5-2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O	34	3.50	1.237	.212
	S	148	3.39	1.198	.098

2.7. 정책결정자 설문결과(2차)

1차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자(정부실무자, 1차) 설문결과와 정책수혜자(주민)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난 부분들을 분석하여 과연 정책결정자인 정부실무자들이 정책수혜자인 주민 설문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핵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주민참여수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에서 주민설문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설문 결과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선택 값이 바뀔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다. 2차 설문지를 통해서 정책결정자들의 선택 값이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설문결과 값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민설문 결과와 더불어서 주민과 정책결정자 중 누가 더 높은 값을 선택했는지도 같이 제공하였다. 아래<표 52>는 2차 설문에 사용한 설문지이다.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사질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응답으로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그룹에서 더 긍정적인 의견이었는지를 표기하여 1차 설문 결과정보를 공개하였다.

표 52. 정책결정자 2차 설문지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사업차원) 효과가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6			실무자 평균값 4.21	
1-1 건설산업측면 사업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5			실무자 평균값 4.32	
1-1-1 평택기지 건설사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82			실무자 평균값 4.12	
1-1-2 평택주민 편익시설사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8			실무자 평균값 3.82	

1-2 생산산업측면 사업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8			실무자 평균값 3.94	
1-2-1 반환기지 환경정화 사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0			실무자 평균값 3.41	
1-2-2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4			실무자 평균값 4.24	
1-2-3 용산 국가공원 조성사업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8			실무자 평균값 4.18	
1-3 美 건설기술 학습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21			실무자 평균값 3.06	
1-3-1 미국 건설기술 습득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12			실무자 평균값 2.97	
1-3-2 국제경제 세계시장 진출여건 확대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5			실무자 평균값 3.12	
1-4 소비측면 주둔여건개선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3			실무자 평균값 3.50	
1-4-1 미군가족 동반을 향상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9			실무자 평균값 3.50	
1-4-2 미시설운영 유지비 감소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3			실무자 평균값 3.47	
1-5 지역경제 유발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9			실무자 평균값 3.97	
1-5-1 건설력 고용채류 유동 소비 증가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9			실무자 평균값 3.79	
1-5-2 가시운영 유지 및 지역내 소비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6			실무자 평균값 3.74	
1-5-3 지역내 인구유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1			실무자 평균값 3.47	
1-5-4 지방세수 증가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0			실무자 평균값 3.38	
2. 사회적(정책차원) 효과가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3			실무자 평균값 3.79	
2-1 국민권리 보장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2			실무자 평균값 3.82	
2-1-1 대규모 공여지 해제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2			실무자 평균값 4.06	
2-1-2 안전지역(군사보호구역) 해제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0			실무자 평균값 4.09	
2-1-3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5			실무자 평균값 3.97	
2-2 균형발전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2			실무자 평균값 3.69	

2-2-1	기반시설 확충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9	실무자 평균값 3.62
2-2-2	반환기지 개발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5	실무자 평균값 4.12
2-2-3	용산 국가공원 조성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4	실무자 평균값 4.15
2-3	한미동맹 강화(안보)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4	실무자 평균값 3.85
2-3-1	韓美 작전·전략적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0	실무자 평균값 3.76
2-3-2	국가안보 강화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0	실무자 평균값 3.82
3.	주한미군기지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민이 정부관계자보다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4.06	실무자 값 3.91
3-1	반환협상을 통하여 미측에게 끝까지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야한다. * 주민이 정부관계자보다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4.06	실무자 값 3.65
3-2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한측에서 먼저 미군기지 오염치유를 해야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36	실무자 평균값 3.50
3-3	오염정화보다는 SOFA 또는 협정개정을 먼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 주민이 정부관계자보다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91	실무자 평균값 3.85
4.	주한미군기지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88	실무자 평균값 4.12
4-1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98	실무자 평균값 4.00
4-2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 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5	실무자 평균값 3.76
5.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7	실무자 평균값 4.00
5-1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3	실무자 평균값 3.91
5-2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39	실무자 평균값 3.50

설문지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설문지는 1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항목으로 경제사회적 가치 구성항목 31개와 최근 이슈가 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별도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가치 구성항목을 통해 가치의 차이를 그리고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항목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 항목을 가지고 취지를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일부 부서와 기관은 설문서 링크를 보내 6월 한달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부서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서에서는 소수가 설문을 실시하는데 부서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였다. 따라서 설문대상은 무기명으로 응답을 하였고, 문서로 받은 설문지도 무기명으로 처리하였다. 설문구성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과 현재 이슈가 되는 환경오염정화, 미군기지 전체반환, 용산공원에 대한 질문을 설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리커트(Like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집단의 일반 특성이다. 설문대상은 총리실의 지원단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인원과 국방부 사업단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부 지자체(평택, 동두천, 의정부시)의 미군기지 담당자도 참석하였다. 물론 1차 설문을 담당할 인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일부 바뀐인원에 대해서는 동일 담당 직책인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최대한 동일시각을 유지하고 이를 결과로 반영하였다. 설문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차와 동일한 설문 집단 특성이 나타나도록, 일부 실무자가 변경이 되어도 동일 실무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동일 시각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동일실무자가 아닌 점은 다소 아쉽지만 최대한 1차와 동일한 직책의 인원의 답변이 되

도록 노력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28명(82.4%), 여자가 6명(17.6%)으로 1차와 동일하게 남자가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명(5.9%), 30대가 6명(17.6%), 40대가 13명(38.2%), 50대가 13명(38.2%)으로 1차와 비슷하게 업무 특성상 40-50대가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으로 대졸 및 대학원졸 인원이 전체의 대부분(32명, 94.1%)을 차지하였다. 근무지 인원은 1차 설문이후 부처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인원이 증가하여 총리실이 8명, 외교부 1명, 환경부 1명, 국토부 3명, 국방부 2명, 국방부 사업단 4명 지자체 4명, 그리고 기타 11명으로 1/3정도 인원이 기타로 답변하였다. 참석인원들이 부처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부서를 밝힐 경우 소수인 경우 개인 의견이 노출될 것을 꺼려한 것을 판단했다. 그러나 답변은 동일 직책 인원이 답변하여 분석은 가능하였다.<표 53 참조>

표 53. 정책결정자 2차 설문 집단의 일반적 특성 분석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8	82.4
	여	6	17.6
	소계	34	100.0
연령별	20대	2	5.9
	30대	6	17.6
	40대	13	38.2
	50대	13	38.2
	소계	34	100.0
학력	전문대졸	2	5.9
	대졸	21	61.8
	대학원졸	11	32.4
	소계	34	100.0
직업	사무직	28	82.4
	전문직	1	2.9

	기타	5	14.7
	소계	34	100.0
지역	서울	13	38.2
	경기	14	41.2
	충청	7	20.6
	소계	34	100.0
	총리실	8	23.5
근무지	외교부	1	2.9
	환경부	1	2.9
	국토부	3	8.8
	국방부	2	5.9
	국방부 기타	4	11.8
	지자체	4	11.8
	기타	11	32.4
	전체	34	100.0
	1-3년	2	5.9
근무연수	3-5년	6	17.6
	5-10년	2	5.9
	10-15년	1	2.9
	15-20년	8	23.5
	20년이상	14	41.2
	기타	1	2.9
	소계	34	100.0
	6개월미만	8	23.5
미군기지경험	6-12개월	16	47.1
	13-24개월	2	5.9
	25-36개월	3	8.8
	36-48개월	-	-
	48개월이상	1	2.9
	기타	4	11.8
	소계	34	100.0

2차 설문에서 1차와 동일하게 근무지 근무연수와 미군기지 실무경험 등을 포함시킨 것은 근무지 차이는 발생하더라도 근무경험에 따른 변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1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표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질문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으로 먼저 빈도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전체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9개 항목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응답자들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 29명(85.3%)이 긍정적이라고 답해서 1차에 비해 1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13명(38.2%) 그렇다 16명(47.1%)라고 답변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1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30명(88.2%)이 긍정적으로 답해서 1차 20명(58.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12명(35.3%), 그렇다 18명(52.9%)라고 답변했다. 사회적-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없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85.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88.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2차설문에서는 오히려 사회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와 유사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54 참조>

표 54. 정책결정자 경제사회적효과 2차 설문 분석

경제적 효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5	14.7	14.7	14.7
	그렇다	16	47.1	47.1	61.8
	매우그렇다	13	38.2	38.2	100.0
	전체	34	100.0	100.0	
사회-정책적 효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보통이다	4	11.8	11.8	11.8
	그렇다	18	52.9	52.9	64.7
	매우그렇다	12	35.3	35.3	100.0
	전체	34	100.0	100.0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니 경제적 가치의 평균은 1차 3.70에 비해 3.85로 증가하였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1차 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 반환기지 개발사업 대비해서 2차는 경제적 효과, 반환기지 개발, 건설산업 증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두 설문이 크게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1차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국산자재 세계진출에 비해 2차는 국산자재 세계진출,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경제적 가치 변화가 주민들 인식과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의견들이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5 참조>

표 55. 정책결정자 경제적효과 2차 설문 분석

구 분	N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경제적 효과	34	4.21	.729	4.24	.699
1-1 건설산업증가	34	4.32	.727	4.15	.610
1-1-1 평택기지건설	34	4.12	.946	4.09	.712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34	3.82	.869	3.88	.769
1-2 생산산업사업	34	3.94	.694	3.91	.753
1-2-1 환경정화사업	34	3.41	.988	3.68	.912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34	4.24	.554	4.29	.676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34	4.18	.758	4.03	.969
1-3 미건설기술학습	34	3.06	1.013	3.38	.739
1-3-1 미건설기술습득	34	2.97	1.000	3.38	.779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34	3.12	1.008	3.32	.727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34	3.50	.896	3.68	.638

1-4-1 미군가족동반율향상	34	3.50	.929	3.53	.748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34	3.47	.896	3.71	.719
1-5 지역경제유발	34	3.97	.834	4.09	.712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34	3.79	.946	3.97	.674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34	3.74	.963	3.97	.674
1-5-3 지역내인구유입	34	3.47	.992	3.97	.627
1-5-4 지방세수증가	34	3.38	1.101	3.91	.753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사회적(정책효과) 가치의 평균은 1차 3.90에 비해 2차는 3.99이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1차 용산국가공원 조성, 반환기지 개발, 군사보호 구역해제에 비해 2차는 공여지 해제,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공원 조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치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1차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비해 2차는 국민권리보장, 한미 작전적 전략적 효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긍정적 의견과 비교적 낮은 의견 항목들이 유사했지만 긍정의견 중 공여지 해제는 주민의견(3.62)이 낮아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높아졌고, 국민권리보장은 주민의견(3.42)과 유사하게 1차(3.82)→2차(3.71)로 크게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일부 실무자들이 주민의견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56 참조>

표 56. 정책결정자 사회적효과 2차 설문 분석

구 분	N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 사회-정책효과	34	3.79	.770	4.00	.651
2-1 국민권리보장	34	3.82	.936	3.71	.719
2-1-1 공여지해제	34	4.06	.919	4.24	.654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34	4.09	.866	4.00	.696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34	3.97	.969	4.03	.834
2-2 균형발전	34	3.68	1.173	3.91	.712
2-2-1 기반시설확충	34	3.74	.994	3.94	.776
2-2-2 반환기지개발	34	4.12	.946	4.24	.699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34	4.15	.744	4.15	.857
2-3 한미동맹강화(안보)	34	3.85	1.048	3.97	.870
2-3-1 한미작전전략전효과	34	3.76	.955	3.85	.857
2-3-2 국가안보강화	34	3.82	1.058	3.82	.904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동일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24명(70.6%), 2차에서는 23명(77.6%)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1차에서는 매우 그렇다 14명(41.2%)와 그렇다 10명(29.4%)로 응답했고 2차에서는 매우 그렇다 10명(29.4%)와 그렇다 13명(38.2%)이 긍정적이었다. 다만 1차와 다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원이 3명(8.8%)이 새로 답변하였고, 1차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6명(17.6%)과 보통이다 4명(11.8%)이 2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1명(2.9%)과 보통이다 7명(20.6%) 답변하였다. 이는 주민의 긍정적 의견이 더 높은 값에 대해서 긍정 의견은 유사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3명이 증가하면서 실무자 평균값이 더욱 낮아져서 1차(3.91)보다 낮은 2차(3.76) 값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질문으로 미측에게 끝까지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 지역개발과 오염확대 방지를 위해서 한측에서 먼저 오염치유를 하는지 중도적 질문으로 이런 사항보다 SOFA협정 개정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차에서는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에 대해 20명(58.8%)과 미측에게 책임을 끝까지 부과해야한다는 답변은 20명(58.5%)으로 동일한 의견으로 답하였는데 2차에서는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에 대해 23명(67.7%)과 미측에게 책임을 끝까지 부과해야한다는 답변은 18명(52.9%)으로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증가하고 미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감소하였다. 평균값으로는 미측에 책임

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은 1차(3.65)에서 2차(3.62)로 유사했으나, 한측에서 오염치유는 1차(3.50)에서 2차(3.76)으로 변경되어 한측에서 오염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협정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답변은 1차에서 21명(61.7%)이 그렇다라고 하였고, 2차에서는 26명(66.4%)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의견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답변자들 중 이시기에 용산기지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한측에서 우선 환경정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여 외부 변수를 배제하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였다. 그리고 역시 답변수가 많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이런 점들은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57 참조>

표 57. 정책결정자 오염정화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3	8.8	8.8	8.8
	그렇지않다	1	2.9	2.9	11.8
	보통이다	7	20.6	20.6	32.4
	그렇다	13	38.2	38.2	70.6
	매우그렇다	10	29.4	29.4	100.0
	전체	34	100.0	100.0	
미측에게 책임부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3	8.8	8.8	8.8
	그렇지않다	1	2.9	2.9	11.8
	보통이다	12	35.3	35.3	47.1
	그렇다	8	23.5	23.5	70.6
	매우그렇다	10	29.4	29.4	100.0
	전체	34	100.0	100.0	
한측에서 우선 오염치유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2	5.9	5.9	8.8
	보통이다	8	23.5	23.5	32.4
	그렇다	16	47.1	47.1	79.4
	매우그렇다	7	20.6	20.6	100.0
	전체	34	100.0	100.0	

SOFA 등 협정개정 우선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	-	-	-
	보통이다	7	20.6	20.6	23.5
	그렇다	18	52.9	52.9	76.5
	매우그렇다	8	23.5	23.5	100.0
전체		34	100.0	100.0	-

또한,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23명(67.6%)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매우 그렇다 17명(50%)와 그렇다 6명(17.6%)로 응답했다. 2차에서는 25명(73.6%)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16명(47.1%)와 그렇다 9명(26.5%)으로 답변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1명(3%)에 불과했다. 이는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미군기지 반환의견이 주민 평균값과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하는지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기지를 끝까지 받아야 한다와 필수기지는 미반환 해야한다는 답변은 1차에서 각각 21명(61.7%)으로 그렇다라는 답변이 모두 같았다. 2차에서는 23명(67.6%), 28명(82.3%)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민의견에서 모두 반환 의견이 유사한 값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평균과 오차범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의견이 1차와 다르게 필수기지 미반환 의견이 증가하였다.<표 58 참조>

표 58. 정책결정자 미군기지만환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계획된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4	11.8	11.8	14.7
	보통이다	4	11.8	11.8	26.5
	그렇다	9	26.5	26.5	52.9

	매우그렇다	16	47.1	47.1	100.0
	전체	34	100.0	100.0	-
모두반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4	11.8	11.8	14.7
	보통이다	6	17.6	17.6	32.4
	그렇다	8	23.5	23.5	55.9
	매우그렇다	15	44.1	44.1	100.0
	전체	34	100.0	100.0	-
필수기지 미반환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지않다	2	5.9	5.9	5.9
	보통이다	4	11.8	11.8	17.6
	그렇다	18	52.9	52.9	70.6
	매우그렇다	10	29.4	29.4	100.0
	전체	34	100.0	100.0	-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해서 1차에서는 22명(64.7%)이 2차에서는 동일하게 21명(61.7%)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에서는 매우 그렇다 15명(44.1%)와 그렇다 7명(20.6%)로 2차에서는 매우 그렇다 13명(38.2%)와 그렇다 8명(23.5%)로 응답해 긍정적이었다. 이를 평균으로 보면 1차(4.0)이 2차(3.82)로 조정되어 주민의견과 가까워졌다.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차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21명, 61.7%)가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 설치해야한다는 답변(18명, 52.9%)보다 3명(8.8%)차이를 보인 반면 2차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22명, 64.7%)가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 설치해야한다는 답변(24명, 70.6%)으로 주택이나 정부기관 설치의견이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주민 평균값과 크게 변동이 있었는데 이는 1차와 2차 설문기간동안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외부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표 59 참조>

표 59. 정책결정자 용산공원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용산기지를 계획된 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렇지않다	2	5.9	5.9	5.9
	보통이다	4	11.8	11.8	17.6
	그렇다	18	52.9	52.9	70.6
	매우그렇다	10	29.4	29.4	100.0
	전체	34	100.0	100.0	-
계획된용산공원조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	5.9	5.9	5.9
	그렇지않다	2	5.9	5.9	11.8
	보통이다	9	26.5	26.5	38.2
	그렇다	8	23.5	23.5	61.8
	매우그렇다	13	38.2	38.2	100.0
	전체	34	100.0	100.0	-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	2.9	2.9	2.9
	그렇지않다	3	8.8	8.8	11.8
	보통이다	8	23.5	23.5	35.3
	그렇다	10	29.4	29.4	64.7
	매우그렇다	12	35.3	35.3	100.0
	전체	34	100.0	100.0	-

인식도 차이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별로 평균값을 비교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거주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성별 인식 차이 분석으로 설문항목에 대한 남·녀간의 성별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차와 2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없어서 <표 60>과 같이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60. 정책결정자 2차 설문 평균 분석

구 분			1차		2차	
	남	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효과	남	29/28	4.31	.712	4.32	.670
	여	5/6	3.60	.548	3.83	.753

건설산업	남	29/28	4.41	.682	4.21	.630
	여	5/6	3.80	.837	3.83	.408
평택기지	남	29/28	4.24	.951	4.21	.686
	여	5/6	3.40	.548	3.50	.548
평택주민편익사업	남	29/28	3.86	.915	3.93	.813
	여	5/6	3.60	.548	3.67	.516
생산산업사업	남	29/28	4.00	.707	3.93	.813
	여	5/6	3.60	.548	3.83	.408
환경정화사업	남	29/28	3.52	1.022	3.75	.967
	여	5/6	2.80	.447	3.33	.516
반환기지개발	남	29/28	4.34	.484	4.39	.685
	여	5/6	3.60	.548	3.83	.408
용산국가공원조성	남	29/28	4.31	.712	4.14	.932
	여	5/6	3.40	.548	3.50	1.049
미건설기술학습	남	29/28	3.14	1.026	3.50	.694
	여	5/6	2.60	.894	2.83	.753
미건설기술습득	남	29/28	3.03	1.017	3.46	.693
	여	5/6	2.60	.894	3.00	1.095
국산자재세계진출	남	29/28	3.21	1.048	3.39	.737
	여	5/6	2.60	.548	3.00	.632
소비촉면주둔여건개선	남	29/28	3.62	.862	3.75	.645
	여	5/6	2.80	.837	3.33	.516
미군가족동반올향상	남	29/28	3.62	.903	3.61	.685
	여	5/6	2.80	.837	3.17	.983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남	29/28	3.52	.911	3.68	.723
	여	5/6	3.20	.837	3.83	.753
지역경제유발	남	29/28	4.07	.753	4.11	.737
	여	5/6	3.40	1.140	4.00	.632
건설인력소비증가	남	29/28	3.90	.939	4.00	.720
	여	5/6	3.20	.837	3.83	.408
기지운영유지소비	남	29/28	3.79	.940	4.04	.693
	여	5/6	3.40	1.140	3.67	.516
지역내인구유입	남	29/28	3.55	1.021	3.96	.637
	여	5/6	3.00	.707	4.00	.632
지방세수증가	남	29/28	3.45	1.121	3.96	.693
	여	5/6	3.00	1.000	3.67	1.033
사회-정책효과	남	29/28	3.86	.789	4.04	.637
	여	5/6	3.40	.548	3.83	.753
국민권리보장	남	29/28	3.93	.884	3.82	.670
	여	5/6	3.20	1.095	3.17	.753
공여지해제	남	29/28	4.14	.915	4.25	.701
	여	5/6	3.60	.894	4.17	.408
군사보호구역해제	남	29/28	4.17	.848	4.07	.663
	여	5/6	3.60	.894	3.67	.816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남	29/28	4.00	1.000	4.14	.803
	여	5/6	3.80	.837	3.50	.837
균형발전	남	29/28	3.79	1.146	4.00	.667
	여	5/6	3.00	1.225	3.50	.837
기반시설확충	남	29/28	3.83	1.002	4.04	.744
	여	5/6	3.20	.837	3.50	.837
반환기지개발	남	29/28	4.21	.902	4.32	.670
	여	5/6	3.60	1.140	3.83	.753
용산국가공원조성	남	29/28	4.24	.739	4.21	.833
	여	5/6	3.60	.548	3.83	.983
한미동맹강화(안보)	남	29/28	3.90	1.113	4.07	.813

	여	5/6	3.60	.548	3.50	1.049
한미작전전략전효과	남	29/28	3.83	1.002	3.93	.813
	여	5/6	3.40	.548	3.50	1.049
국가안보강화	남	29/28	3.90	1.113	3.93	.858
	여	5/6	3.40	.548	3.33	1.033
미측오염정화실시	남	29/28	4.00	1.195	3.75	1.236
	여	5/6	3.40	1.140	3.83	.983
미측에게책임부과	남	29/28	3.69	1.365	3.57	1.260
	여	5/6	3.40	1.140	3.83	.983
한측에서오염치유	남	29/28	3.66	1.421	3.86	.932
	여	5/6	2.60	1.140	3.33	1.033
협정개정우선	남	29/28	3.90	1.205	4.04	.881
	여	5/6	3.60	.548	3.50	.548
계획된미군기지반환	남	29/28	4.21	1.048	4.04	1.232
	여	5/6	3.60	.894	4.00	.894
모두반환	남	29/28	4.07	1.067	4.00	1.186
	여	5/6	3.60	.894	3.67	1.211
필수기지미반환	남	29/28	3.79	1.082	4.18	.772
	여	5/6	3.60	1.140	3.50	.837
용산기지공원조성	남	29/28	4.21	1.013	3.96	1.261
	여	5/6	2.80	.447	3.17	.408
계획된용산공원조성	남	29/28	4.07	1.193	3.96	1.138
	여	5/6	3.00	.707	3.33	.816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남	29/28	3.45	1.325	3.71	1.150
	여	5/6	3.80	.447	3.83	.408

연령별 인식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를 찾기 힘들었다. 20대와 30대의 표본이 소수이고 40대와 50대도 마찬가지로 이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타 학력, 직업, 지역과 근무부서를 분석하기에는 표본 수가 적어서 유의미한 분석하기에는 역시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8. 정책결정자(2차)-정책수혜자 설문결과 분석

정책결정자 1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 2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분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정책결정자 1차 설문과 비교하여 2차 설문에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의식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해본다. 1차 설문은 시기상으로 2~3월에 실시하였고, 2차 설문은 6월에 실시하다 보니 해당 기간에 질문에 대해 의견이 조정될만한 사안들이 있었다. 대통령실의 용산이전에 따라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와 용산공원 조성문제가 발생하여 실무자들이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또한 설문결과 분석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에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검증하겠다. 그리고 주로 1차와 2차의 차이는 평균 변화차이를 통해 검증해본다. 정책결정자(2차)와 정책수혜자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경제-사회(정책)적 가치와 최근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사회(정책)적 가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1, 2차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평균차이를 통하여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1차에는 4.21, 2차에서는 4.24의 평균값의 증가를 보였고, 정책수혜자는 3.66의 값을 보였다. 평균의 차이는 0.55→0.58만큼 값의 차이 증가를 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강하게 있다고 보고 있었고, 주민의견에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세부항목에서도 건설산업 측면 사업효과는 1차에서는 4.32, 2차에서는 4.15로 평균값의 감소를 나타냈고, 주민 평균값은 3.75로 평균의 차이는 0.57→0.4로 만큼 값의 감소를 보였

다. 평택기지 건설사업 효과는 1차에서는 3.82, 2차에서는 4.09로 증가하였고, 주민 평균값은 3.82로 평균의 차이는 0→0.27로 증가하였다. 평택주민 편익시설사업 효과는 1차에서는 3.82, 2차에서는 3.88로 증가하였고, 주민 평균값은 3.78로 평균의 차이는 0.04→0.1로 증가하였다. 생산을 통한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94, 2차에서는 3.91로 감소하였고, 주민 평균값은 3.58로 평균의 차이는 0.36→0.33으로 감소하였다. 역시 정책결정자들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환경정화사업 효과는 1차에서는 3.41, 2차에서는 3.68로 주민의 평균값은 3.40으로 평균의 차이는 0.01→0.28로 증가하였다.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1차에는 4.24, 2차에서는 3.68로 주민의 평균값은 3.74로 평균의 차이값은 0.49→0.55로 증가하였다. 용산공원조성에 대해서 1차에서는 4.18 2차에서는 4.03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78로 평균의 차이값은 0.40→0.25로 감소하였다. 미건설기술을 학습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3.06 2차에서는 3.38로 주민의 평균값은 3.21로 평균의 차이는 -0.15→+0.17로 차이가 증가하였다. 미건설기술 습득은 1차에서는 2.97 2차에서는 3.38로 주민의 평균값은 3.21로 평균의 차이값은 -0.15→+0.26으로 증가하였다. 국산자재진출 효과는 1차에서는 3.12 2차에서는 3.32로 -0.34→-0.13으로 감소하였다. 주돈을 통한 소비측면 개선항목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50의 값을 2차에서는 3.68로 주민의 평균값은 3.53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03→0.14로 증가하였다. 미군 가족 동반을 향상 효과는 1차에서는 0.50 2차에서는 3.53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01→0.04로 증가하였다. 미시설 운용 유지비 감소효과는 1차에서는 3.47 2차에서는 3.71로 주민의 평균값은 3.53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06→0.17로 증가하였다.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차에서는 3.97 2차에서는 4.09로 주민의 평균값은 3.59로 평균의 차이값은 0.38→0.49로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으로 건설인력 소비

증가에서 1차에서는 3.79 2차에서는 3.97 주민의 평균값은 3.59로 주민의 평균값은 0.20→0.38로 증가하였다. 기지운영 유지 소비증가 효과는 1차에서 3.74, 2차에서는 3.97로 주민의 평균값은 3.56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17→0.41로 증가하였다. 지역내 인구유입 증가효과는 1차에서는 3.47, 2차에서는 3.97로 주민의 평균값은 3.51로 평균 값의 차이는 -0.04→0.46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세수 증가효과는 1차에서는 3.38, 2차에서는 3.91로 주민의 평균값은 3.40로 평균의 차이값은 -0.02→0.51로 증가하였다.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실무자는 1차에서는 3.79, 2차에서는 4.00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53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26→0.47로 증가하였다. 사회 정책적 효과는 1차설문에서 주민의 평균값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가설을 세웠고 2차에서도 역시 더 높은 값으로 나왔다. 다만, 주민의 평균값을 보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국민권리 보장 측면의 효과를 볼 때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82, 2차에서는 3.71로 주민의 평균값은 3.42로 평균값의 차이는 0.40→0.29로 감소하였다. 세부항목으로 공여지 해제는 1차에서는 4.06, 2차에서는 4.24로 주민의 평균값은 3.62로 평균값의 차이는 0.44→0.61로 증가하였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 효과는 1차에서는 4.09, 2차에서는 4.00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60으로 평균값의 차이가 0.49→0.40으로 감소하였다.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는 1차에서는 3.91, 2차에서는 4.03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55로 평균값의 차이는 0.42→0.48로 증가하였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68, 2차에서는 3.91로 주민의 평균값은 3.62로 평균값의 차이는 0.05→0.29로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으로 기반시설 확충 효과는 1차에서는 3.74, 2차에서는 3.9+4로 주민의 평균값은 3.69로 평균값의 차이는 0.05→0.25로 증가하였다. 반환기지 개발 효과는 1차에서는 4.12, 2차에서는 4.24로 주민의 평균값은 3.75로 평균값의 차이는

0.37→0.49로 증가하였다. 용산국가공원 조성효과는 1차에서는 4.15, 2차에서는 4.15로 주민의 평균값은 3.74로 평균의 차이값은 0.41로 동일했다. 한미동맹강화 측면에서는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85, 2차에서는 3.97, 주민의 평균값은 3.54로 평균값의 차이는 0.31→0.43으로 증가하였다. 한미 작전적 전략적 효과에서 1차에서는 3.76, 2차에서는 3.85로 주민의 평균값은 3.50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26→0.35로 증가하였다. 국가안보 강화 효과에서는 1차에서는 3.82, 2차에서는 3.82로 주민의 평균값은 3.40으로 평균값의 차이는 0.42 변화가 없었다. <표 61 참조>

표 61.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집단간 2차 설문 분석

구분		O : 정책결정자 S : 정책수혜자					
		1차			2차		
항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1 경제적 효과	O	34	4.21	.729	4.24	.699	+0.03
	S	148	3.66	.923	3.66	.923	-
1-1 건설산업증가	O	34	4.32	.727	4.15	.610	△0.17
	S	148	3.75	.872	3.75	.872	-
1-1-1 평택기지건설	O	34	4.12	.946	4.09	.712	0.03
	S	148	3.82	.774	3.82	.774	-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O	34	3.82	.869	3.88	.769	+0.06
	S	148	3.78	.829	3.78	.829	-
1-2 생산산업사업	O	34	3.94	.694	3.91	.753	△0.03
	S	148	3.58	.904	3.58	.904	-
1-2-1 환경정화사업	O	34	3.41	.988	3.68	.912	+0.27
	S	148	3.40	.953	3.40	.953	-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O	34	4.24	.554	4.29	.676	+0.05
	S	148	3.74	.784	3.74	.784	-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O	34	4.18	.758	4.03	.969	△0.15
	S	148	3.78	.807	3.78	.807	-
1-3 미건설기술학습	O	34	3.06	1.013	3.38	.739	+0.32
	S	148	3.21	.867	3.21	.867	-
1-3-1 미건설기술습득	O	34	2.97	1.000	3.38	.779	+0.41
	S	148	3.12	.989	3.12	.989	-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O	34	3.12	1.008	3.32	.727	+0.20
	S	148	3.45	.875	3.45	.875	-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O	34	3.50	.896	3.68	.638	+0.18
	S	148	3.53	.777	3.53	.777	-
1-4-1 미군가족동반올향상	O	34	3.50	.929	3.53	.748	+0.03

	S	148	3.49	.884	3.49	.884	-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O	34	3.47	.896	3.71	.719	+0.24
	S	148	3.53	.852	3.53	.852	-
1-5 지역경제유발	O	34	3.97	.834	4.09	.712	+0.12
	S	148	3.59	.895	3.59	.895	-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O	34	3.79	.946	3.97	.674	+0.18
	S	148	3.59	.848	3.59	.848	-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O	34	3.74	.963	3.97	.674	+0.23
	S	148	3.56	.882	3.56	.882	-
1-5-3 지역내인구유입	O	34	3.47	.992	3.97	.627	+0.50
	S	148	3.51	.884	3.51	.884	-
1-5-4 지방세수증가	O	34	3.38	1.101	3.91	.753	+0.53
	S	148	3.40	.946	3.40	.946	-
2 사회-정책효과	O	34	3.79	.770	4.00	.651	+0.21
	S	148	3.53	.868	3.53	.868	-
2-1 국민권리보장	O	34	3.82	.936	3.71	.719	△0.11
	S	148	3.42	.990	3.42	.990	-
2-1-1 공여지해제	O	34	4.06	.919	4.24	.654	+0.18
	S	148	3.62	.943	3.62	.943	-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O	34	4.09	.866	4.00	.696	△0.09
	S	148	3.60	.886	3.60	.886	-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O	34	3.97	.969	4.03	.834	+0.06
	S	148	3.55	.957	3.55	.957	-
2-2 균형발전	O	34	3.68	1.173	3.91	.712	+0.23
	S	148	3.62	.868	3.62	.868	-
2-2-1 기반시설확충	O	34	3.74	.994	3.94	.776	+0.20
	S	148	3.69	.840	3.69	.840	-
2-2-2 반환기지개발	O	34	4.12	.946	4.24	.699	+0.12
	S	148	3.75	.864	3.75	.864	-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O	34	4.15	.744	4.15	.857	0.00
	S	148	3.74	.899	3.74	.899	-
2-3 한미동맹강화(안보)	O	34	3.85	1.048	3.97	.870	+0.12
	S	148	3.54	.921	3.54	.921	-
2-3-1 한미작전전략적효과	O	34	3.76	.955	3.85	.857	+0.09
	S	148	3.50	1.027	3.50	1.027	-
2-3-2 국가안보강화	O	34	3.82	1.058	3.82	.904	0.00
	S	148	3.40	.995	3.40	.995	-

주요 핵심이슈에 대해 1차와 2차 정책결정자 인식 차이를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해보면 현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차가 식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10개 항목에 대해 정책결정자보다 정책수혜자가 더 높게 평가한 항목은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 미측에게 책임을 부과해야한다. 협정개정을 우선해야 한다 이

렇게 3개 항목에 대해 높은 값을 부여했다. 이는 오염정화에 대해 시민들은 미측이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2 참조>

표 62.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집단간 핵심이슈 2차 설문 분석

구분		O : 정책결정자 S : 정책수혜자					
		1차		2차		평균차이	
항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 미측오염정화실시	O	34	3.91	1.190	3.76	1.182	△0.15
	S	148	4.06	.882	4.06	.882	
3-1 미측에게책임부과	O	34	3.65	1.323	3.62	1.206	△0.03
	S	148	4.06	.867	4.06	.867	
3-2 한측에서오염치유	O	34	3.50	1.420	3.76	.955	+0.26
	S	148	3.36	1.125	3.36	1.125	
3-3 협정개정우선	O	34	3.85	1.132	3.94	.851	+0.08
	S	148	3.91	.940	3.91	.940	
4 계획된미균기지방환	O	34	4.12	1.038	4.03	1.167	+0.09
	S	148	3.88	.940	3.88	.940	
4-1 모두반환	O	34	4.00	1.044	3.94	1.179	△0.06
	S	148	3.98	1.007	3.98	1.007	
4-2 필수기지방환	O	34	3.76	1.075	4.06	.814	+0.29
	S	148	3.55	1.019	3.55	1.019	
5 용산기지공원조성	O	34	4.00	1.073	3.82	1.193	△0.18
	S	148	3.67	1.039	3.67	1.039	
5-1 계획된용산공원조성	O	34	3.91	1.190	3.85	1.105	△0.06
	S	148	3.73	1.079	3.73	1.079	
5-2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O	34	3.50	1.237	3.74	1.053	+0.24
	S	148	3.39	1.198	3.39	1.198	

미측에게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책결정자들은 1차에서는 3.91, 2차에서는 3.76으로 주민 평균값은 4.06으로 평균값의 차이는 -0.15→-0.30으로 값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미측에게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65, 2차에서는 3.62로 주민의 평균값은 4.06으로 평균값의 차이는 -0.41→-0.44로 증가하였다.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3.50, 2

차에서는 3.76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36으로 평균값의 차이는 0.14→0.41로 증가하였다. 협정개정을 우선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차는 3.85, 2차에서는 3.94로 주민의 평균값은 3.91로 평균값의 차이는 -0.06→0.03으로 감소하였다. 계획된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 받아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들 1차는 4.12, 2차에서는 4.03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88로 평균값의 차이는 0.24→0.15로 감소하였다. 계획된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해야하는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는 1차는 4.00, 2차에서는 3.94로 주민의 평균값은 3.98로 평균값의 차이는 0.02→-0.04로 증가하였다. 미군에게 필요한 필수기지는 미반환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3.76, 2차에서는 4.06으로 주민의 평균값은 3.55로 평균값의 차이는 0.22→0.51로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모두 반환해야하는지와 필수기지 제외한 미반환 상태로 종결해야한다는 의견 모두 상당히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수혜자들과 비교하여 2차 설문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항목이다.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책결정자는 1차에서는 4.00, 2차에서는 3.82로 주민의 평균값은 3.67로 평균의 차이값은 0.33→0.15로 감소하였다. 계획된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1차에서는 3.91, 2차에서는 3.85로 주민의 평균값은 3.73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18→0.12로 감소하였다. 변화된 계획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1차에서는 3.50, 2차에서는 3.74로 주민의 평균값은 3.39로 평균의 차이값은 0.11→0.35로 증가하였다. 이를 다양한 요인들로 분석해보았다. 주민과 실무자의 반응의 차이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해보았다. 먼저 ①실무자의 평균값이 높고 주민의 평균값이 낮았는데 2차 설문이후 주민의 의견과 반대로 실무자의 의견이 10%이상 변경한 경우→주민의견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강한 의사표현 ②실무자의 평균값이 높고 주민의 평균값이 낮았는데 2차 설문이후 주민

의 의견과 반대 실무자의 의견이 10%이내 변경한 경우→주민의견을 보고 유사한 의사표현 ③주민의 평균값이 높고 실무자가 낮았으나 2차 설문 이후 주민의 의견과 반대로 실무자 의견이 10%이상 변경한 경우→주민의 의견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강한 의사표현 ④주민의 평균값이 높고 실무자가 낮았으나 2차 설문 이후 주민의 의견과 반대로 실무자 의견이 10%이내 변경한 경우→주민의 의견을 보고 유사한 의사표현 ⑤주민의 평균값이 높고 실무자가 낮았으나 2차 설문 이후 주민의 의견에 따라 실무자 의견이 10%이상 변경한 경우→주민의 의견을 보고 실무자의견을 강하게 변경 ⑥주민의 평균값이 높고 실무자가 낮았으나 2차 설문 이후 주민의 의견에 따라 실무자 의견이 10%이내 변경한 경우→주민의 의견을 보고 실무자의견 일부변경 ⑦주민의 평균값이 높고 실무자가 낮았으나 2차 설문 이후 주민의 의견과 반대로 실무자 의견이 10%이상 변경한 경우→주민의 의견을 보고 실무자의견이 강하게 변경 ⑧주민의 평균값이 높고 실무자가 낮았으나 2차 설문 이후 주민의 의견과 반대로 실무자 의견이 10%이내 변경한 경우→주민의 의견을 보고 실무자의견이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다. 1차와 2차 설문의 결과를 분석하여 1차의 실무자와 주민의 평균차를 구하여 2차의 실무자와 주민의 평균차에 대해서 서로 차이를 구하고 전체 평균과의 차이에 대해서 엑셀 함수를 활용하여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 엑셀 함수의 함수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분포에서 정규화된 값을 반환하였다. 즉, 주민평균값의 차이의 평균에 대해서 산술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함으로써 설문 전체인원의 변환인원을 추정할 수 있었고, 변환인원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되었는가 하는 설문 변화 유형을 분석할 수 있었다. 1차 설문에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높았던 의견이 2차설문에서도 그대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그대로 높았던 항목 중에서 10%

이상 변경된 ①유형 항목은 아래와 같다. 동일 유형으로 분류된 항목의 특징을 알아보면,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항목 중에서는 주민의견에 가깝게 조정된(찬성) 항목 중 경제사회적 가치에서는 건설산업증가, 환경정화사업, 용산국가공원조성, 국민권리보장 항목이고 현안 중에서는 용산기지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가깝게 변경되었고, 변화인원도 4~6명 수준에서 변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민의견에 더 멀게 조정된(반대) 항목은 지역경제유발, 건설인력 소비증가, 기지운영 유지 소비, 사회-정책적 효과, 공여지 해제,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반환기지 개발, 한미동맹 강화, 등은 오히려 평균에서 설문인원 들이 점점 더 증가 발생하였다. 현안중에서는 한측에서 오염치유해야 한다. 필수기지는 미반환한다. 변화된 주택, 정부기관을 설치해야한다. 항목에 평균값들이 반대로 증가하였다. <표 63 참조>

표 63.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①집단 2차 설문 분석

구분	구분	N	1차		2차		설문분석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1-1 건설산업증가	O	34	4.32	4.15	17.65%	6 (찬성)	①	
	S	148	3.75					
1-2-1 환경정화사업	O	34	3.41	3.68	-26.47%	-9 (반대)	①	
	S	148	3.40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O	34	4.18	4.03	14.71%	5 (찬성)	①	
	S	148	3.78					
2-1 국민권리보장	O	34	3.82	3.71	11.76%	4 (찬성)	①	
	S	148	3.42					
5 용산기지공원조성	O	34	4.00	3.82	17.65%	6 (찬성)	①	
	S	148	3.67					
1-5 지역경제유발	O	34	3.97	4.09	-11.76%	-4 (반대)	①	
	S	148	3.59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O	34	3.79	3.97	-17.65%	-6 (반대)	①	
	S	148	3.59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O	34	3.74	3.97	-23.53%	-8 (반대)	①	
	S	148	3.56					
2 사회-정책효과	O	34	3.79	4.00	-20.59%	-7 (반대)	①	
	S	148	3.53					
2-1-1 공여지해제	O	34	4.06	4.24	-17.65%	-6 (반대)	①	
	S	148	3.62					

2-2 균형발전	O	34	3.68	3.91	-23.53%	-8 (반대)	①
	S	148	3.62				
2-2-1 기반시설확충	O	34	3.74	3.94	-20.59%	-7 (반대)	①
	S	148	3.69				
2-2-2 반환기지개발	O	34	4.12	4.24	-11.76%	-4 (반대)	①
	S	148	3.75				
2-3 한미동맹강화(안보)	O	34	3.85	3.97	-11.76%	-4 (반대)	①
	S	148	3.54				
3-2 한측에서오염치유	O	34	3.50	3.76	-26.47%	-9 (반대)	①
	S	148	3.36				
4-2 필수기지미반환	O	34	3.76	4.06	-29.41%	-10 (반대)	①
	S	148	3.55				
5-2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O	34	3.50	3.74	-23.53%	-8 (반대)	①
	S	148	3.39				

다음으로 1차 설문에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높았던 의견이 2차 설문에서도 그대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그대로 높았던 항목 중에서 10%이내로 변경된 ②유형 항목은 아래와 같다. 경제적 효과, 평택기지 건설효과, 평택주민 편익사업, 생산 산업, 반환기지 개발사업, 미군 가족 동반을 향상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 64 참조>

표 64.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②집단 2차 설문 분석

구 분			1차	2차	설문분석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1 경제적 효과	O	34	4.21	4.24	-2.94%	-1 (반대)	②
	S	148	3.66				
1-1-1 평택기지건설	O	34	4.12	4.09	2.94%	1 (찬성)	②
	S	148	3.82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O	34	3.82	3.88	-5.88%	-2 (반대)	②
	S	148	3.78				
1-2 생산산업사업	O	34	3.94	3.91	2.94%	1 (찬성)	②
	S	148	3.58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O	34	4.24	4.29	-5.88%	-2 (반대)	②
	S	148	3.74				
미군가족동반을향상	O	34	3.50	3.53	-2.94%	-1 (반대)	②
	S	148	3.49				

다음으로 1차 설문에서 주민이 실무자보다 평균이 높았던 의견이 2차 설문에서도 그대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그대로 높았던 항목 중에

서 10%이상으로 변경된 ③유형 항목은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는 항목이었다. 이는 주민 찬성의견이 실무자에 비해 1차가 높았으며, 실무자들이 2차 의견에서 14.71%(5명이) 의견을 바꿔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65 참조>

표 65.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③집단 2차 설문 분석

구 분			1차	2차	설문분석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3 미측오염정화실시	O	34	3.91	3.76	14.71%	5 (찬성)	③
	S	148	4.06				

다음으로 1차 설문에서 주민이 실무자보다 평균이 높은 항목으로 2차 설문에서도 실무자의 평균이 10%이내 변경된 ④번 항목 유형은 미측에게 환경정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항목이고 거의 의견 변화가 없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표 66 참조>

표 66.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④집단 2차 설문 분석

구 분			1차	2차	설문분석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3-1 미측에게책임부과	O	34	3.65	3.62	2.94%	1 (찬성)	④
	S	148	4.06				

그리고 1차 설문에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높은 항목으로 2차설문에서 실무자가의 평균이 10%이상 낮게 변경된 ⑤번 항목 유형은 없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에 맞추어 변동이 이루어진 항목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 의견이 낮게 나타나면 그에 맞추어 실무자의 의견도 변화

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가설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차 설문에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높은 항목으로 2차 설문에서 실무자간의 평균이 10%이내로 낮게 변경된 ⑥번 항목 유형은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해야한다’이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에 맞추어 실무자의 의견이 변동이 되어 변환된 항목이다. 최초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미세하게 주민들 의견보다 낮아진 항목이다.

<표 67 참조>

표 67.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⑥집단 2차 설문 분석

구 분			1차	2차	설문분석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4-1 모두반환	O	34	4.00	3.94	5.88%	2 (찬성)	⑥
	S	148	3.98				

다음으로 1차 설문에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낮은 항목으로 2차 설문에서 실무자간의 평균이 10%이상로 높게 변경된 ⑦번 항목 유형은 ‘미건설기술 학습, 미건설기술 습득, 국산자재 세계진출, 소비측면 주둔여건 개선, 미시설 운용유지비 감소, 지역내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가’항목이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에 맞추어 실무자의 의견이 변동이 되어 변환된 항목이다. 주민의견이 낮은 것을 보고 의견을 변경하여 주민들 의견과 같아진 항목들로 이러한 의견들은 특징이 평균이 대체로 낮은 항목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항목의 실무자 평균도 1차는 3.28로 2차는 3.62로 다소 낮은 항목이고, 주민들도 3.39로 전체 평균 값과 비교해도 낮은 특징이 있다.<표 68 참조>

표 68.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⑦집단 2차 설문 분석

구 분	1차	2차	설문분석
-----	----	----	------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1-3 미건설기술학습	O	34	3.06	3.38	-32.35%	-11 (반대)	⑦
	S	148	3.21				
1-3-1 미건설기술습득	O	34	2.97	3.38	-41.18%	-14 (반대)	⑦
	S	148	3.12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O	34	3.12	3.32	-20.59%	-7 (반대)	⑦
	S	148	3.45				
1-4 소비촉면주둔여건개선	O	34	3.50	3.68	-17.65%	-6 (반대)	⑦
	S	148	3.53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O	34	3.47	3.71	-23.53%	-8 (반대)	⑦
	S	148	3.53				
1-5-3 지역내인구유입	O	34	3.47	3.97	-50.00%	-17 (반대)	⑦
	S	148	3.51				
1-5-4 지방세수증가	O	34	3.38	3.91	-52.94%	-18 (반대)	⑦
	S	148	3.40				

다음으로 1차 설문에서 실무자가 주민보다 평균이 낮은 항목으로 2차 설문에서 실무자가의 평균이 10%이내로 높게 변경된 ⑧번 항목 유형은 ‘환경관련 협정 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항목이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에 맞추어 실무자의 의견이 변동이 되었으나, 일부만 반대로 돌아선 항목이다. 주민의견이 높은 것을 보고 의견을 변경하여 주민들 의견과 같아진 항목들로 큰 의사 변동은 없으나 주민들 의견에 맞추어 변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69 참조>

표 69.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⑧집단 2차 설문 분석

구 분			1차	2차	설문분석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3-3 협정개정우선	O	34	3.85	3.94	-8.82%	-3 (반대)	⑧
	S	148	3.91				

이러한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과 실무자의 평균값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주민과 실무자 의견이 그대로 유지된 ①②③④ 항목 중 ①③ 항목은 오히려 의견차가 더 발생하게 되었고, ②④항목은 의견차가 유사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주민과 실무자 의견이 변화된 ⑤⑥

⑦⑧항목 중 ⑤⑦항목 주민과 실무자 의견차가 더 발생하게 되었고 ⑥⑧항목은 유사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무자들이 주민에게 의견에 영향을 받아서 변경된 항목들 중 가치요소 중에서는 건설 산업 증가, 용산 국가공원 조성, 국민권리보장 항목이 주민의견에 영향을 받았고, 현안관련 사항 중 용산기지공원조성 항목은 주민의견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치요소 항목 중 지역경제유발, 건설인력소비증가, 기지운영유지소지, 사회 정책적 효과, 공여지 해제,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반환기지 개발, 한미동맹강화(안보) 항목은 오히려 주민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반대 의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현안관련 사항 중 환경오염관련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 필수기지는 미반환한다, 용산기지에 변환된 주택, 정부기관설치를 해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에 영향을 받지않고 더욱 반대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서는 1차가 3월에 실시되었고, 2차가 6월에 실시된 사항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5.10일 들어서고, 이후 대통령실 용산집무실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미군기지 반환에 있어서 환경정화문제, 작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지와 용산기지에 공원과 더불어 주택 및 정부기관 설치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외 주민 의견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항목들은 비슷하게 의견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항목과 반대되는 의견들인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한다와 같은 항목들이 주민의견과 낮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실무자 의견이 주민보다 낮은 항목들 중 변화가 생긴 항목들은 ‘미건설기술 학습, 미건설기술 습득, 국산자재 세계진출, 소비측면 주둔여건 개선, 미시설 운용유지비 감소, 지역내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가’와 같은 항목

들은 주민의견의 평균값이 낮은 항목들로 정책결정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의견이 변동되었으며 평균값이 주민들의 평균값보다 더 높게 변경이 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설문문의 값이 변동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매우 크게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의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41개 항목 중에서 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항목은 25개 항목으로 61% 이상 상당수가 변동이 되었다. 물론 모든 의견이 주민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견이 변동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견들에 영향을 받겠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70 참조>

표 70.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집단별 설문 분석

표 주민과 실무자 반응에 따른 분석 (O : 실무자, S : 주민)									
①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⑤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②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⑥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③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⑦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④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⑧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구 분			1차	2차	설문결과		설문분석		
항 목	구분	N	평균	평균	1차결과	2차결과	변화량	변화인원 (찬/반)	유형
1 경제적 효과	O	34	4.21	4.24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94%	-1 (반대)	②
	S	148	3.66						
1-1 건설산업증가	O	34	4.32	4.15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7.65%	6 (찬성)	①
	S	148	3.75						
1-1-1 평택기지건설	O	34	4.12	4.09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94%	1 (찬성)	②
	S	148	3.82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O	34	3.82	3.88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88%	-2 (반대)	②
	S	148	3.78						
1-2 생산산업사업	O	34	3.94	3.91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94%	1 (찬성)	②
	S	148	3.58						
1-2-1 환경정화사업	O	34	3.41	3.68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6.47%	-9 (반대)	①
	S	148	3.40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O	34	4.24	4.29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88%	-2 (반대)	②
	S	148	3.74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O	34	4.18	4.03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4.71%	5 (찬성)	①
	S	148	3.78						
1-3	O	34	3.06	3.38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32.35%	-11	⑦

미건설기술학습	S	148	3.21					(반대)	
1-3-1	O	34	2.97 3.38						
미건설기술습득	S	148	3.12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41.18%	-14 (반대)		⑦
1-3-2	O	34	3.12 3.32						
국산자재세계진출	S	148	3.45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0.59%	-7 (반대)		⑦
1-4	O	34	3.50 3.68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S	148	3.53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7.65%	-6 (반대)		⑦
1-4-1	O	34	3.50 3.53						
미군가족동반을향상	S	148	3.49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94%	-1 (반대)		②
1-4-2	O	34	3.47 3.71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S	148	3.53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3.53%	-8 (반대)		⑦
1-5	O	34	3.97 4.09						
지역경제유발	S	148	3.59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1.76%	-4 (반대)		①
1-5-1	O	34	3.79 3.97						
건설인력소비증가	S	148	3.59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7.65%	-6 (반대)		①
1-5-2	O	34	3.74 3.97						
기지운영유지소비	S	148	3.56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3.53%	-8 (반대)		①
1-5-3	O	34	3.47 3.97						
지역내인구유입	S	148	3.51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0.00%	-17 (반대)		⑦
1-5-4	O	34	3.38 3.91						
지방세수증가	S	148	3.40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2.94%	-18 (반대)		⑦
2	O	34	3.79 4.00						
사회-정책효과	S	148	3.53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0.59%	-7 (반대)		①
2-1	O	34	3.82 3.71						
국민권리보장	S	148	3.42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1.76%	4 (찬성)		①
2-1-1	O	34	4.06 4.24						
공여지해제	S	148	3.62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7.65%	-6 (반대)		①
2-1-2	O	34	4.09 4.00						
군사보호구역해제	S	148	3.60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8.82%	3 (찬성)		②
2-1-3	O	34	3.97 4.0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S	148	3.55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88%	-2 (반대)		②
2-2	O	34	3.68 3.91						
균형발전	S	148	3.62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3.53%	-8 (반대)		①
2-2-1	O	34	3.74 3.94						
기반시설확충	S	148	3.69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0.59%	-7 (반대)		①
2-2-2	O	34	4.12 4.24						
반환기지개발	S	148	3.75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1.76%	-4 (반대)		①
2-2-3	O	34	4.15 4.15						
용산국가공원조성	S	148	3.74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0.00%	0		②
2-3	O	34	3.85 3.97						
한미동맹강화(안보)	S	148	3.54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1.76%	-4 (반대)		①
2-3-1	O	34	3.76 3.85						
한미작전전략적효과	S	148	3.50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8.82%	-3 (반대)		②
2-3-2	O	34	3.82 3.82						
국가안보강화	S	148	3.40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0.00%	0		②
3	O	34	3.91 3.76						
미측오염정화실시	S	148	4.06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4.71%	5 (찬성)		③
3-1	O	34	3.65 3.62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94%	1 (찬성)		④

미측에게 책임부과	S	148	4.06						
3-2	O	34	3.50	3.76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6.47%	-9 (반대)	①
한측에서 오염치유	S	148	3.36						
3-3	O	34	3.85	3.94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8.82%	-3 (반대)	⑧
협정개정우선	S	148	3.91						
4	O	34	4.12	4.03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8.82%	3 (찬성)	②
계획된미군기지반환	S	148	3.88						
4-1	O	34	4.00	3.94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88%	2 (찬성)	⑥
모두반환	S	148	3.98						
4-2	O	34	3.76	4.06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9.41%	-10 (반대)	①
필수기지미반환	S	148	3.55						
5	O	34	4.00	3.82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17.65%	6 (찬성)	①
용산기지공원조성	S	148	3.67						
5-1	O	34	3.91	3.85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5.88%	2 (찬성)	②
계획된용산공원조성	S	148	3.73						
5-2	O	34	3.50	3.74	주민 <실무자	주민 <실무자	-23.53%	-8 (반대)	①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S	148	3.39						



3. 정책수혜자와 정책결정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정책결정자(1차) 설문결과이다.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으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가치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가치 19개 항목 중에서 경제적 가치의 평균은 3.70이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 반환기지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국산자재 세계진출은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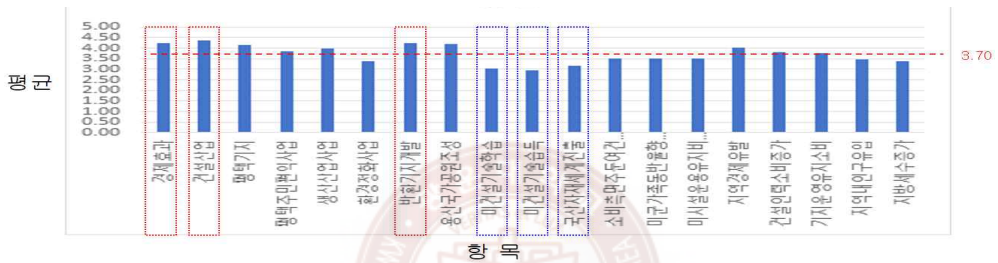


그림 17. 정책결정자 경제적 효과 1차 설문결과

사회적 가치 12개 항목 중에서 사회적 가치 평균은 3.90이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용산국가공원 조성, 반환기지 개발, 군사보호구역해제였다. 반면,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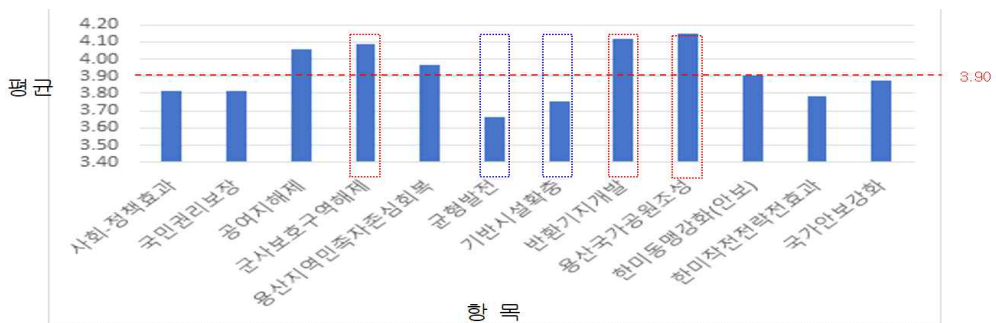


그림 18. 정책결정자 사회적 효과 설문결과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① 주한미군기지 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해야하는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미측에게 끝까지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 지역개발과 오염확대 방지를 위해서 한측에서 먼저 오염치유를 해야하는지 이런사항보다 SOFA협정 개정을 우선 해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평균값은 3.91로 나왔고 세부항목별로 3.65, 3.50, 3.85 값을 나타내어 당연히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해야한다는 답변과 협정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②주한미군기지 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하는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하는지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평균값은 4.12로 높았고, 세부답변도 4.00, 3.76으로 나타내어 계획된 미군기지는 반환되어야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③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평균값으로 4.0로 높았고 세부답변도 3.91, 3.50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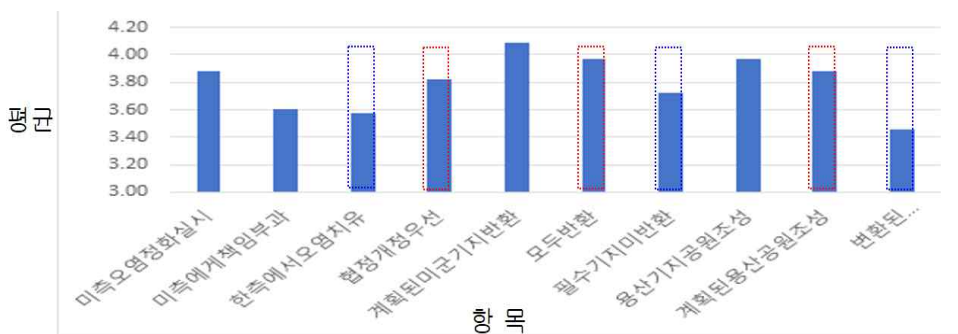


그림 19. 정책결정자 핵심이슈 1차 설문 결과

정책결정자의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려 했으나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거주지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차이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적어서 분석에는 제한이 있었다. 설문 및 기타의견에서 몇가지 주목할 만한 의견도 있었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환경정화 문제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미측과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이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미군주둔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반대로 국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수혜자(주민) 설문결과이다. 정책수혜자(주민)를 대상으로 정책결정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가치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가치 19개 항목 중에서 경제적 가치의 평균은 3.55이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평택기지 건설, 평택주민 편익사업, 용산국가공원 조성(경제이득)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 반환기지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환경정화사업은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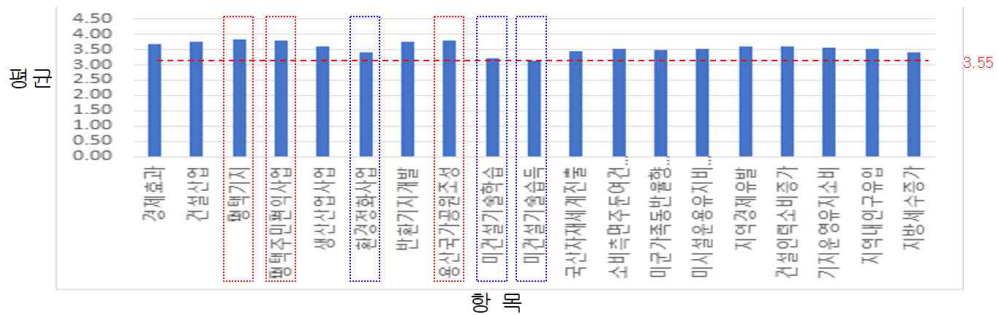


그림 20. 정책수혜자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적 가치 12개 항목 중에서 사회적 가치 평균은 3.58이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공원 조성, 기반시설 확충이었다. 반면, 국가안보강화, 국민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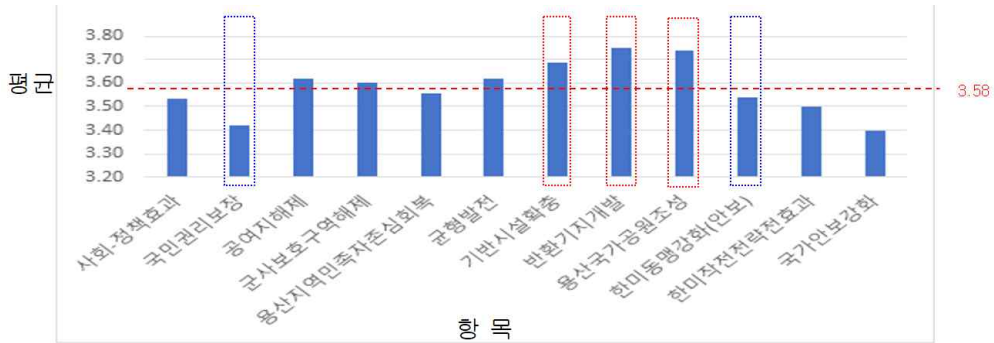


그림 21. 정책수혜자 사회적 효과 분석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①주한미군기지 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해야하는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미측에게 끝까지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 지역개발과 오염확대 방지를 위해서 한측에서 먼저 오염치유를 해야하는지 이런사항보다 SOFA협정 개정을 우선 해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평균값은 4.06로 나왔고 세부항목별로 4.06, 3.36, 3.91 값을 나타내었다.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해야한다는 답변과 협정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②주한미군기지 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하는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하는지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평균값은 3.88로 나왔고, 세부답변도 3.98, 3.55로 나타내어 계획된 미군기지는 반환되어야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③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질문했고 세부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평균값으로 3.67로 나왔고 세부답변도 3.73, 3.39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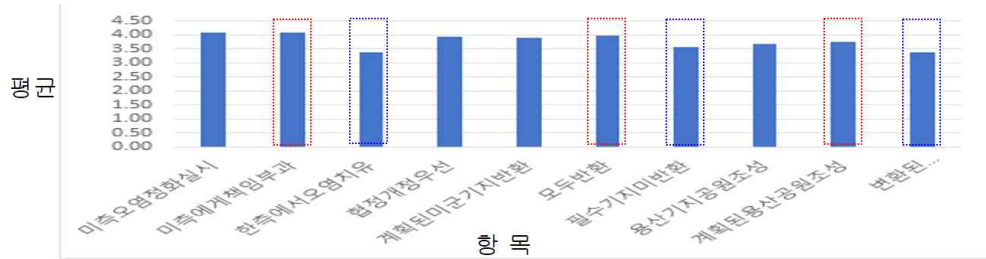


그림 22. 정책수혜자 핵심 이슈 분석

정책수혜자(주민)의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①남여간의 성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남자는 3.68, 여자는 3.4로 남자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남자는 평택주민편익사업, 평택기지건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여자는 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뒤를 용산공원 조성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남자들은 직접 사업이나 기지건설을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여자들은 경제나 건설산업이 효과를 폭넓게 이해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효과로 남자는 3.74이고 여자는 3.39로 나타났다. 남자들은 반환기지 개발, 용산국가공원조성, 기반시설 확충이 효과적이라 하였고, 여자들은 용산국가공원조성, 반환기지개발, 그리고 한미 작전전략적 효과를 세번째로 선택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미추 오염정화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4점대 이상의 의견을 나타냈고, 미추 오염정화 실시는 마찬가지로 4점대, 한측 오염정화에 대해서는 남자는 3.44, 여자는 3.27로 나타났다. 협정개정에 대해서는 남자는 4.03, 여자는

3.76로 남자가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획된 기지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질문에 남자는 3.83, 여자는 3.93으로 유사했고 세부질문에 계획된 기지를 모두 반환해야한다에 남자는 4.01, 여자는 3.94로 긍정적이었고, 미측의 필수기지 미반환에 대해 남여모두 3.63, 3.4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용산공원조성은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3.74, 여자는 3.59로 나타났고 세부질문에서 계획된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에 남자는 3.83, 여자는 3.61로 주택이나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에 남자는 3.23, 여자는 3.5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의 경제-사회적 가치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남자들이 더 우세했으며, 특히, 평택기지 건설이나 용산국가공원 조성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4점대 이상의 강한 긍정을 나타냈다. 주요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향으로 답변하였고 답변도 4점대 이상인 항목이 미측이 오염정화 및 책임부과, 필수기지 모두반환 등에 대해 강한 긍정의견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점이다. 그리고 ②각 항목에 대해 연령별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본다. 먼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전 연령대가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된 산업증가나 평택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고, 미건설기술 습득이나 건설기술 학습 효과는 대체로 낮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가 반환기지 개발과 용산국가공원조성과 관련된 정책에 긍정적으로 보았고, 젊은층은 한미 작전전략적 효과가 이후 세대는 국가안보강화 효과가 대체로 낮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층별로 홍보를 강화해야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각 현안에 대해서는 첫번째,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평균은 4.06으로 높았고, 30, 50대는 평균이상

의견을 20, 40, 60대는 평균 이하로 나타냈다. <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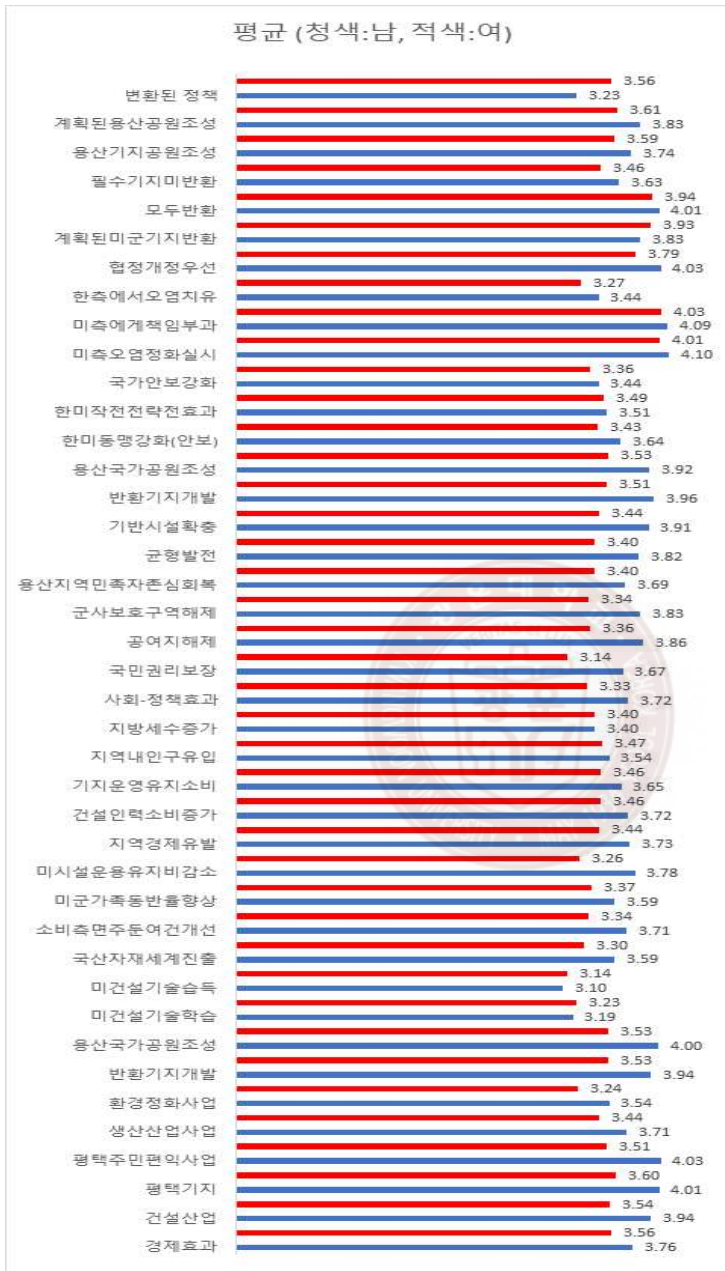


그림 23. 정책수혜자 남녀간 설문결과 분석

세부질문에 대해서도 동일세대에서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두번째, 계획된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0대에서 강한 긍정의견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세대는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마지막으로 반환된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가에 대해 30, 50대가 평균이상 값을 나타내었고, 주택이나 정부기관 설치와 같은 계획을 변경해야하는가에 대해 50, 60대는 평균 이상 값으로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설문 및 기타의견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의견도 있었다. 평택이전에 대해 미군부대가 이전한 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수립된 계획의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기지 반환 지연 및 환경오염 정화문제 등으로 개발이 쉽지 않아 경제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정책결정자(1차)-정책수혜자(주민) 설문결과이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책결정자는 3.70, 정책수혜자(주민)은 3.66의 값을 보였다. 이들 값의 차이는 0.04이다. 경제적 효과를 묻는 19개 항목 중 정책결정자가 높게 평가한 항목이 대부분이었고 정책수혜자보다 낮게 평가한 항목은 미건설기술 학습, 미건설기술 습득, 국산자재 세계 진출, 소비촉진 주둔여건 개선, 지역내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가 등 7개항목이다. 정책결정자가 답변시 각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7개 항목은 주의깊게 살펴볼 항목들이다. <그림 24 참조> 사회적(정책) 효과에 평균값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는 3.85, 정책수혜자(주민)은 3.58의 값을 보였다. 사회적(정책) 효과 12개 항목 중 정책결정자보다 정책수혜자가 높게 평가한 항목은 없었다. 이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이 더 높게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5 참조>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10개 항목 중에서 정책결

정자보다 주민들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한다’와 ‘협정 개정 우선’ 항목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측에게 오염정화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정책결정자는 3.91, 주민들은 4.06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한측의 오염치유에 대해 3.50으로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획된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는 4.12, 주민들은 3.88의 값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모두 반환받아야하는지와 필수기지는 제외하여 미반환 상태로 종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모두 높은 상태로 나와 2차 설문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 두 그룹에서 모두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주민들보다 좀 더 강하게 긍정적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상대적인 질문에 대해서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두 그룹에서 모두 찬반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오염정화 문제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같았다.<그림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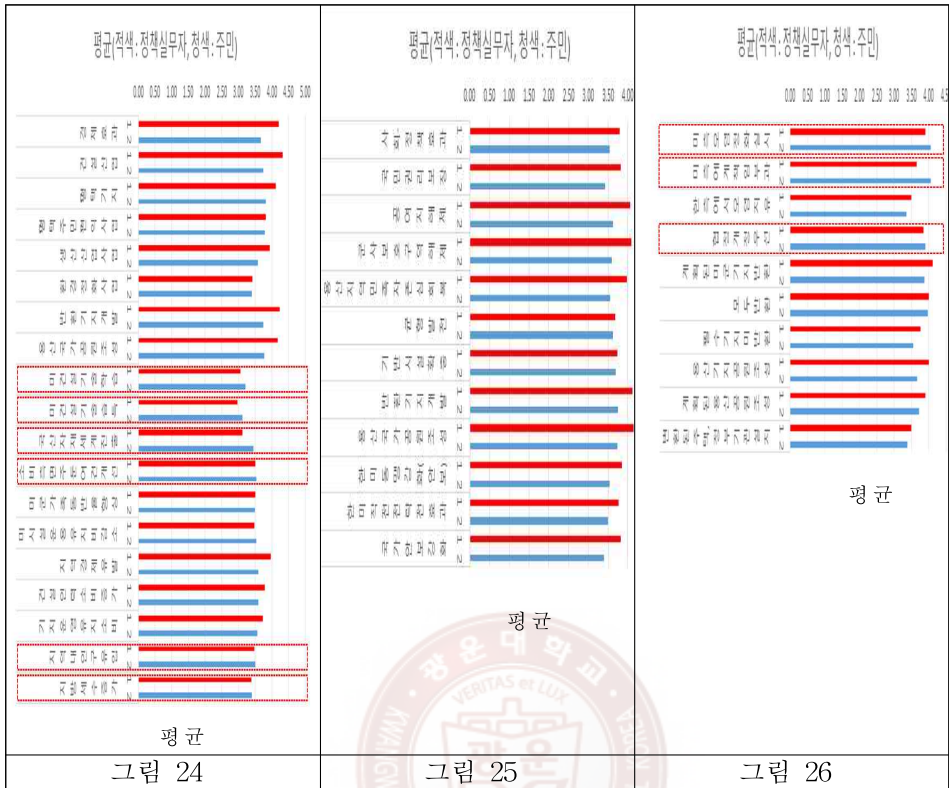


그림 24. 정책결정자(1차)- 정책수혜자(주민) 경제적 효과 분석
 그림 25. 정책결정자(1차)- 정책수혜자(주민) 사회적 효과 분석
 그림 26. 정책결정자(1차)- 정책수혜자(주민) 핵심이슈 분석

정책결정자(2차) 설문결과이다.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설문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대한 가치에 대해 주민들의 설문결과를 보고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실시한 경제적 가치 19개 항목 중에서 경제적 가치의 평균은 1차 3.70에 비해 3.8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1차 경제적 효과, 건설산업 증가, 반환기지 개발사업에서 2차는 경제적 효과, 반환기지 개발사업, 건설산업 증가 순이었다. 반면, 1차에서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국산자재 세계진출에서 2차는 국산자재 세계진

출,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순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서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항목의 평균값은 부정적 답변의 값들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경제가치 변화가 주민들 인식과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로 의견들이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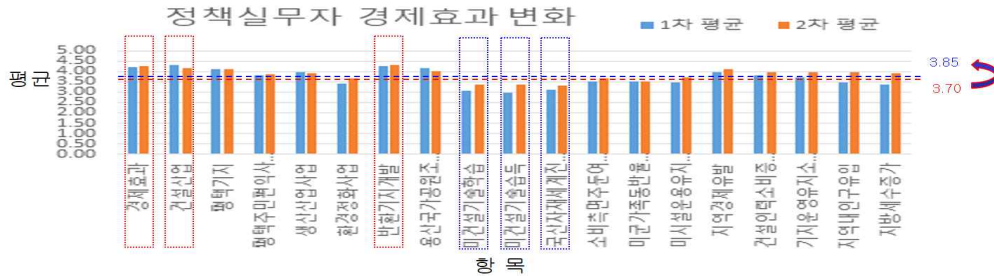


그림 27. 정책결정자(2차)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적 가치 12개 항목 중에서 사회적 가치 평균은 1차에서는 3.90에서 3.99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1차 용산국가공원 조성, 반환기지 개발, 군사보호 구역해제에서 2차는 공여지 해제, 반환기지 개발, 용산 국가공원 조성이었다. 반면, 1차에서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은 2차에서는 국민권리보장, 한미 작전적 전략적 효과, 균형발전이 비교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국민권리 보장은 주민의견과 유사하게 평균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는 실무자들이 주민의견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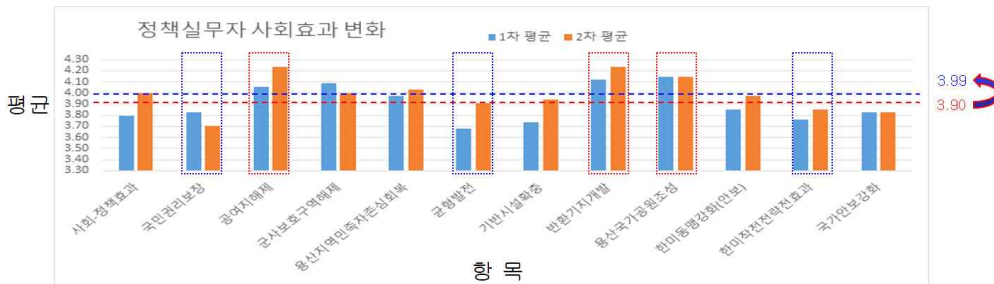


그림 28. 정책결정자(2차) 사회적 효과 분석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①주한미군기지 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해야하는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미측에게 끝까지 책임을 부과해야하는지 지역개발과 오염확대 방지를 위해서 한측에서 먼저 오염치유를 해야하는지 이런사항보다 SOFA협정 개정을 우선 해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1차 평균값은 3.91이었고, 2차에서는 3.76으로 나왔고 세부항목별로 1차 3.65, 3.50, 3.85 값에서 2차 3.62, 3.76, 3.94로 나타났다. 미측에 오염정화 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답변이 미세하게 낮아졌고, 한측에서 오염치유와 SOFA 협정개정 우선사항은 답변이 높아졌다. 이는 주민에 따라 협정 개선 우선의견에따라 의견이 변화하였다. 다만, 한측에서 오염치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변화했는데 이는 정책변화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주한미군기지 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하는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하는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1차 평균값은 4.12, 2차는 4.03으로 낮아졌고, 세부답변은 1차 4.00, 3.76에서 2차 3.94, 4.06으로 나타내어 미군기지를 끝까지 반환받아야한다는 답변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필수기지 미반환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③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질문했고 세부질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1차 평균값 4.0, 2차는 3.82로 낮아졌다. 세부답변은 1차 3.91, 3.50에서 2차 3.85, 3.74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답변이 낮아지고 변경된 주택기관이나 정부기관 설치 답변은 상대

적으로 높아졌다. ④ 주민의견의 평균값에 따라 조정되었으나, 조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겠다.<그림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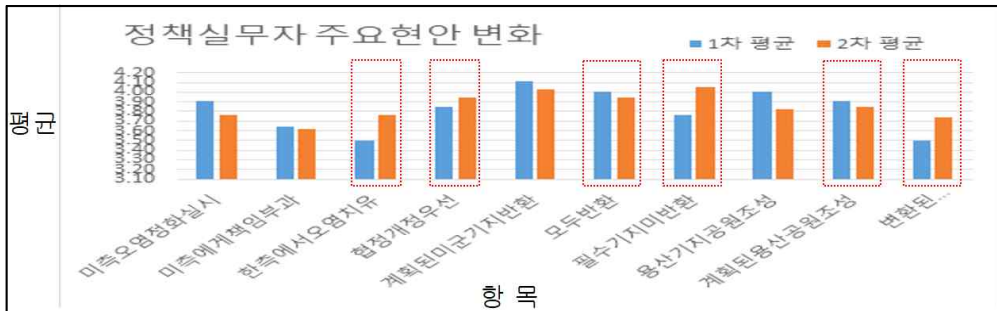


그림 29. 정책결정자(2차) 핵심 이슈 분석

1차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의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려 했으나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거주 지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차이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적어서 분석에는 제한이 있었다. 앞서 의견이 변화할 것에 대해 기타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있었다. 경제적,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재판단이 필요하며 재판단에 따라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환경정화사업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정화사업 현장의 70% 이상을 미군기지 및 군부대 환경정화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화사업이 가지는 의의가 단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만으로 그칠 것이 아닌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 적절한 규모의 국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상호 책임문제에 있어 오염 원인자라는 분명한 행위자가 있음에도 상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책결정자(2차)-정책수혜자(주민) 설문결과이다. 1차에 이어 2차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 경제적 효과 전체 평

균값은 정책결정자 1차는 3.70 2차는 3.85의 평균값 증가를 보여 평균값 차이가 0.15만큼 값의 증가를 보였고, 정책수혜자(주민)은 3.55의 값과 비교시 0.15→0.30의 증가를 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주민)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강하게 있다 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묻는 19개 항목에 대해 제시한 주민의견에 따라 모든 항목에서 변동이 나타났다. 주민의견이 낮게 나옴에 따라 변경된 항목은 주민의 평균값이 낮아 변화가 일어난 항목(청색)은 건설산업효과, 평택기지건설, 생산산업시설, 용산국가 공원조성, 미군가족 동반을 향상 항목이고, 주민보다 평균값이 높아 변화가 일어난 항목(적색)은 미건설기술학습, 미건설기술습득, 국산자재 세계진출, 소비측면 주둔여건 개선, 미시설운동 유지비 감소, 지역내 인구유입, 지방세수 유입증가 항목으로 전체 19개 항목 중에 12개 항목 63%에서 주민평균값에 영향을 받았다.<그림 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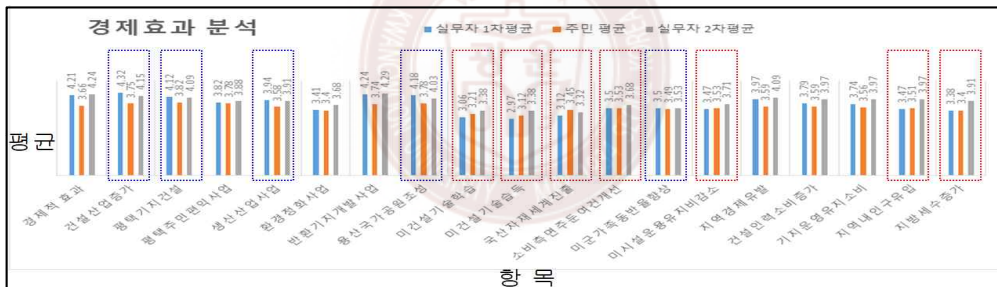


그림 30. 정책결정자(2차) 정책수혜자(주민)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적(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정책결정자는 3.90, 2차에서는 3.99로 주민의 평균값 3.53으로 평균의 차이값은 0.37→0.46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적(정책) 효과 12개 항목 중에서 4개항목은 상향 변동하였고 주민의견에 따라 모든 항목에서 변동이 일어났다.<그림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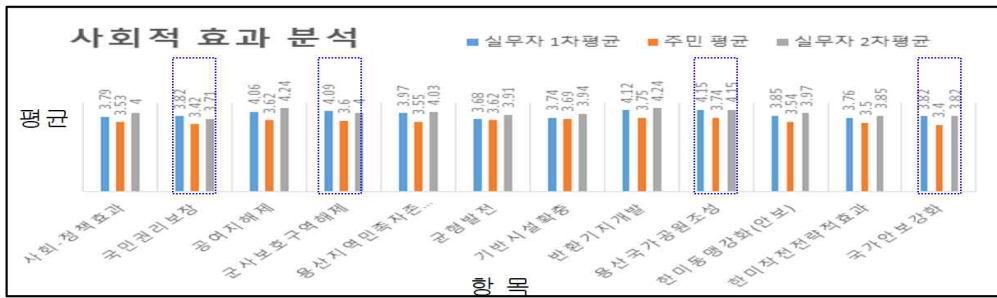


그림 31. 정책결정자(2차) 정책수혜자(주민) 사회적 효과 분석

주요 핵심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주민의 평균값이 낮아 변화가 일어난 항목은 계획된 미군기지 반환, 계획된 기지 모두반환, 용산기지 공원조성,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 항목이고, 주민보다 평균값이 높아 변화가 일어난 항목은 협정개정 우선 항목으로 전체 10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서 주민 평균값에 영향을 받았다.<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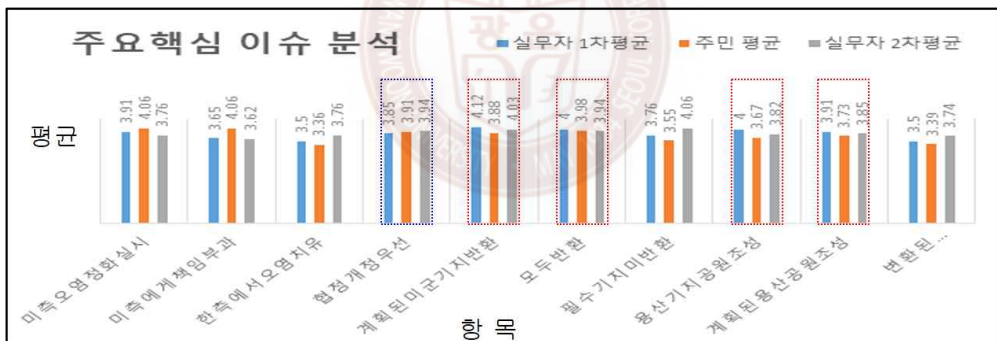


그림 32. 정책결정자(2차) 정책수혜자(주민) 핵심이슈 분석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에서 총 19개 항목 중에서 12개 항목에서, 사회적 효과에서 12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그리고 핵심이슈 10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변동하였다. 전체 41개 항목 중에서 21개 항목이 주민 의견에 따라 변동이 생긴 항목으로 나타났고, 이를 변동폭 10%로 놓고 다시 분류할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사항들을

가지고 주민과 실무자의 변동유형을 8가지로 알아보았다. 8가지 유형은 아래에서 보는 <표 71>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표 71.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변환 집단별 설문 분석

표 주민과 실무자 반응에 따른 분석 (O : 실무자, S : 주민)			
①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⑤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②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⑥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③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⑦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상) ④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⑧주민 <실무자⇒주민 <실무자(10%이내)			
유형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주요 현안
①	1-1 건설산업증가 1-2-1 환경정화사업 1-2-3 용산국가공원조성 1-5 지역경제유발 1-5-1 건설인력소비증가 1-5-2 기지운영유지소비	2 사회-정책효과 2-1 국민권리보장 2-1-1 공여지해제 2-2 균형발전 2-2-1 기반시설확충 2-2-2 반환기지개발 2-3 한미동맹강화(안보)	3-2 한측에서오염치유 4-2 필수기지미반환 5 용산기지공원조성 5-2 변환된 주택,정부기관설치
②	1 경제적 효과 1-1-1 평택기지건설 1-1-2 평택주민편익사업 1-2 생산산업사업 1-2-2 반환기지개발사업 1-4-1 미군가족동반올향상	2-1-2 군사보호구역해제 2-1-3 용산지역민족자존심회복 2-2-3 용산국가공원조성 2-3-1 한미작전전략적효과 2-3-2 국가안보강화	4 계획된미군기지반환 5-1 계획된용산공원조성
③			3 미측오염정화실시
④			3-1 미측에게책임부과
⑤			
⑥			4-1 모두반환
⑦	1-3 미건설기술흡수 1-3-1 미건설기술습득 1-3-2 국산자재세계진출 1-4 소비측면주둔여건개선 1-4-2 미시설운용유지비감소 1-5-3 지역내인구유입 1-5-4 지방세수증가		
⑧			3-3 협정개정우선

이러한 설문결과를 보면 주민과 실무자 의견이 그대로 유지된 항목 ①

②③④중에서 변동 폭이 크게 발생한 항목은 ①항목으로 주민보다 실무자의 평균이 더 높은 항목이었는데, 2차 설문 이후에도 더욱 크게 변동 폭이 발생한 항목들이다. ③항목은 주민이 실무자보다 평균이 더 높은 항목들이었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이 주민들과 다르게 더 낮아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⑤⑥⑦⑧항목은 실무자 1차 의견이 주민들의 설문결과를 확인하고 2차 의견에서 변동이 된 항목이다. 그중에서 ⑤항목은 주민 의견에 따라 실무자 의견이 10%이상 변동이 된 항목이다. 반대로 ⑦항목은 주민 의견과 달리 실무자가 반대 의견으로 10%이상 변동이 된 항목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경제적 효과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 중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변동한 ⑦항목은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낮게 나온 항목이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실무자들의 의견이 변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정책) 효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은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 효과에서는 각 항목들이 1, 2차 설문시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3월에 실시한 이후 6월에 실시하여 이때 시기 용산공원 내에 국방부로 현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 변화된 정부기관설치 항목들은 더욱 실무자들이 강하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4. 소결론

이 연구를 위해 몇 가지 가설에 대해 분석해본다. 가설에서 각 분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처음 생각한 바대로 분석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해당 정책수혜자(주민)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있어서 정책결정자(결정자)와 정책수혜자(주민) 사이에서 경제

-사회(정책)적 효과의 차이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특히, 정책결정자가 주민들이 선택한 가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았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들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정책결정자와 주민 모두 미군기지 이전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주민들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회적(정책적) 효과보다 더 강하게 선호하였고, 평택기지 건설, 평택 주민편익 사업, 용산 국가공원을 통해 유발된 경제효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건설기술 습득, 미건설기술 학습,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한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1, 2차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한 가치와도 유사한 점을 볼 때 보다 더 분명한 점으로 생각된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이 변화한 방향은 변화가 있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패턴은 다양했다. 주민의 의견을 보고 2차에서 변화가 10%이상 발생한 항목들은 전체 41개(가치항목 31개, 주요현안 10개) 항목 중에서 25개 항목이 10%이상 의견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전체 항목에서 약 61%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이 의견의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정책결정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끊임없이 받아 들여야하는 점 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한 가설들을 검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72 참조>

표 72. 설문결과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채택여부
[가설 1]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책적 효과를 우선하게 생각할 것이다. - 경제적 효과 가치 평균 3.70 < 정책사회적 효과 가치 평균 3.90	채택
[가설 2] 정책수혜자들은 정책적 효과보다 경제적 효과를 우선하게 생각할 것이다.	보류

- 경제적 효과 가치 평균 3.55 >= 정책적 사회적 효과 가치 평균3.58	
[가설 3] 정책결정자들과 정책수혜자들간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 전체 31개 항목 전 항목에서 평균 값 차이 발생	채택
[가설 7]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 가치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전체 31개 항목 중 전 항목에서 정책결정자 값의 변화 발생	채택
[가설 4]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보다 미측의 오염정화문제에 대해 SOFA 개정이나 신속한 오염치유(한측 우선치유)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 미측정화 3.91 < 정책수혜자 미측정화 4.06 - 정책결정자 한측정화 3.5 > 정책수혜자 미측정화 3.36 - 정책결정자 SOFA 개정 3.85 < 정책수혜자 SOFA개정 3.91	기각
[가설 5]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보다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받는 것보다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 모두반환 4 > 정책수혜자 모두반환 3.98 - 정책결정자 필수기지 미반환 3.76 > 정책수혜자 필수기지 미반환 3.55	채택
[가설 6]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보다 국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 공원조성 3.91 > 정책수혜자 공원조성 3.73 - 정책결정자 변환된 공원 3.5 > 정책수혜자 변환된 공원 조성 3.39	채택
[가설 8]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미측의 오염정화문제에 대해 SOFA 개정이나 신속한 오염치유(한측 우선치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변화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 미측정화 3.62 < 정책수혜자 미측정화 4.06 - 정책결정자 한측정화 3.76 > 정책수혜자 미측정화 3.36 - 정책결정자 SOFA 개정 3.94 > 정책수혜자 SOFA개정 3.91	채택
[가설 9]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받는 것보다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기지는 미반환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생각이 변화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 모두반환 (4) 3.94 < 정책수혜자 모두반환 3.98 - 정책결정자 필수기지 미반환 (3.76) 4.06 > 정책수혜자 필수기지 미반환 3.55	채택
[가설 10]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수혜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국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변화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 공원조성 3.85 > 정책수혜자 공원조성 3.73 - 정책결정자 변환된 공원 3.74 > 정책수혜자 변환된 공원 조성 3.39	채택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사이에 3회의 설문을 설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관심도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정부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차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경제적 효과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정책적) 효과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정책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화된 항목들은 전체 41개 항목 중에서 25개 항목이 10% 이상 변화를 가져와서 전체 약 61% 항목이 변화하였다.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시에는 직업적 특성, 가치관, 정책의 수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나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과 미군기지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장기 추진개념에 대한 홍보전략과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은 주민의 의견에 대해 정보 노출이 되면 정책결정자의 의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듯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획득에 대한 노력과 요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입안시 이러한 주민의 의견에 따른 정보 노출이 익숙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즉, 정보 노출에 따른 정책 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보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고, 또한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반영해야할지 정치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겠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장을 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VI. 효과적인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주민의견 고려 작성 (정부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분석 결과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기적인 보도자료(국책사업 등) 작성시 기존 보도자료 발표시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알아본 바와같이 정부 보도자료는 한미 반환의 성과 등을 위하여 SOFA합동위, 합의, 환경관련 성과 등을 보도자료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반면, 주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언론에서는 반환 지역의 수혜나 개발여부를 중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 및 보도자료는 주민의견을 고려한 작성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홍보 부족 분야 대국민 설득 강화(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경제사회적 가치 설문 분석결과)

경제사회적 가치분석 요소 3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책수혜자(주민)들은 미건설 기술 학습, 미건설 기술 습득, 국산자재세계진출 항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군기지이전사업 과정에서 한미 공동사업관리를 통하여 습득한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에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미 국방성 기준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단기간에 습득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16년에 한미건설기술발전세미나에서 이미 공유한 바가 있다. 이때, 평택기지 건설이 미 국방성 기준으로 건설되게 되어 국내 건설 기술 발

전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국민들에게 보도한 자료는 찾기 힘들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로 홍보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러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적극 홍보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때 사업추진간 국익증진을 위해 수입대상 건설자재 중 285개 품목을 국산자재로 전환하여 자재 국산화율을 77%이상 끌어올리고 예산을 1,8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39].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주민들도 인식이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정책적)효과에서는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반환된 기지는 대규모 부지를 지자체 등에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지가 건설된 곳은 도로가 확충되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철도 등의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었다. 반환기지는 이전지역 자본 유치를 통해서 옛 미군기지에 캠퍼스와 공원 등으로 개발되었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온은 대학 병원이 설립되고, 춘천 캠프 페이지나 원주 캠프 룡과 같은 곳은 공원으로 조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아래 <표 73>에서와 같이 공여로부터 반환을 거쳐 대규모 부산시민 공원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표 73. 캠프 하야리아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3. 국책사업시 설문 필요(핵심 이슈 주민 설문 분석 결과)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핵심 이슈가 되었던 3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에 대해 앞으로 정책결정시 참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책임과 관련하여 미측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항목은 주민평균이 정책결정자(1, 2차)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이는 주민들은 미측에서 오염정화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정책수혜자나 정책결정자나 모두 협정 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높다는 점은 시사하다는 바가 있다. 환경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나,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협정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반환이 계획된 미군기지에 대해서 모두 반환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모두 반환받아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여기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필수기지는 미반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책수혜자(주민)의 평균값이 낮은 의견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들은 1차에 비해 2차 질문에서 반대로 평균값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필수 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의 공감대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바 용산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수혜자들은 정책결정자들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정보 공개된 값에 따라 평균값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조성시 충분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가지 핵심 이슈로 살펴볼 때 각각 정책 추진간 주민과의 충분한 상호소통이 가능한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방법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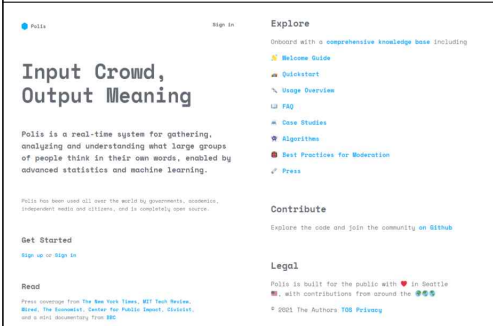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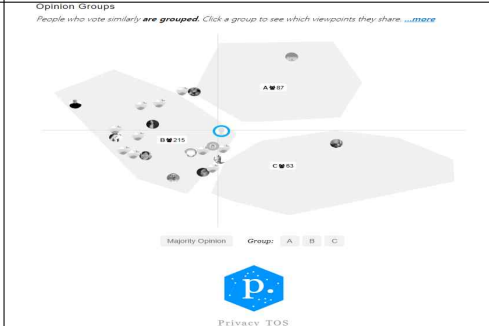
4.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국가전략으로 최고의 인공지능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시스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AI 디지털 정부의 대전환을 위한 공공부분 클라우드 도입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의사결정에서 성공적인 의사기반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은 무엇인가 플랫폼이란 어원은 ‘plat’와 ‘form’으로 구성된 ‘구획된’, ‘형태’란 의미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IT로 넘어오면서 특정 콘텐츠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의미로 나타나면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60]. 효과적인 의사표현 지원체계란 어떤 것일까 그룹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그룹 의사소통 및 집단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치과정 변화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61]. 앞서 살펴본 기지만환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을 상대로 갈등관리나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청원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청원개시하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3년 넘게 청원 게시된 글이 87만 건이 넘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8백건 넘는 글이 게시되고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관심 이슈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일 뿐 정책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부분도 있으나 첫번째 답변요구 사항처럼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같이 정책변화와 거리가 먼 요구들도 있었다. 앞서 미군기지 경제사회적 가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 정보 공개에 따라서 의견들이 변동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를 구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의사표현 지원체계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기지이전사업 초기인 2004년에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을 중심으로 실시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토의되었다. 그중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이 있었으나 이는 주민들의 대표나 참여가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이를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한 의사표현 플랫폼을 주민과 정책결정자들이 공유했다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판단해본다. 이러한 미군기지이전사업에서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생각해 보면 미군기지가 이전해가거나 이전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의사표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의사표현을 받아들이는 대상이고, 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은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공청회 등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수단이 제한된 인원으로 한정되었을 것이란 점이다. 그러면 해외 의사표현 플랫폼은 어떤지 한번 알아본다. 해외 의사표현 지원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을 살펴본 결과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전략 연구’[62]에서 세가지 도구를 제시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활용은 제한되나, 다음 제시한 도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세가지 도구는 PERSUADER, 폴리스(Polis), 코크리졸브(cogResolv)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한 것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 디딤돌로 소개한 폴리스이다. 폴리스는 개방형 대화도구로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특히 폴리스는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진술문을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응답 값은 자동적으로 분석되어 군집화되게 된다. 이러한 군집 값에서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확인하게 숙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합의하는 진술문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점차 해결하게 된다. 대만에서 ‘우버’ 도입을 폴리스를 활용하여 논쟁을 진행하였고, 2015년 7-8월에 이 이슈에 대해 직접 투표를 하였고, 이때 196개의 의견이 제출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누구나 의사표현이 가능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의사표현이 Agree/Disagree/pass 와 같은 단순 형태로 구분되어 선택하게 됨에 따라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합의하는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택시업계와 큰 마찰 없이 우버가 안착할 수 있었다. <표 74참조>

표 74. 폴리스 활용 (예시)

폴리스 입력화면	입력결과 활용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지 이전사업의 의사표현 지원체계 활용현황을 알아보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정책에 대한 알리는 내용은 국방부 국방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래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알립 형태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 내용을 캡처한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관련해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진행사항 이해나 의견 개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연구에서도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장을 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방부의 또 다른 주제인 군공항이전 사업도 살펴보았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건설당시 주변에는 주민이 거의 없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주변이 개발되면서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이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제한이 되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이전을 건의할 경우 이를 이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사이트맵에 가서 살펴본 바 사업추진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이루어 있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에서는 용산공원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용산공원으로 검색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참여하기를 통해서 토론방, 아이디어 제안방, 뉴스레터신청 등을 운용하고 있다. 토론방에는 아직 작성되어 있는 글들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구성들이 차후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제안방에서

는 2022년 9월 기준 55개의 게시물이 있었다. 그 중 조회 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은 ‘용산민족공원 내 미군기지 잔류계획을 저지시켜 주세요’였다. 아이디어 제안에서 정책제언에 가까운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나 의사표현 수단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위한 신청란이 있었는데 이는 용산공원 소식지 등을 받아보는 신청란이다. 용산공원은 나름 사이트에 구성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피드백이 부족하여 이를 작성자나 주민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용산공원은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자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하리라 생각한다.

문제인 정부시기 국민청원은 2017년에 도입되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워더피플 등을 참고하여 청원게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및 정부 책임자가 답하도록 하였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된 3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청원 게시된 글은 총 878,690건이다. 하루 평균 약 817건 글이 게시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1만 4,464명이다[59].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이 그동안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발산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청원형태로 이루어진 국민청원은 어떠한 사항들인지 2018년 10월 12일까지 국민 동의 20만건을 달성한 청원글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행정예의 시민참여 활성화 연구[63]를 통해서 알아보면 약 50여개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들로 첫번째 답변이 이루어진 항목은 2017년 9월 3일 청원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2017년 9월 25일에 답변되었다[63]. 하지만 당시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답변하였고, 또한 소년법에 대한

법 제정 및 개정은 입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18년 3월 13일 정부 개헌안의 통과 청원과 같은 항목은 2018년 5월 2일에 답변하였다. 당시 해당 청원은 참여인원이 304,320명으로 청원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을 ‘약속을 못지켜 송구’하다였다. 이러한 청원들을 국민청원의 동의로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참여에 대한 도표화를 시켰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국민청원은 2022년 5월 9일 오전 12시에 종료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청원은 최종 111만건의 누적 청원 게시글과 5억 1,600만명의 청원 게시판 방문기록, 그리고 2억 3,000만명의 동의참여 국민들을 이끌어냈다. 일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항목들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같은 항목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와 같은 항목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 개정 등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20만 동의를 넘긴 국민청원은 285건에 달했다. 국민동의 1위와 2위는 텔레그램 n번방관련 사항이었다. 3, 4, 5위는 모두 정치이슈로 정당 해산신청과 대통령 응원과 탄핵 촉구였다. 분명 청원이 주는 제도적 과제들과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참여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청원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고, 청와대가 지지층을 직접 동원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다[59].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는 의견을 표출하고 교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측면을 주의 깊게 보고 싶다. 2017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 청원 페이지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토대로 대통령에 직접 청원하는 온라인 제도를 계획한 것이다. 이 시기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없었는가

살펴보면 다양한 다른 플랫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청원들을 처리해 왔다. 국민들의 정책참여 요청에 대한 참여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고, 특히,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갖춰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주민 또는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숙의과정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가깝게는 대통령실 이전, 용산공원 조성, 군공항 이전, 미군기지 반환, 반환기지 환경정화 주체 등 수많은 현안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시기인 것 같다. 여기에서는 정책결정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설문과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간 의사결정 지표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참여하고 조정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과정과 유사한 시스템은 폴리스라고 보고 있다. 물론 우리 국민청원과 같은 형태도 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노출정도가 낮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구체적인 의사결정 플랫폼은 어떤 형태가 좋을지 알아본다. 앞에서 언급한 의사결정 플랫폼을 이야기한 논문으로 ‘공공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오픈 플랫폼 UI 디자인 사례 연구’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화형은 현재와 미래가치 모두 추천되는 유형으로 현재 사고공유 요소에 뚜렷한 강점을 보인다라고 제시하고 있다[60]. 여기에서는 집단지성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플랫폼의 특징에 맞도록 취합, 경

연, 협업, 투표를 분석기준으로 생각하였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국회톡톡, 크레이지 파트, 나는 정치다 세 가지 모두 일정기간 운용 후 폐쇄된 사이트처럼 보인다. 그럼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의 다른 형태는 알 수 없는지 좀 더 알아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오픈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먼저 의사소통 지원체계로 소개한 ‘국민청원’, ‘용산공원’, 국민제안 형태의 오픈 플랫폼을 형태의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플랫폼의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의사표현 입장에서 플랫폼의 발전방안을 제언해 본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언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주민)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의사표현 플랫폼에서 발전방안으로 아래<표 75>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필요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75. 의사 표현 지원체계의 발전방안 제언

구분	발전방안 분석	구성요소
국책사업 추진	-국책사업에 있어 사업초기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수 임	주민 수용성
보도자료에 대한 주민 신문기사	-정책결정자의 사업성과 제시라는 의도와 다르게 정책수혜자는 지역의 개발이나 혜택에 대해 관심을 표명	정부 홍보수단 적절성 (주민 혜택, 이익 등)
주요가치에 대한 설문분석	- 주민과 정책결정자 사이에는 관심사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정보노출에 따라 주민의사 수용이 가능함	정보 투명성 (정보공개 등)
의사표현 활용	-주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접근이 어렵거나, 정책결정자의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체계가 필요	주민 접근성 /편의성

VII. 결 론

1. 결론 및 제언

주한미군기지 공여 및 반환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해본 결과 병력의 수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 변화해 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여 면적과 기지는 변화해 왔다. 결정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근간이 되는 YRP/LPP 협정에 의해 대규모 기지반환과 새로운 기지의 공여가 이루어졌다. 보도자료와 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자기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결정자들은 한미동맹강화와 국토균형 발전 차원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은 경제혜택과 국민권리보장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시 국민권리측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활용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한미군 사회경제적 가치요소는 정책차원과 사업차원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세부분류사항에 따라 국민설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립한 결과로 알아보았다. 두 그룹의 의식차가 발생하였고, 의식차는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정책수혜자는 정책결정자보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더욱 강하게 선호하였고, 정책수혜자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미건설기술 습득이나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에 따라 의견이 변동(약 10%이상 인원 변동)한 항목이 61%로 볼 때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의사표현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의사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주민 수용성, 정부 홍보수단 적절성(주민 혜택, 이익 등), 정보 투명성(정보 제공 등),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대구지역 미군기지 및 군 기지 통합이전 등 미군기지이전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사업에서도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활용한 갈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대구, 수원, 광주 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용산기지(용산민족공원) 조성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갈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가 제안한 정책수혜자(주민)과의 소통이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기지반환 보도자료와 관련된 정책기사를 기준으로 분석하다보니 미군 기지관련 기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보다 더 보편적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전·반환·활용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도자료에 따른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서 폭넓은 분석을 통해서 미군기지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해 본다면 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미군관련 정책지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미군기지 반환에 더해 이전·활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운용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현재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제안을 통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활용하여야겠다.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별도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활용방안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토록 반영하는 것을 법제화 또는 제도화하는 필요하겠다. 연구자 또한 국책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야한다.

VIII. 참고문헌

[단행본, 법규 및 정책연구]

- [1]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역사」. 2015
- [2] 국방부. 「국방백서」
- [3]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 MAG」.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4] 김일영·조성열.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서울:한울아카데미, 2003
- [5] 유종상, 「정책집행과 갈등관리-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9
- [6] 데이비드 바인. 「기지국가」. 갈마바람, 2015

[논문]

- [1] S. Hrg, 115-800 -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ited State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Region, P.12, January 30, 2018
- [2] 신상미, “통합문화이용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5
- [3] 정은영 성석주 최기봉, “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제1호, 207~232. 2009
- [4] 이동관, “한국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정책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인식 차이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5] 김영삼,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 2002-01, 2002
- [6] 황재홍, “주한미군 공사 수행을 위한 FED(Far East District) 프로세스 분석에 관한 연구”, 2010
- [7] 윤호빈,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FED공사의 리스크 요인이 사업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
- [8] 김용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2019
- [9] 박성완,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현물지원 시설사업계약에 대한 소고”, 2019
- [10] 이도제, “군사시설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8
- [11] 이경환,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지연요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방안”, 2013
- [12] 이수형 외 ,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2004
- [13] 박민형,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전략”, 2021
- [14] 이균철, “駐韓美軍基地 移轉 協商에 관한 研究”, 2011
- [15] 우정범 외,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한미 간 쟁점, 해소 과정, 시사점”, 2020
- [16]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1997
- [17] 박기주,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피해에 관한 고찰”, 2009

- [18] 박용하 외,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환경관리 정책”, 2017
- [19] 이남석,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의 영향”, 2020
- [20] 강채영,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연구”, 2021
- [21] 박상진, & 김형규,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미군기지이전이 도시 인구와 산업에 미친 영향”, 도시정책연구, 11(3), 21-38. 2020
- [22] 이종길, “전투스트레스가 지상 전투원의 전투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
- [23] 김지현, “원자력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원자력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빅카인즈 서비스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20
- [24] 윤기혁, “텍스트 마이닝과 빅카인즈를 활용한 노인장기 요양기관 부당청구 동향분석”, 2022
- [25] 양연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분석”, 2021
- [26] 김일영 & 조성렬, “주한 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p.35, 2003
- [27] M. S. Gallocchio, “The Best Defence is a Good Offense: Evolution of American Strategie in East Asia”, W. I. Cohen and A.Iriye(eds.). The Great Power in East Asia, 1953-1960,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pp.65-67. 2000
- [28] 김종필, “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 서울: 연세대행정대학원. p.15, 2000

- [29] 육중관, “한미 동맹관계 변화가 한국군의 군사력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8-214, 2021
- [30] 안문석,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23(4), 79, 2018
- [31] 김영일, “주한미군기지 역사(반환기지를 中心으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p. 8, 2015
- [32]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한양대학교, 2016
- [33] 김명기, “國際法上 駐韓美軍의 駐屯根據와 地位에 관한 史的 考察”, 사회과학논총, 10, 1-19, 1995
- [34] George, M, “US military bases and empire. Monthly Review”, 53(10), 1, 2002
- [35] 유범동,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16, 2022
- [36] 황재홍, 함남혁, 김제혁, & 김재준, “주한미군공사 수행을 위한 FED (Far East District) 프로세스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10(1), 163-173, 2010
- [37] US Department of Defense, Press Release, May 28, 2021; GlobalSecurity.org, May 28, 2021; Voice of America, May 28, 2021.
- [38] 데이비드 바인, 기지국가, 287-292, 2017
- [39] Baek, M. C., & Yun, Y. D.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종합사업관리 소개”,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3), 3-7, 2019
- [40] 강소영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KIDA, 2021

- [41] 송윤목,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 60-61, 2008
- [42] 김홍렬, “용산국가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모형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p.1, 2018
- [43]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수립확정, 국토부 보도자료, 2021.12.24
- [44] 정다운 & 김홍순,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식 조사”, 서울시연구, 10(2), 125, 2009
- [45] 유종상, “정책집행과 갈등관리-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9
- [46] 서병호 & 김춘식, “정부의 대언론 홍보에 대한 연구 -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2): 216-249, 2001
- [47] 전은수, 오승훈, & 조영목,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코로나 관련 언론 키워드 분석”. 보건학논집, 59(1), 1-11, 2022
- [48] 김연성. “코로나 19 (COVID-19) 에 따른 OTT 서비스 관련 언론사 뉴스 기사 비교 분석: 빅카인즈 (Bigkinds) 시스템을 중심으로 (2019 년 Vs. 2020 년)”. 기업과혁신연구, 44(1), 3-18, 2021
- [49] 김혜진, “뉴스 비정형 데이터 수집과 토픽분석(LDA)을 통한 성범죄 치안 이슈의 효율적 탐색”, 한국범죄학, 14(1), 2020
- [50] Blei, D. M., & Lafferty, J. D. “A correlated topic model of science”, The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1(1): 17-35, 2007
- [51] 양연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분석”, 지방행정연구. 35(2). 159-188, 2021
- [52] 온누리, 손민수 & 김홍석, “권역별 용산공원 조성의 환경편익 추정”, p.2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 [5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2008
- [54] 우정범 & 권남연, “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과 향후과제”, KIDA, 2019
- [55] 홍석훈, “인공지능 기반 사회를 대비한 미국의 AI 전략과 정책”, p203, 221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4호, 통일연구원, 2021
- [56] 김현정,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EU의 전략과 정책”, p255,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4호, 동아대학교, 2021
- [57] 이기완,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현황과 전략”, p249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4호, 창원대학교, 2021
- [58] 김송죽,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한국의 현황과 전략”, p171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4호, 청주대학교, 2021
- [59] 윤형석,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p 99, 2021
- [60] 박현지, 구유리,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에 관한 연구-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를 중심으로-”, P.7-8, 2018
- [61] 손현주, “ 인공지능 혁명과 정치의 미래 시나리오”. 지역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61. (2020)
- [62] 은종환, 김광구, & 이선우,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전략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4(2), 193-222, 2020
- [63] 이성복, “행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19.2

부록 1-1 주민 / 정책결정자(1차) 설문지

□ 미군기지이전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사업차원)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건설산업추진 사업효과 *건설비 집행에 따른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	①	②	③	④	⑤
1-1-1 평택기지 건설사업 효과 *2010년주한미군기지건설비는75조추산	①	②	③	④	⑤
1-1-2 평택주민 편의시설사업 효과 *2010년주한미군기지편의시설비는136조추산	①	②	③	④	⑤
1-2 생산산업추진 사업효과 *기지 환경정화 개발 반환기지 개발 등에 따른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	①	②	③	④	⑤
1-2-1 반환기지 환경정화 사업 효과 *오염반환지오염정리를 통한 고용증가	①	②	③	④	⑤
1-2-2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효과 *반환기지의개발을 통한 생산 및 고용증가	①	②	③	④	⑤
1-2-3 용산 국가공원 조성사업 효과 *용산공원조성을 통한 생산 및 고용증가	①	②	③	④	⑤
1-3 美 건설기술 학습효과.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 국방성 기준을 적용하면서 미국 건설기술 습득	①	②	③	④	⑤
1-3-1 미국 건설기술 습득 효과 *미국방성기준의공사요건을통해기술습득	①	②	③	④	⑤
1-3-2 국산자재 세계시장 진출여건 확대 효과 *수입자재중 28개 품목을 국산자재로 전환 자재 국산율을 77% 달성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4 소비측면 주둔여건개선 측면의 효과 * 가족동반 3년까지 근무제도 등을 발전시키고 있고, 통합으로 유지비용 감소	①	②	③	④	⑤
1-4-1 미군가족 동반을 향상 효과 *주둔여건 개선으로 가족 동반 3년까지 근무제도 발전시키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1-4-2 美시설운영 유지비 감소 효과 *평택 등으로 통합이전에 따른 시설운영 유지 소요 감소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경제 유발효과 * 공사 참여로 고용증가, 체류비용, 유동비용 증가로 이어짐	①	②	③	④	⑤
1-5-1 건설인력 고용-체류 유동 소비증가 효과 *공사를 위한 고용증가와 공사참여를 위한 체류 비용 공사참여인구의 유동비용 등이 증가	①	②	③	④	⑤
1-5-2 기지운영 유지 및 지역내 소비 효과 *평택 등으로 이전에 기지운영 비용 및 지역내 소비 증가 효과	①	②	③	④	⑤
1-5-3 지역내 인구유입 효과 *기반시설확충등지역발전을 통한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지역내 고용 및 소비증가	①	②	③	④	⑤
1-5-4 지방세수 증가 효과 *지역내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내 세수 증가효과가 발생함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2. 사회적(정책차원)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국민권리 보장효과 * 미측에게 공여해준 공여지역에 대한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수도 서울 중심지에 대한 민족 자긍심을 회복 계기	①	②	③	④	⑤
2-1-1 대규모 공여지 해제 효과 *177.6km ² 공여지 해제	①	②	③	④	⑤
2-1-2 안전지역권(군사보호구역) 해제 효과 *2.4km ² 군사보호구역 해제	①	②	③	④	⑤
2-1-3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 *서울 중심지에 대한 국가공원 조성으로 용산 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	①	②	③	④	⑤
2-2 균형발전 효과 * 기지건설로 인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반환기지 개발로 이천지역 자본유치가 가능하고 용산공원 조성	①	②	③	④	⑤
2-2-1 기반시설 확충 효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철도등 기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2-2-2 반환기지 개발 효과 *옛 미군기지에 대학 캠퍼스나 공원으로 조성	①	②	③	④	⑤
2-2-3 용산 국가공원 조성 효과 *용산지역에 국가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	①	②	③	④	⑤
2-3 한미동맹 강화(안보) 효과 *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와 인접한 지역에 미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	①	②	③	④	⑤
2-3-1 韓美 작전·전략적 효과 *한미 연합 대북태세 및 대북 억제력 향상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2-3-2 국가안보 강화 효과 *평택기지 중심으로 기반시설인 철도, 도로를 통하여 전방지역으로 신속한 전력 전개가 가능	①	②	③	④	⑤

□ 미군반환기지관련 쟁점현안(오염정화, 기지반환, 용산공원)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3. 주한미군기지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반환협상을 통하여 미측에게 끝까지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한측에서 먼저 미군기지 오염치유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오염정화보다는 SOFA 또는 협정개정을 먼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한미군기지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받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 기지는 미반환하고 미군을 잔류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2 정책결정자(2차) 설문지

□ 미군기지이전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사업차원) 효과가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주민 평균값	② 3.66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4.21
1-1 건설산업측면 사업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주민 평균값	② 3.75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4.32
1-1-1 평택기지 건설사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82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4.12
1-1-2 평택주민 편의시설사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78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82
1-2 생산산업측면 사업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주민 평균값	② 3.58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94
1-2-1 반환기지 환경정화 사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40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41
1-2-2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주민 평균값	② 3.74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4.24
1-2-3 용산 국가공원 조성사업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주민 평균값	② 3.78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4.18
1-3 美 건설기술 학습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21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06
1-3-1 미국 건설기술 습득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12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2.97
1-3-2 국산차량 세계시장 진출여건 확대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45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12
1-4 소비측면 주둔여건개선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53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50
1-4-1 미군가족 동반을 향상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49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50
1-4-2 美시설운영 유지비 감소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53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47
1-5 지역경제 유발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주민 평균값	② 3.59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97
1-5-1 건설인력 고용채류 유동 소비증가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59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79
1-5-2 가지운영 유지 및 지역내 소비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56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74
1-5-3 지역내 인구유입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51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47
1-5-4 지방세수 증가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주민 평균값	② 3.40	③	④ 실무자 평균값	⑤ 3.38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사회적(정책차원) 효과가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3			실무자 평균값 3.79	
2-1 국민권리 보장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2			실무자 평균값 3.82	
2-1-1 대규모 공여지 해제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2			실무자 평균값 4.06	
2-1-2 안전지역권(군사보호구역) 해제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0			실무자 평균값 4.09	
2-1-3 용산지역 민족 자존심 회복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5			실무자 평균값 3.97	
2-2 균형발전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2			실무자 평균값 3.69	
2-2-1 기반시설 확충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9			실무자 평균값 3.62	
2-2-2 반환기지 개발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5			실무자 평균값 4.12	
2-2-3 용산 국가공원 조성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4			실무자 평균값 4.15	
2-3 한미동맹 강화(안보)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4			실무자 평균값 3.85	
2-3-1 韓美 작전·전략적 효과 있다. * 주민과 정부실무자가 유사한 응답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0			실무자 평균값 3.76	
2-3-2 국가안보 강화 효과 있다. * 정부실무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40			실무자 평균값 3.82	

□ 미군반환기지관련 쟁점현안(오염정화, 기지반환, 용산공원)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주한미군기지반환시 미측이 오염정화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주민이 정부관계자보다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4.06			실무자 값 3.91	
3-1 반환협상을 통하여 미측에게 끝까지 오염정화 책임 을 받아야한다. * 주민이 정부관계자보다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4.06			실무자 값 3.65	
3-2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한측에서 먼저 미군기지 오염치유 를 해야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36		실무자 평균값 3.50		
3-3 오염정화보다는 SOFA 또는 협정개정을 먼저하여 책임 을 분명히 해야한다. * 주민이 정부관계자보다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91		실무자 평균값 3.85		
4. 주한미군기지반환시 계획되어 있는 미군 기지는 모두 받아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88		실무자 평균값 4.12		
4-1 계획되어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끝까지 반환 받도록 해야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98		실무자 평균값 4.00		
4-2 대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 기지는 미반환 하고 미군을 잔류 시켜야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55		실무자 평균값 3.76		
5.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 해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67		실무자 평균값 4.00		
5-1 계획되어 있는 용산공원으로 조성 해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73		실무자 평균값 3.91		
5-2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정부기관 설치 등 변화 를 받아 들여야 한다. * 정부관계자가 주민보다 더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주민 평균값 3.39		실무자 평균값 3.50		